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
— 최종보고서—

2018.12.

제 출 문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본 보고서를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장애파트너스 그룹
연구책임자 장현선

연구진

연구책임자

장현선 (주)장애파트너스그룹 대표

공동연구원

옥경인 (주)장애파트너스그룹 수석연구원

윤혜란 (주)장애파트너스그룹 수석연구원

연구보조원

김다현 (주)장애파트너스그룹 선임연구원

최수경 (주)장애파트너스그룹 연구원

연구기획

고윤정 부산문화재단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처: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주 소: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감만동)

홈페이지: www.bscf.or.kr

I. 서 론

- 1. 조사 목적 및 내용 3
- 2. 조사 운영 체계 7

II. 선행연구 검토 및 부산 현황 분석

- 1. 문화다양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3
- 2. 부산시 현황 분석 20

III. 부산 문화다양성 설문 지표개발 과정

- 1. 부산시 문화다양성 설문 지표개발 원칙 53
- 2. 설문 지표개발 단계 37
- 3. 선행연구 검토 및 자문위원 구성 8
- 4. 1차 자문위원 회의 40
- 5. 2차 자문위원 회의 48
- 6. 조사 수행 방법 46

IV. 부산 문화다양성 설문조사 결과분석

1. 부산 문화다양성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5
2. 문화다양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	3
3. 소수집단 접촉 경험	5
4. 소수집단 활동 경험	6
5. 소수집단 차별에 대한 인식	6
6. 소수집단 수용 의향	7
7. 사회갈등 현상에 대한 인식	8
8. 사회갈등 현상 개선 필요도	9

V. 부산 문화다양성 관계자 인터뷰 결과분석

1. 결혼이주민 활동가 인터뷰 결과	15
2. 이주민 활동가 인터뷰 결과	110
3. 청년 활동가 인터뷰 결과	115
4. 장애인 활동가 인터뷰 결과	119
5. 여성 활동가 인터뷰 결과	123
6. 여성 연구자 인터뷰 결과	127
7. 성 소수자 활동가 인터뷰 결과	129

VI. 결론 및 제언

1.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개요	135
2.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론	135
3. 부산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언	138

I. 서론

1. 조사 목적 및 내용
2. 조사 운영 체계

I 서론

1. 조사 목적 및 내용

1.1. 조사 목적

- 부산문화재단은 2012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무지개 다리사업(국고)을 7년간 진행 중임.
- 2018년 무지개다리사업 수행 8년차를 맞은 부산문화재단은 2017년 제정된 부산시 문화다양성 조례에 기반을 두고 부산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부산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운영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2017)¹⁾ 제3조(시의 책무)

-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를 통해 부산의 문화다양성 수준을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부산시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함.

1. 부산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수립

2. 부산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에 따른 인구구조 특징 파악

3. 부산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에 따른 부산시 여건 현황 파악

4. 부산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에 따른 부산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수준 파악

5. 향후 부산시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 방향 제시

[그림 I-1] 부산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목적

1) 출처: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1.2. 조사 범위 및 내용

- 본 조사는 부산광역시의 문화다양성 여건 현황과 인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로, 이를 위해 ① 부산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수립, ② 부산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에 따른 인구구조 특징 파악, ③ 부산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에 따른 부산시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및 ④ 여건현황 파악, ⑤ 향후 부산시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함.

□ 이에 따른 조사 범위는 다음과 같음.

조사 목적	상세 내용	조사 범위
1. 부산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수립	국내외 기준의 공통성과 부산시의 특징을 반영	선행연구 검토 및 자문회의
2. 부산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에 따른 인구구조 특징 파악	전국 및 지자체 대비 등 부산시 특징 비교분석	문헌조사
3. 부산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에 따른 부산시 여건 현황 파악	부산시 정책 및 사회기반 여건 반영	부산시 관계자 인터뷰
4. 부산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에 따른 부산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수준 파악	부산시민 및 부산 내 소수자들의 의견 반영	부산시민 설문조사
5. 향후 부산시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 방향 제시	인구구조·정책·여건·인식 수준간의 차이 확인, 우선순위 결정	조사 내용 종합, 자문회의

[그림 I-2] 부산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목적에 따른 조사 범위

- 부산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지표구성 체계를 참고함. 정책, 여건, 활동, 인식지표 중 여건지표와 인식지표 2개 대분류를 활용함.
- 정책지표는 전국 비교시 유용한 자료로, 전국 기준의 자료 수집을 부산시에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현재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사업담당자의 인식수준에 따라 정책지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바, 본 조사에서는 제외함.
 - 활동지표는 소수집단의 문화향유활동 및 하위·비주류예술가들의 창조활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소수집단에 대한 분류체계 및 그에 따른 인구구조·여건 등이 확정된 이후 진행 가능하므로 본 조사에서는 제외함.

- 분류체계에 따라 부산시 문화다양성의 여건과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내용구성은 문화체육관광부(2017)의 ‘문화다양성 정책 및 발전방안 연구’와 함께 인천시(2017년) 및 광주시(2016년)의 조사를 참고하였으며, 자문회의를 거쳐 부산광역시의 지역 특징을 반영하여 부산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를 구성함. 상세한 분류체계 도출은 제3장을 참고하기 바람.

<표 I-1> 2018 부산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분류체계

대분류	세부분류		내용구성
소수자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 복지법)
	인종	외국인근로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결혼이주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주민의 자녀	결혼이주민의 자녀
		난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난민법)
		유학생	외국 국적을 가졌으나 학업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 소재 학교에 다니는 자
	성소수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자 (국가법령정보센터)
북한 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갈등	성별 불평등		성별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거나 평등하지 않은 상태
	세대 간 갈등		연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견 충돌 등의 갈등
	소득 차이로 인한 갈등		소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견 충돌 등의 갈등
	타 지역 출신과의 갈등		부산과 부산 외 지역 출신 간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방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
	이주민에 의한 갈등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외 국적을 가진 외국인과의 갈등

- 부산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에 따른 인구구조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 및 행정협조를 통해 다음의 3가지 관점에서 부산시 인구구조의 특징을 파악하여 부산시 문화다양성의 기초 구조를 확인함.

－ 첫째, 전국평균대비 부산시 인구구조의 특징 파악

- 둘째, 17개 지자체대비 부산시 인구구조의 특징 파악
- 셋째, 부산시 행정구역(예. 구별)별 인구구조의 특징 파악
- 단, 인구구조 분석시 통계청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불법체류자, 성소수자 등)의 경우,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표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추산하거나 관련 활동가의 예측치를 정성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병행함.
- 부산시 문화다양성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문화다양성 지표를 활용하여 지표를 설계하고, 부산시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구구조의 특징을 반영한 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함.
- 부산시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여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8개 분야 중 우선순위 분야 4개를 선별하여 공공 및 민간기관/활동가 8명을 대상으로 여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함.
 - 공공 관련 주무관/연구원 인터뷰를 통해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지원 내용과 공공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장 활동 내용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
 - 분야별 민간기관/활동가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 등 전반적인 상황과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지원에 대한 인식, 의견 등
- 부산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수준과 부산시의 여건 현황 파악한 결과를 종합하여 인구구조·정책·여건·시민 인식수준 간의 차이를 확인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향후 부산시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 방향 제시

2. 조사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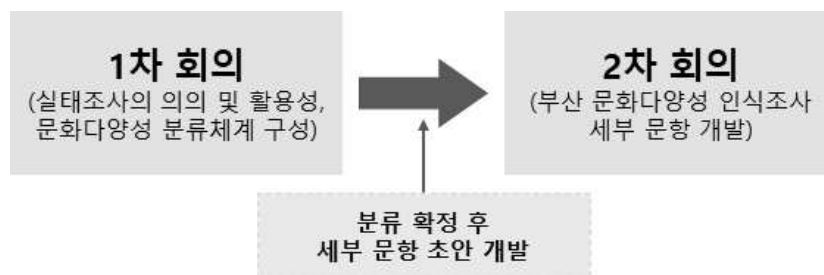
[그림 I-1] 조사 운영 체계

2.1. 문헌분석 운영 방안

- 부산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와 지표를 설계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화다양성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함.
- 해외조사에 대한 사전자료 분석을 통해 국제 비교가 가능한 조사 설계를 시행하였음.
 - 세계 8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각종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Worlds Value Survey(WVS)를 활용하여 앞서 분석한 해외문헌에서 언급되지 않은 세부 계층(소수집단)에 대한 국제비교에 활용
- 전국기준 문화다양성 지수 산출 조사와 더불어 인천시 및 광주시의 지역별 문화다양성 지수 산출 및 이에 대한 분석, 전략적 도출을 분석하여 부산시에 맞는 문화다양성 분류체계를 확정하고, 지수 산출 및 활용 방식을 도출함.

- 문화체육관광부(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전국단위 조사)
- 광주문화재단(2016). 광주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역단위 조사)
- 인천발전연구원(2017).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연구. (지역단위 조사, 지표개발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전략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전국단위 조사)

2.1.1. 자문회의 운영방안



[그림 I-2] 자문회의 운영 과정

- 부산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및 지표 개발을 위하여 2차례의 자문회의를 진행함.
- 전문가 구성은 부산 문화다양성에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는 전문가로 부산문화재단과 협의하여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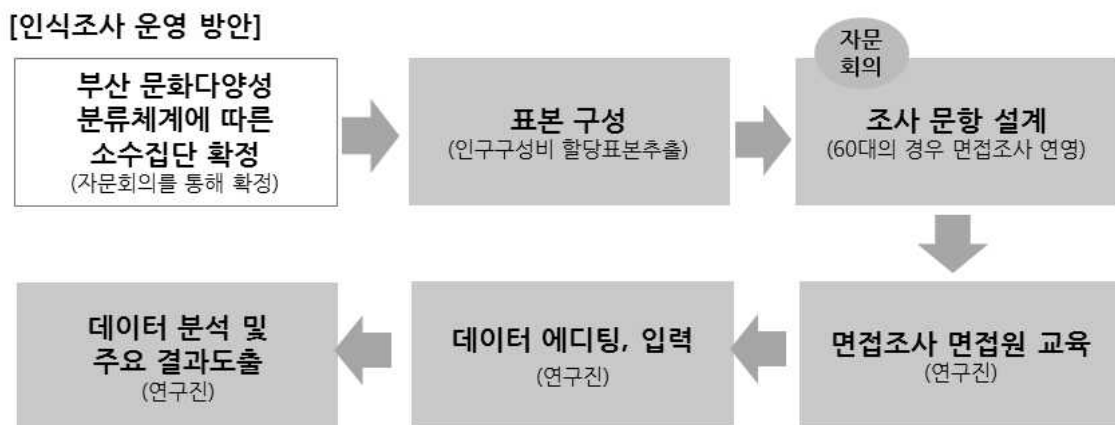
<표 I-2> 전문가 자문회의 참여 연구원 명단

소속	직급	이름	주력분야	자문회의 참석 여부	
				1차	2차
부산연구원	박사	윤지영	문화지표	O	O
부산복지개발원	책임연구위원	이재정	고령화	O	X
부산대학교	박사	석영미	장애인	O	O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장	홍미영	여성	O	X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문재원	이주, 다문화	O	X (서면자문)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실장	송교성	예술정책	O	O

- 1차 자문회의는 해외문헌 및 국내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부산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의의에 대한 재정리 및 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부산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에 대해 논의함.

- 1차 자문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분류체계와 설문지표를 바탕으로 2차 자문회의를 진행하여 부산 문화다양성 지표의 세부 항목의 내용적 타당도를 높임.
- 2차 자문회의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건 및 실태조사를 수행한 후, 도출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과 이에 따른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사후회의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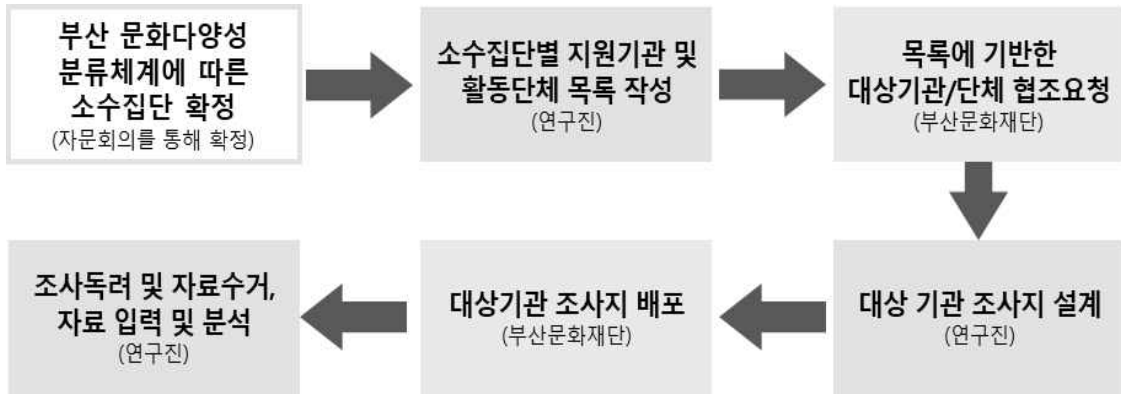
2.1.2. 부산시민 실태조사 운영방안 (인식조사)



[그림 I-3] 인식조사 운영 과정

- 부산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는 부산시민의 소수자와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는 조사로, 부산시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 통계청 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구 구성비를 반영한 할당표본추출을 진행함.
 - 단, 본 연구는 다수자의 인식에 관한 조사로 소수자의 문화향유활동 및 창조활동(예술가 집단) 대상 조사는 본 연구에서 제외됨.
- 10대에서 50대까지는 조사의 효율성이 높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의 경우 면접원을 활용한 대인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함.
 - 온라인 조사 진행 결과, 부족한 연령대는 대인면접조사를 통해 성·연령·권역별 비율의 균형을 맞춤.

2.1.3. 부산시 문화다양성 관계자 인터뷰 운영방안



[그림 I-4] 여건조사 운영 과정

- 부산시 문화다양성 관계자 인터뷰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실제 부산시 문화다양성 활동 및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전체 8개 분야 중 우선순위 4개 분야를 선별하여 공공 및 민간기관/활동가 총 5명을 대상으로 부산시 문화다양성 여건 현황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함.
 - 공공 관련 연구원 인터뷰를 통해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지원 내용과 공공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장 활동 내용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함.
 - 분야별 민간기관/활동가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 등 전반적인 상황과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지원에 대한 인식, 의견 등을 확인함.

<표 I-3> 부산시 문화다양성 여건조사 인터뷰 대상

분야		인터뷰 대상
장애인		김정미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장
인종	외국인 근로자	작드허르러 몽골공동체 총무
	결혼이주민	
	이주민의 자녀	
	난민	
	유학생	
성 소수자		김이해 퀴어 활동가 변정희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상임이사 홍미영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장
청년		박진명 부산청년들 대표

Ⅱ. 이론적 배경

1. 문화다양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2. 부산시 현황 분석

II 이론적 배경

1. 문화다양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1.1. 문화다양성 관련 국내 연구

-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 중 본 연구에서 참고한 연구는 다음과 같음.

<표 II-1> 문화다양성 관련 국내 문헌 목록

시행처	연도	연구명	비고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전국단위 조사
광주문화재단	2016년	광주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역 단위 조사
인천발전연구원	2017년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연구	지역 단위, 지표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년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전략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전국단위 조사

1.1.1. 문화체육관광부(2015)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5년 진행한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는 2014년 의결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의 문화다양성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국제적 기준에 준거하여 진단함.
- 문화체육관광부(2015)의 조사대상은 한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데 가장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11개 집단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됨.
- 다문화 이주민, 북한 이탈주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노인, 전통문화, 지방문화, 독립문화예술, 대안문화예술
 - 단, 실제 소수자 설문조사에서는 북한 이탈주민 집단에 대신 조사표본을 찾기 어려워 활동지표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함.
- 앞서 설정한 11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지표, 여건지표, 활동지표, 인식지표 등 4개 조사영역으로 분류하여 지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정책지표와 여건지표는 지자체 행정자료 수집

을 통하여, 활동지표는 소수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인식조사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진행됨.

<표 II-2> 문화다양성 지표 및 지표별 조사방법

대분류 지표	중분류 지표	조사방법
정책지표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	지자체 행정자료 수집
여건지표	기반시설여건, 자원여건, 지원인력여건	
활동지표	참여도, 친밀도, 만족도, 포용도, 평등도	소수자 설문조사
인식지표	참여도, 친밀도, 만족도, 포용도, 평등도	대국민 설문조사

- 소수자 설문조사로 진행된 활동지표는 북한 이탈주민을 제외한 10개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1,030개 표본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문화다양성 인식지표는 대한민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됨.
- 설문조사는 모두 구조화된 설문지(5점 척도)로 진행되었으며, 활동지표는 1:1 면접조사를 주로 진행하되 여건에 따라 Web Survey나 E-mail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인식지표는 Web Survey로 진행되었음.
- 문화다양성 활동지표 평균점수는 3.02점으로, 5개 세부지표 중 포용도가 3.6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평등도(3.53점), 친밀도(3.25점) 순으로 나타남. 반면 참여도(2.15점) 과 만족도(2.53점)는 평균 이하로 소수자들의 문화예술 활동기회 확보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질적 수준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평균점수는 2.57점으로, 5개 세부지표 중 필요도가 2.9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친밀도(2.73점), 수용도(2.69점) 순으로 나타남. 반면 배제도(2.25점)과 차별도(2.27점)는 평균 이하로 나타나 소외계층을 지원하며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인식에는 동의 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소수자를 수용하고 포용하려는 인식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1.1.2. 광주문화재단(2016)

- 광주문화재단에서는 광주광역시 차원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시민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2016년 실시함.
-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5점 척도)를 활용한 면접조사로, 문화다양성·사회적 소수자·비주류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문

화다양성 정책, 개인의 성향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 5개 항목을 조사함.

- 광주문화재단(201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를 다문화 이주민, 북한 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노인으로 분류하였으며, 비주류문화는 전통문화, 지역문화, 독립문화예술, 대안문화예술로 분류함.

-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 내용을 보완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문화다양성 전문가 조사를 추가로 시행함. 조사대상은 다문화·이주민, 정책일반, 여성, 북한 이탈주민, 독립문화예술, 전통·지역문화, 장애인, 대안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16명이 참가함.
- 조사 결과, 시민과 전문가 모두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용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시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3.03점으로 높지 않음. 따라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 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및 태도는 문화예술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은(3.48점) 있으나,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정도가 낮게 나타남(3.08점). 따라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나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결과, 성 소수자를 제외한 국적, 종교, 연령,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 태도를 보여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먼저 필요함.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수용도는 알고 지내는 사이, 이웃 관계, 직장 동료까지는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를 보이나 가족관계가 되는 것에서는 수용도가 낮음. 특히, 북한 이탈주민이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임.
- 인구통계적 특성 및 개인의 성향에 따라 문화다양성 인식 차이를 확인한 결과, 정치성향이 진보일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문화다양성과 관련 활동과 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전반적으로 문화다양성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남.

1.1.3. 인천발전연구원(2017)

- 인천광역시 2016년 「인천비전 2050」 과 문화주권 「문화성시 인천」 의 실행과제로 ‘문화다양성이 존중되는 국제도시 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문화다양성 시민협약과 액션플랜을 수립하고자 함. 이를 수립하고자 우선적으로 문화다양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개발을 위하여 ‘2017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를 실시함.
- 인천발전연구원(2017)의 연구는 「문화다양성법」 상 실태조사 항목과 개발된 문화다양성 지

표항목을 활용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2015)의 연구와 유사하게 정책지표, 여건지표, 인식지표, 활동지표로 조사영역이 구성됨.

- 향후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명확하며 측정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계함.

□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는 2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개발됨.

- 정책지표 및 여건지표는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및 조사와 관련된 국내 연구의 연구책임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문받음.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인천특화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가능한 보편적인 지표항목을 개발해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위원단의 공통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수렴함. 인천시의 특수성은 ‘인천시 내’ 문화자원 조사를 시행한다는 것에서 확보함.
- 인식지표와 활동지표 개발을 위해서 여성, 이주민, 청소년, 장애인 부문 소수자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자문받음. 자문회의를 통해 각 소수자 집단과 관련해 법률 및 제도 제정에 대한 문항이 추가되었으며, 인천시 특수문항으로 신흥민, 이슬람, 미얀마 커뮤니티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됨.

<표 II-3> 소수자 분류(인천발전연구원, 2017)

분류	세부분류
지역	다문화·이주민
	북한 이탈주민
젠더	여성
	성 소수자
장애	정신
	지체
세대	청소년
	노인
소수문화	독립문화
	전통문화
	생활문화

1.1.4. 문화체육관광부(2017)

-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일반 국민과 소수자(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민, 북한 이탈주민)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지원정책과파 기반여건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실시함.

- 대국민 설문조사는 만 19세 이상 남녀 2,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수자 인식조사는 외국인 근로자 300명, 결혼이주민 300명, 북한 이탈주민 300명 등 총 9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됨. 지원정책 및 기반여건 조사는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됨.
 - 대국민조사는 온라인으로, 소수자 인식조사는 1:1 대면 면접조사로, 지원정책 및 기반여건 조사는 공문발송 후 자료를 취합함.

- 문화체육관광부(2017)의 연구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했던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에 대한 큰 틀은 유지하면서 2017년 문화다양성의 실태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보완함.
 -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과 구현 수준을 분석하고 소수자의 활동분석, 지원정책분석, 기반 여건분석에 대한 실태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함.
 - 관심도, 수용도, 포용도, 필요도 등 4가지 영역에 대해 13개 유형의 지표를 추가로 설정하여 조사함. (2015년 조사 영역 중 친밀도 제외)
 - : 외국인근로자 지원, 결혼이주민여성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성차별 근절, 성소수자 관련 사업, 장애인 문화지원, 세대 간 갈등 해소, 전통문화 보존, 지역문화 발전, 예술의 다양성 확보, 종교의 다양성, 가족의 다양성, 저소득층 문화 지원
- 대국민 설문조사는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평가와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의 평가로 진행됨.
- 소수자 인식조사는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다양성 정책 인식 수준과 사회 친밀도, 국민 수용도, 사회 포용도,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분류 항목을 구성함.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문화다양성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다는 국민은 48.6%였으며,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국내 환경 필요성에 각각 76.1%, 73.8%로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고 있음.
 - 소수자에 대한 거리감을 조사한 결과, 성 소수자가 62.8%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이 16%로 가장 낮음. 특히, 성 소수자의 경우 동네 이웃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36.5%, 가족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13.6%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개인적 수용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남.

<표 II-4>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수용 정도(단위: %)(문화체육관광부, 2017)

구분	소수자 집단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북한 이탈주민	성 소수자	장애인	타 종교인
동네이웃으로 수용가능	68.8	74.3	66.4	36.5	77.7	71.4
가족으로 수용가능	29.3	50.2	38.0	13.6	50.7	49.9

1.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중앙 11개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17개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을 파악하고 그 적절성을 평가하여 향후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과 실천방안을 도출하고자 2017년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를 시행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은 문화다양성 관련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시행함.
 - 지역별 관련 공무원 및 무지개다리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인식조사는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총 55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진행함.
 - 전문가 설문조사는 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정책방안 작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방문 및 이메일 조사를 통해 41명이 응답함.
 - 이후 문화다양성의 운영현황, 개선측면, 문화다양성 효과, 문화다양성 발전전략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위하여 교수, 정책연구원, 문화기획가, 공무원, 현장전문가 등 정책 관련 전문가 28명을 대상으로 7차례의 심층 인터뷰 및 자문회의를 진행함.
-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 분석을 통해 정리된 문화다양성의 문제점과 정책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표 II-5> 문화다양성 문제점 진단과 정책 개선방향(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구분	문제점 진단	정책 개선방향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부처 개입, 경쟁적 유사사업팽창 - 기존 동화지향적 다문화사업 시각 여전 - 복지, 일회성 사업으로 성과축적난제 - 하향식 사업추진과 일방적 정책공급 - 체계적인 평가체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간 협력강화, 추진체계 효율성 - 실질적 다양성 증진 사업으로 전환, 개선 -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정책운영 체계화 - 지역현장 수요 반영 및 참여 기회 확대 -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과 운영
정책 관련 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사업의미에 대한 낮은 국민인식 - 추진목표에 비하여 수혜대상이 편중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교육확산, 국민이해도 증진 - 균형적 대상별 사업 추진 필요

구분	문제점 진단	정책 개선방향
인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와 다수자 간 소통 방안 증진 필요 - 조직의 구성문제 및 담당자의 잦은 교체 - 예산 확보와 지역단위 체계구축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간 교류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현장인력 전문성 및 이해교육 강화 -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인프라 마련 필요
주요 국가별 정책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이민정서, 외국인주민 제노포피아 - 지역사회로의 정책 확산 필요성 - 다원화된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향발현 - 주류사회와 소수공동체의 분리, 소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인식제고, 이주민의 사회활동참여 - 현장중심의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소수민 맞춤형 정책, 자생 활동 역량강화 - 갈등극복을 위한 집단 간 상호교류추구
전문가 의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 차별 및 사회적 배제극복 중요성 - 한국사회의 낮은 수용성 수준 - 편중된 대상에 대한 사업집중 - 기존 다문화정책과의 관계설정 필요 - 정책추진 체계의 개선 시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사업에서 시민인식제고로의 전환 -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성 가치의 확산 - 다양성 프로그램 및 대상범위 운영 확대 - 중복사업의 유기적인 통합, 신사업 발굴 - 기관 간 연계 및 민간의 협력활동 강화

2. 부산시 현황 분석

2.1. 인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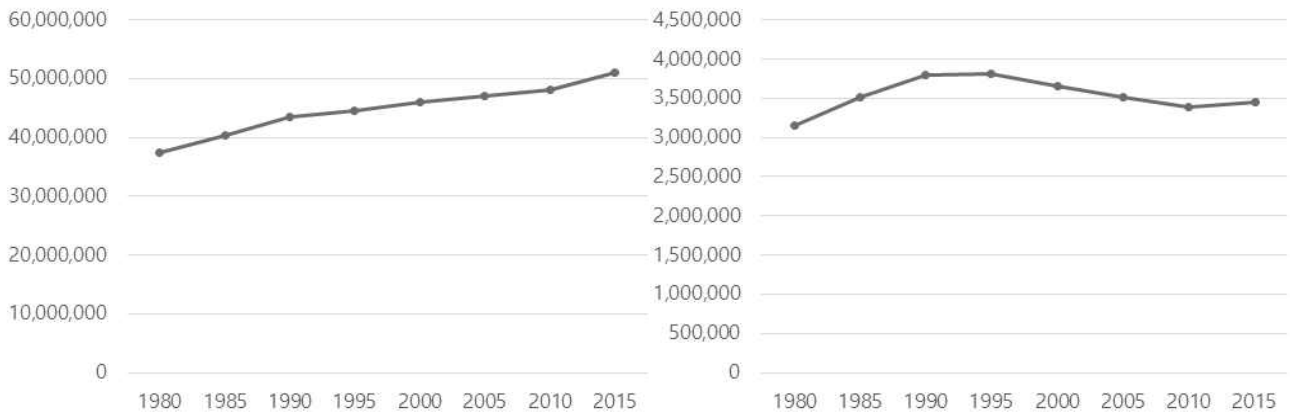
□ 1980년 전국 인구수는 약 37,406,815명에서 2015년 약 51,069,375명으로 약 1.37배 증가하였으나, 부산시 인구수는 1980년 3,156,931명에서 2015년 3,448,737명으로 약 1.09배 증가하였음.

－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은 경기도로, 1980년에 비해 인구수가 2.53배 증가하였으며, 제주도는 1.31배, 서울은 1.19배 증가함.

<표 II-6> 시도별 인구수 변동 (출처: 통계청)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전국	37,406,815	40,419,652	43,390,374	44,553,710	45,985,289	47,041,434	47,990,761	51,069,375
서울특별시	8,350,616	9,625,755	10,603,250	10,217,177	9,853,972	9,762,546	9,631,482	9,904,312
부산광역시	3,156,931	3,512,113	3,795,892	3,809,618	3,655,437	3,512,547	3,393,191	3,448,737
대구광역시	—	2,028,370	2,227,979	2,445,288	2,473,990	2,456,016	2,431,774	2,466,052
인천광역시	—	1,384,916	1,816,328	2,304,176	2,466,338	2,517,680	2,632,035	2,890,451
광주광역시	—	—	1,138,717	1,257,063	1,350,948	1,413,644	1,466,143	1,502,881
대전광역시	—	—	1,049,122	1,270,873	1,365,961	1,438,551	1,490,158	1,538,394
울산광역시	—	—	—	—	1,012,110	1,044,934	1,071,673	1,166,615
경기도	4,930,335	4,792,617	6,154,359	7,637,942	8,937,752	10,341,006	11,196,053	204,088
강원도	1,790,226	1,724,146	1,579,859	1,465,279	1,484,536	1,460,770	1,463,650	12,479,061
충청북도	1,423,381	1,390,326	1,389,222	1,395,460	1,462,621	1,453,872	1,495,984	1,518,040
충청남도	2,954,662	2,999,837	2,013,270	1,765,021	1,840,410	1,879,417	2,000,473	1,589,347
전라북도	2,286,720	2,201,265	2,069,378	1,900,558	1,887,239	1,778,879	1,766,044	2,107,802
전라남도	3,778,777	3,747,506	2,506,944	2,066,109	1,994,287	1,815,174	1,728,749	1,834,114
경상북도	4,952,012	3,010,001	2,860,109	2,672,498	2,716,218	2,594,719	2,575,370	1,799,044
경상남도	3,320,546	3,514,500	3,671,509	3,841,553	2,970,929	3,040,993	3,119,571	2,680,294
제주도	462,609	488,300	514,436	505,095	512,541	530,686	528,411	3,334,524

□ 전국과 부산시의 인구 변동 추이를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전국적으로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지만, 부산은 1995년을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한 이후 점점 감소함.



[그림 II-1] 전국 인구수 변동 그래프 (출처: 통계청) [그림 II-2] 부산시 인구수 변동 그래프 (출처: 통계청)

2.1.1. 부산시 연령별 성비²⁾

□ 2015년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비는 100.6명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많지만, 부산시는 97.4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음.

－ 특히, 45세 이상 59세 이하일 경우, 전국과 부산시의 성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표 II-7> 전국 및 부산시 성비(통계청, 2015)

연령별	전국			부산시			성비 격차 (전국-부산)
	남성 인구수	여성 인구수	성비	남성 인구수	여성 인구수	성비	
합계	25,608,502	25,460,873	100.6	1,701,347	1,747,390	97.4	3.20
15세미만	3,591,551	3,362,762	106.8	208,324	194,950	106.9	-0.10
15~19세	1,668,683	1,525,396	109.4	107,728	97,233	110.8	-1.40
20~24세	1,887,776	1,643,332	114.9	132,959	115,643	115.0	-0.10
25~29세	1,728,888	1,536,400	112.5	111,618	101,123	110.4	2.10
30~34세	1,986,796	1,824,814	108.9	123,727	115,956	106.7	2.20
35~39세	2,022,466	1,904,396	106.2	126,063	119,500	105.5	0.70
40~44세	2,218,442	2,120,385	104.6	134,657	133,345	101.0	3.60
45~49세	2,217,013	2,171,144	102.1	137,543	144,596	95.1	7.00
50~54세	2,153,186	2,110,261	102.0	141,969	153,277	92.6	9.40
55~59세	1,969,232	1,987,617	99.1	147,484	161,055	91.6	7.50
60~64세	1,379,694	1,441,763	95.7	114,660	124,522	92.1	3.60
65~69세	1,028,129	1,115,894	92.1	85,208	94,058	90.6	1.50
70~74세	793,855	976,886	81.3	63,744	75,358	84.6	-3.30
75~79세	553,178	809,491	68.3	40,105	57,244	70.1	-1.80
80~84세	276,627	537,595	51.5	18,065	35,055	51.5	-
85세이상	132,986	392,737	33.9	7,493	24,475	30.6	3.30

2) 성비란 인구의 성별 구조를 나타내는 지표로,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를 나타냄. 성비=(남자인구/여자인구)×100

2.1.2. 부산시 가구 구성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통계청에서 가구 수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2015년에 비해 2017년의 가구 수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산의 경우 가구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

<표 II-8> 전국 및 부산시 가구 수(통계청, 2017)

연령별	전국			부산시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합계	48,339,559	48,551,348	48,614,907	3,323,591	3,313,022	3,277,862
15세미만	6,888,615	6,753,076	6,613,883	400,797	393,165	382,862
15~19세	2,835,413	2,715,405	2,573,204	184,391	171,719	160,407
20~24세	2,763,722	2,796,573	2,750,740	201,581	199,010	192,243
25~29세	2,972,437	3,020,163	3,109,124	202,365	203,449	208,139
30~34세	3,570,246	3,394,882	3,210,358	231,316	216,272	200,826
35~39세	3,765,009	3,841,035	3,898,665	239,673	247,370	249,443
40~44세	4,194,519	4,016,679	3,904,060	262,706	249,876	240,028
45~49세	4,242,619	4,350,652	4,386,047	277,294	280,299	277,932
50~54세	4,119,181	4,009,442	3,981,187	290,695	275,371	266,569
55~59세	3,837,143	4,051,464	4,141,719	304,466	312,371	309,787
60~64세	2,741,704	2,993,155	3,156,104	236,399	251,953	261,143
65~69세	2,103,674	2,167,736	2,266,611	177,673	186,178	193,554
70~74세	1,742,546	1,719,775	1,726,140	137,730	136,183	138,029
75~79세	1,327,847	1,389,176	1,498,779	95,741	102,320	109,638
80~84세	773,354	839,158	883,675	51,309	55,712	57,334
85세이상	461,530	492,977	514,611	29,455	31,774	29,928

- 1인 가구 수는 전국과 부산 모두 2015년부터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연령대에서는 2015년에 비해 2017년 1인 가구 수가 감소하기도 함.

- 전국의 경우, 15세 미만, 30~34세, 40~44세 등 3개 연령대 집단에서 1인 가구 수가 감소함. 부산시에서는 15~19세, 20~24세, 30~34세, 40~44세, 50~54세 등 5개 연령대 집단에서 1인 가구 수가 감소함.

<표 II-9> 전국 및 부산시 1인 가구(통계청, 2017)

연령별	전국			부산시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합계	5,203,440	5,397,615	5,618,677	361,749	372,412	388,899
15세미만	61	47	50	X	X	X
15~19세	57,959	62,592	61,008	4,847	4,623	4,490
20~24세	367,152	391,628	393,503	29,487	29,404	28,923

연령별	전국			부산시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5~29세	519,871	537,780	568,288	29,500	31,123	34,377
30~34세	533,193	519,528	516,827	27,535	26,751	27,527
35~39세	420,129	429,109	451,634	22,796	23,682	25,570
40~44세	428,605	408,807	407,777	25,034	23,549	23,265
45~49세	421,153	434,237	455,033	26,775	27,378	28,325
50~54세	430,941	430,168	435,035	29,567	28,825	28,755
55~59세	446,608	481,691	512,691	36,492	37,902	38,919
60~64세	354,599	407,575	445,869	32,662	36,297	39,356
65~69세	313,584	335,978	359,563	28,529	30,706	32,906
70~74세	308,780	310,716	313,648	25,997	26,085	27,062
75~79세	288,138	304,340	329,899	22,059	23,648	25,621
80~84세	197,240	215,488	229,716	13,465	14,663	15,625
85세이상	115,427	127,931	138,136	7,001	7,775	8,177

2.1.3. 부산시 행정구역별 인구수

- 부산은 15구 1개군을 가진 광역시로, 총면적은 940.83km²이며, 강서구, 기장군, 사하구 순으로 큼.
- 부산시 인구수는 3,323,591명이며, 해운대구, 부산진구, 사하구 순으로 인구수가 많음.
 - 행정구역을 원도심, 중·북·동·서부산권으로 분류하였을 때, 중부산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가장 많으며, 북부산권, 동부산권 순으로 인구수가 많음. 원도심이 인구수가 가장 적음.
- 지역 면적 대비 인구수를 비교했을 때,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연제구이며 다음으로 는 동래구가 높음.
 - 강서구는 지역 면적은 부산에서 가장 많으나, 인구수가 적어 인구밀도가 가장 낮음.

<표 II-10> 부산시 행정구역별 인구밀도

행정구역별(시군구)		지역 면적(km ²) ³⁾	인구수 ⁴⁾		인구밀도(명) (인구수÷지역 면적)
			인구수(명)	구성비(%)	
부산광역시 전체		940.83	3,323,591	100.0	3,533
원도심	중구	4.47	43,105	1.3	9,643
	서구	29.36	107,107	3.2	3,648
	동구	11.59	85,952	2.6	7,416
	영도구	56.17	122,446	3.7	2,180
중부산권	부산진구	29.68	365,721	11.0	12,322
	연제구	12.08	198,383	6.0	16,422
	남구	42.51	271,753	8.2	6,393

행정구역별(시군구)		지역 면적(km ²) ³⁾	인구수 ⁴⁾		인구밀도(명) (인구수÷지역 면적)
			인구수(명)	구성비(%)	
북부산권	금정구	65.18	235,887	7.1	3,619
	동래구	16.7	256,584	7.7	15,364
	북구	39.43	292,375	8.8	7,415
동부산권	해운대구	55.07	397,134	11.9	7,211
	수영구	14.08	168,618	5.1	11,976
	기장군	221.56	142,223	4.3	642
서부산권	강서구	238.45	84,722	2.5	355
	사하구	68.38	322,757	9.7	4,720
	사상구	36.11	228,824	6.9	6,337

2.2. 경제 수준

□ 2016년 총본원소득을 기준으로 부산시는 전국 4위, 1인당 지역총소득은 전국 11위임.

－ 지역 내 소득의 대부분이 정부, 기업의 소득임을 유추할 수 있음.

<표 II-11> 시도별 총본원소득 및 1인당 지역총소득 (통계청, 2017)

시도별	총본원소득 ⁵⁾			1인당 지역총소득(단위: 천원)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전국	1,490,189.2	1,569,507.0	1,646,380.0	29,365.3	30,765.6	32,127.2
서울특별시	376,880.8	384,554.4	411,200.1	37,781.9	38,683.0	41,737.4
부산광역시	84,831.2	88,731.4	91,998.3	24,572.3	25,702.4	26,688.6
대구광역시	55,651.5	58,662.7	59,131.1	22,486.3	23,762.1	23,984.7
인천광역시	73,609.3	77,356.6	81,953.8	25,717.4	26,833.2	28,193.9
광주광역시	34,150.9	35,990.7	37,632.1	22,697.9	23,899.7	25,028.2
대전광역시	37,291.8	38,677.9	40,298.8	24,017.5	25,076.6	26,253.7
울산광역시	51,808.3	56,129.3	59,072.8	45,004.9	48,232.7	50,547.9
세종특별자치시	—	—	—	—	—	—
경기도	357,900.7	380,951.5	399,082.1	29,140.2	30,665.0	31,643.7
강원도	33,279.8	34,154.0	36,074.1	22,036.7	22,519.6	23,735.5
충청북도	41,810.0	44,496.8	47,143.4	26,381.3	27,878.2	29,407.7
충청남도	78,160.3	83,822.9	89,861.5	35,309.1	36,713.5	38,257.3
전라북도	40,080.7	42,122.8	43,192.2	21,908.8	22,953.6	23,557.4
전라남도	48,341.9	54,776.5	57,308.7	26,978.2	30,489.4	31,842.7
경상북도	75,561.6	80,032.3	81,244.1	28,290.5	29,887.7	30,251.5
경상남도	86,417.5	93,201.5	93,956.5	26,128.8	27,986.5	28,078.7
제주	14,412.6	15,845.6	17,230.3	24,707.3	26,442.4	27,855.9

3) 출처: 통계청@지역통계총괄과 도시지역면적(시도/시/군/구). 2017년 기준.

4)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년 기준.

5) 총본원소득은 가계, 정부, 기업이 생산에 참여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서 자산의 소모분을 포함하지 않은 총 수익

□ 2019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4.23명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시설수급자 비율을 산출했을 때 부산시는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3.68%가 시설수급자이며, 전국에서 시설수급자 비율이 가장 낮음.

<표 II-12> 2017년 시도별 인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통계청, 2019)

시도별	지역별 인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A÷B)
	인구(A)	인구밀도	계(B)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전국	51,446	513	1,581,646	1,491,650	89,996	3.07
서울특별시	9,776	16,154	263,347	251,809	11,538	2.69
부산광역시	3,429	4,454	145,113	139,779	5,334	4.23
대구광역시	2,465	2,790	103,132	97,675	5,457	4.18
인천광역시	2,923	2,751	98,789	94,159	4,630	3.38
광주광역시	1,501	2,995	65,712	62,716	2,996	4.38
대전광역시	1,531	2,839	52,357	49,335	3,022	3.42
울산광역시	1,166	1,099	18,821	17,764	1,057	1.61
세종특별자치시	276	593	4,284	3,766	518	1.55
경기도	12,809	1,258	261,050	246,032	15,018	2.04
강원도	1,521	90	60,627	56,528	4,099	3.99
충청북도	1,605	217	51,505	46,052	5,453	3.21
충청남도	2,148	261	60,411	55,602	4,809	2.81
전라북도	1,830	227	94,639	89,275	5,364	5.17
전라남도	1,796	146	79,196	73,106	6,090	4.41
경상북도	2,681	141	99,822	92,972	6,850	3.72
경상남도	3,355	318	100,904	95,027	5,877	3.01
제주특별자치도	634	343	21,937	20,053	1,884	3.46

2.3. 소수집단 현황

2.3.1. 장애인

□ 2017년 기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 비율을 산출했을 때, 전국의 약 4.95%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음.

□ 부산시의 장애인 인구 비율은 5.02%로 전국과 유사한 수준이며, 여성 장애인보다 남성 장애인 비율이 더 높음.

<표 II-13> 시도별 장애인 인구수 및 비율 (통계청, 2017년 기준)

시도별	전체			남성			여성		
	인구수	장애인 수	비율	인구수	장애인 수	비율	인구수	장애인 수	비율
전국	51,422,507	2,545,637	4.95	25,768,055	1,475,550	5.73	25,654,452	1,070,087	4.17
서울특별시	9,741,871	391,753	4.02	4,757,642	227,359	4.78	4,984,229	164,394	3.30
부산광역시	3,416,918	171,384	5.02	1,680,933	101,725	6.05	1,735,985	69,659	4.01
대구광역시	2,453,041	119,766	4.88	1,218,326	70,289	5.77	1,234,715	49,477	4.01
인천광역시	2,925,967	138,304	4.73	1,472,081	83,337	5.66	1,453,886	54,967	3.78
광주광역시	1,496,172	69,233	4.63	745,122	38,943	5.23	751,050	30,290	4.03
대전광역시	1,525,849	72,180	4.73	765,718	42,178	5.51	760,131	30,002	3.95
울산광역시	1,157,077	50,205	4.34	600,093	30,386	5.06	556,984	19,819	3.56
세종특별자치시	276,589	10,623	3.84	139,347	6,248	4.48	137,242	4,375	3.19
경기도	12,851,601	533,259	4.15	6,502,723	317,854	4.89	6,348,878	215,405	3.39
강원도	1,521,386	99,959	6.57	769,043	58,021	7.54	752,343	41,938	5.57
충청북도	1,611,009	95,844	5.95	818,500	55,030	6.72	792,509	40,814	5.15
충청남도	2,162,426	128,503	5.94	1,108,610	73,976	6.67	1,053,816	54,527	5.17
전라북도	1,826,174	131,303	7.19	911,592	71,443	7.84	914,582	59,860	6.55
전라남도	1,792,319	142,174	7.93	899,077	75,683	8.42	893,242	66,491	7.44
경상북도	2,677,058	172,533	6.44	1,353,083	97,542	7.21	1,323,975	74,991	5.66
경상남도	3,345,293	183,510	5.49	1,702,150	106,280	6.24	1,643,143	77,230	4.70
제주특별자치도	641,757	35,104	5.47	324,015	19,256	5.94	317,742	15,848	4.99

□ 20018년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전국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Barrier Free, BF)의 인증을 4,651개 시설물·지역이 받았으며, 부산에서는 171개 시설물·지역이 BF 인증을 받았음.

<표 II-14> 시도별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 현황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4월 기준)

구분	기관 수	교부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4,651	4	18	45	97	115	126	160	208	651	1,225	1,623	499
서울특별시	515	1	4	14	24	15	8	22	15	79	136	153	44
부산광역시	171	—	—	—	1	1	5	3	3	17	55	64	21
대구광역시	235	—	1	—	1	4	5	5	18	48	66	73	14
인천광역시	313	—	—	5	36	29	28	23	13	27	50	88	14
광주광역시	91	—	—	—	—	3	6	5	13	14	19	22	9
대전광역시	110	1	6	3	6	16	10	9	10	12	16	17	4
울산광역시	136	—	—	—	—	5	2	5	5	20	36	53	10
세종특별자치시	120	—	—	5	2	11	14	5	8	11	23	26	15
경기도	805	1	1	7	6	13	13	28	23	104	193	312	104
강원도	268	—	3	1	—	3	2	4	1	31	73	117	33
충청북도	173	—	—	1	1	1	1	6	26	48	60	29	
충청남도	268	—	2	6	4	—	5	2	4	45	80	86	34
전라북도	207	—	—	1	7	3	1	1	4	34	51	84	21
전라남도	491	1	—	1	4	4	19	36	55	81	112	143	35
경상북도	373	—	—	—	1	3	4	4	7	44	114	143	53
경상남도	305	—	1	1	4	3	3	1	2	29	85	128	49
제주특별자치도	190	—	—	—	—	1	—	1	1	7	56	85	39

2.3.2. 인종

2.3.2.1. 국내 외국인 현황

- 외국인 주민은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전국적으로 96,420명이 증가하였으며, 부산시 역시 4,273명이 증가하였음. 해당 증가량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7번째로 높은 수치임.
 - 경기도가 32,225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가 9,906명 증가로 높음.
- 2017년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약 48,808명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14,901명으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학생은 약 19%. 결혼이민자는 약 14%가 거주하고 있음.
- 외국인 주민 자녀 수 역시 2016년에 비해 2017년 17개 시도에서 20,843명 증가하였으며, 부산시의 경우 1,318명이 증가함. 해당 증가량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7번째로 높은 수치임.
 - 외국인 주민 자녀 수도 경기도가 4,018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경상남도는 2,286명이 증가하여 경기도 다음으로 증가량이 큼.

<표 II-15> 지역별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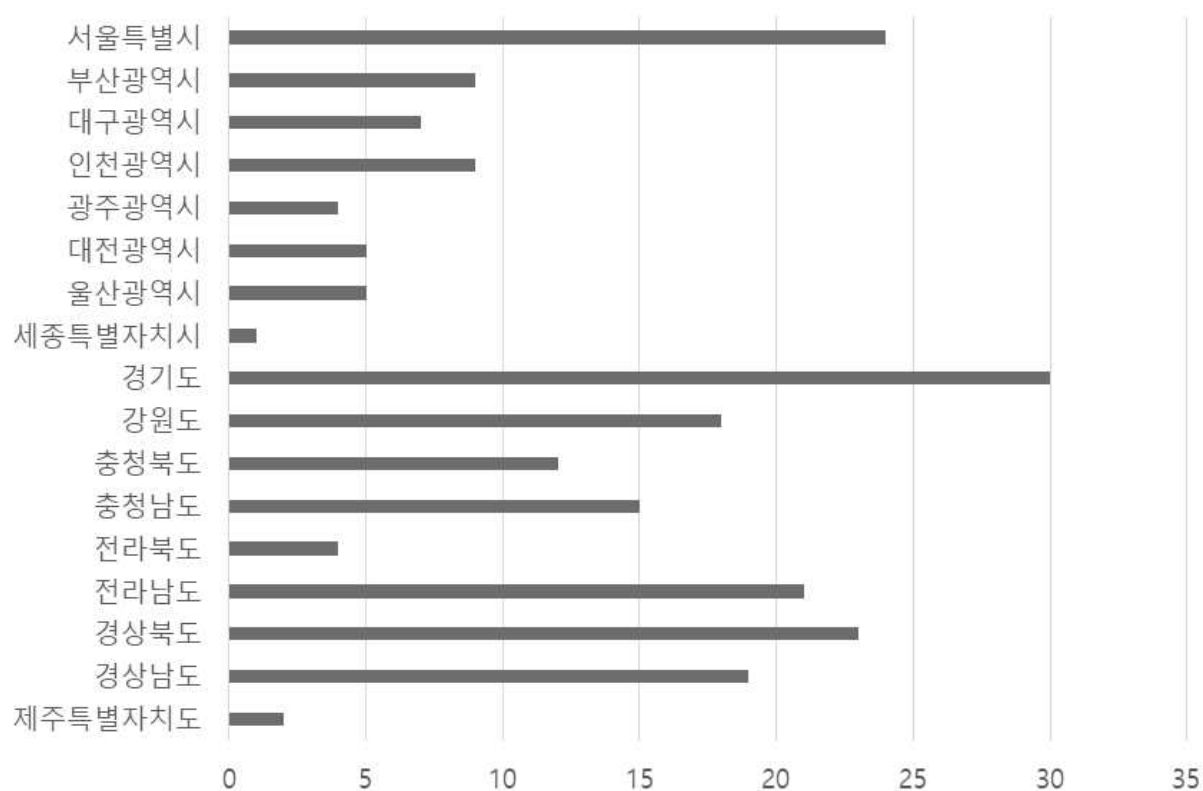
시도별	2016								2017							
	합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합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 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 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전국	1,764,664	1,413,758	541,673	159,501	95,963	235,926	380,695	159,447	1,861,084	1,479,247	495,792	160,653	117,127	276,750	428,925	169,535
서울특별시	404,037	335,167	85,878	33,139	37,178	80,712	98,260	40,775	413,943	343,927	70,077	32,061	44,150	92,060	105,579	41,692
부산광역시	59,872	46,168	15,934	6,672	7,346	3,644	12,572	5,181	64,145	48,808	14,901	6,841	9,071	3,961	14,034	5,496
대구광역시	40,251	30,492	11,181	4,793	2,844	2,637	9,037	3,610	42,506	31,365	10,219	4,943	3,240	2,986	9,977	3,872
인천광역시	94,670	71,873	25,628	9,873	2,702	11,881	21,789	11,115	104,441	79,170	23,783	10,143	3,268	14,829	27,147	12,483
광주광역시	31,162	23,701	7,538	3,298	3,577	2,173	7,115	2,703	34,412	26,052	7,413	3,372	4,271	2,652	8,344	2,912
대전광역시	26,656	19,687	3,079	3,361	5,467	1,644	6,136	2,538	28,404	20,534	2,826	3,346	6,003	1,805	6,554	2,760
울산광역시	35,929	28,792	11,690	3,332	1,067	5,150	7,553	2,885	34,373	26,601	9,218	3,346	1,171	5,091	7,775	2,950
세종특별자치시	6,084	4,835	1,876	598	556	604	1,201	455	6,761	5,290	1,886	691	606	770	1,337	534
경기도	571,384	472,699	204,280	46,297	11,879	88,179	122,064	49,551	603,609	497,089	189,028	47,161	14,609	106,827	139,464	53,368
강원도	28,469	19,364	6,533	3,547	2,358	1,584	5,342	3,221	31,123	20,996	6,528	3,538	3,288	1,779	5,863	3,451
충청북도	56,660	44,901	19,718	4,841	2,951	6,453	10,938	4,592	61,246	48,237	19,087	5,005	3,388	7,846	12,911	4,877
충청남도	95,553	77,533	34,044	8,020	5,032	12,263	18,174	6,843	104,854	84,752	33,806	8,162	6,149	15,100	21,535	7,474
전라북도	45,836	31,549	11,045	5,768	3,342	1,986	9,408	4,800	49,840	33,764	10,419	5,817	5,095	2,135	10,298	5,083
전라남도	53,066	36,630	17,409	6,645	1,301	2,223	9,052	5,104	55,504	37,212	16,689	6,514	1,512	2,238	10,259	5,392
경상북도	78,339	60,706	28,267	7,473	5,470	4,959	14,537	6,167	83,898	63,978	26,283	7,507	7,398	5,603	17,187	6,483
경상남도	114,594	92,185	50,113	9,554	1,770	8,125	22,623	8,375	116,379	91,072	44,877	9,738	2,559	9,157	24,741	8,987
제주특별자치도	22,102	17,476	7,460	2,290	1,123	1,709	4,894	1,532	25,646	20,400	8,752	2,468	1,349	1,911	5,920	1,721

<표 II-16> 외국인 주민 자녀 출생자 수 (통계청, 2017)

시도별	2016	2017
전국	191,459	212,302
서울특별시	28,095	28,324
부산광역시	8,523	9,841
대구광역시	6,149	7,269
인천광역시	11,682	12,788
광주광역시	4,758	5,448
대전광역시	4,431	5,110
울산광역시	4,252	4,822
세종특별자치시	794	937
경기도	49,134	53,152
강원도	5,884	6,676
충청북도	7,167	8,132
충청남도	11,177	12,628
전라북도	9,487	10,993
전라남도	11,332	12,900
경상북도	11,466	13,437
경상남도	14,034	16,320
제주특별자치도	3,094	3,525

2.3.2.2. 부산시 다문화지원센터 현황

- 서울시 24개, 부산시 9개, 대구시 7개, 인천시 9개, 광주시 4개, 대전시 5개, 울산시 5개, 세종시 1개, 경기도 30개, 강원도 18개, 충북 12개, 충남 15개, 전북 14개, 전남 21개, 경북 23개, 경남 19개, 제주 2개 있음.



[그림 II-3] 시도별 다문화지원센터 현황

<표 II-17> 부산시 다문화지원센터 현황 (여성가족부, 2018년 6월말 기준)

센터명	소재지
부산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범곡로 8-1(범일동)2층
부산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160, 2층(당감동, 부산진구 여성가족문화센터)
부산*동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63번길 20-7(사직2동 29-8번지)
부산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38-1 부산광역시 여성회관(남구 수영로 356)
부산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 북구 효열로 76(금곡동 1108)
부산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양운로 91, 좌1동 주민센터 2층
부산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 177(신평동) 농협신평동지점 2층
부산*사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196번길 51(학장동) 다누림센터 4층
부산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206,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대라리 175-3)

2.3.3.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은 현재까지 32,147명이 입국하였으며, 이 중 72%가 여성 북한이탈주민임.
-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9,336명), 다음으로는 서울시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6,974명). 부산시에는 1,036명이 거주하여 경남이나 경북과 유

사한 수치를 보임.

<표 II-18>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표 (남북하나재단, 2017)

구분	남성(명)	여성(명)	합계(명)	여성비율(%)
~'98	831	116	947	12
~'01	565	478	1,043	46
'02	510	632	1,142	55
'03	474	811	1,285	63
'04	626	1,272	1,898	67
'05	424	960	1,384	69
'06	515	1,513	2,028	75
'07	573	1,981	2,554	78
'08	608	2,195	2,803	78
'09	662	2,252	2,914	77
'10	591	1,811	2,402	75
'11	795	1,911	2,706	71
'12	404	1,098	1,502	73
'13	369	1,145	1,514	76
'14	305	1,092	1,397	78
'15	251	1,024	1,275	80
'16	302	1,116	1,418	79
'17	188	939	1,127	83
'18.9 (잠정)	111	697	808	86
합계	9,104	23,043	32,147	72

<표 II-19> 북한 이탈주민의 지역별 거주현황표 (남북하나재단, 2018년 9월말 거주자 기준)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세종
남	2,263	274	139	785	141	131	156	2,335	326
여	4,711	762	531	2,012	473	482	383	7,001	1,169
합계	6,974	1,036	670	2,797	614	613	539	9,336	1,495
지역	충북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남	244	181	226	242	122	148	74	7,787	
여	996	566	860	806	409	457	240	21,858	
합계	1,240	747	1,086	1,048	531	605	314	29,645	

Ⅲ. 부산시 문화다양성 설문 지표개발 과정

1. 부산시 문화다양성 설문 지표개발 원칙
2. 설문 지표개발 단계
3. 선행연구 검토 및 자문위원 구성
4. 1차 자문위원 회의
5. 2차 자문위원 회의
6. 조사 수행 방법

Ⅲ 부산시 문화다양성 설문 지표개발 과정

1. 부산시 문화다양성 설문 지표개발 원칙

□ 향후 부산시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성을 위한 지표 제공

- 일반적인 통계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본 조사에서는 ‘문화다양성 지표’를 통한 부산시의 문화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지표’는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진단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되어야 하며 광의의 문화다양성을 아우르기보다 부산시 현황파악 및 실행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함.
- 예를 들어 타 문화다양성 연구에서 자주 다루던 ‘문화소외’나 ‘생활문화’ 같은 문화예술 이슈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금 번 조사에서는 소수집단이나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갈등 요소 등 부산문화재단의 주요 이슈 위주로 범위를 한정함.
- 또한 이번 조사는 문화다양성 지수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위주로 구성함. 문화다양성 정책이나 여건관련 내용은 부산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으로만 활용함.

□ 부산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지표를 설계

- 부산시 정책 방향성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 설계 원칙과 더불어 본 지표는 부산시의 특징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부산시의 기본통계 자료를 확인하고 부산시의 문화다양성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설계함.

□ 타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부산시 특징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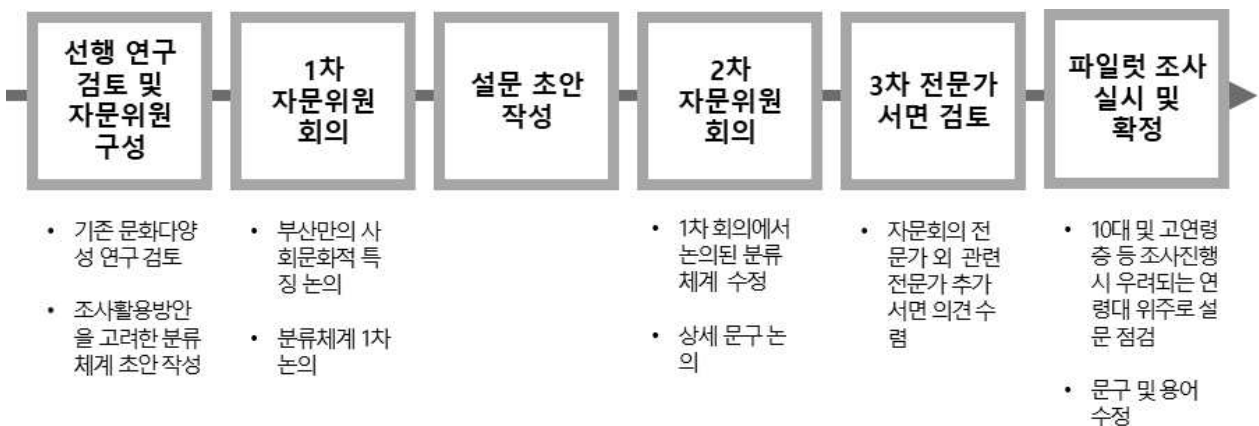
- 이번 조사는 부산지역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인식차를 파악해야 함. 부산 내에서의 인식차이를 발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산의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내 타 유사연구와 비교할 경우 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음.
- 따라서 조사 지표 중 일부는 국내 유사연구 지표와 동일하게 구성하여 향후 결과 수치를 비교하였음.

□ 모호한 개념적 지표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지표로 구성

- 문화다양성에 대한 당위적인 문항이나 개념적인 문항으로 구성하기보다 응답자들에게 보다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향함.

2. 설문 지표개발 단계

- 지표개발 원칙에 따라 지표개발 단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위해 먼저 기존 국내·외 문헌 및 기사를 검토함. 이를 통해 문화다양성 관련 주요 이슈 및 연구 현황을 파악한 후 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음. 1차 자문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조사 설계 및 지표개발에 앞서 부산의 특징을 확인하였으며, 문화다양성에서 짚어야 할 대상자 범위를 한정함.
- 1차 자문회의 이후 작성된 설문 초안으로 2차 자문회의를 진행하여 1차 자문회의 내용 반영여부와 세부적인 문구 정교화 작업을 진행하였음.
- 1,2차 자문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인권관련 문항을 보강하기 위해 추가적인 전문가 서면검토를 진행한 후 안면 타당도 검증을 위한 파일럿 조사(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설문을 확정함.



<표 Ⅲ-1>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과정 및 일정

과 정	일 정
□ 선행연구 검토 및 자문위원 구성	~ 2019년 1월 28일
□ 1차 자문위원 회의	2019년 1월 30일 오후 2시 부산문화재단 회의실
□ 설문 초안 작성	~ 2019년 2월 20일
□ 2차 자문위원 회의	2019년 2월 21일 오후 2시 부산문화재단 회의실
□ 3차 전문가 서면 검토 (이메일 및 전화)	~ 2019년 2월 27일
□ 파일럿 조사 실시 및 확정	2019년 2월 28일

3. 선행연구 검토 및 자문위원 구성

3.1.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분류체계 초안 구성

- 앞서 II장에서 검토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먼저 설문조사 분류체계 초안을 구성함. 부산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 목적과 설문의 양 등을 감안하였을 때, 문화소외와 같은 비주류 문화예술 관련 문항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기로 함.
- 소수집단은 기존 선행연구들의 분류를 따르되, 각 문항의 세부설문지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의미있는 지표만 선별하기로 함.
- 사회갈등과 관련된 지표범위는 부산의 인구통계 특징과 언론기사 등을 통해 도출된 주요 사회갈등 현상을 토대로 초안을 구상함.

<표 III-2> 부산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초안

	문화체육관광부 (2015)	문화체육관광부 (2017)	익산시(2018)	인천시(2018)	광주시(2017)	부산시 (2018)
소수집단	다문화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이주민	다문화 이주민	다문화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결혼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성소수자	성소수자
	장애인	성소수자	성소수자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여성	장애인	장애인	여성		
		타 종교인	타 종교인			
하위문화 / 사회갈등 현상	청소년	성별 불평등	성별 불평등	청소년	노인	노인
	노인	독신가구의 증가	독신가구의 증가	노인		젠더 감수성
						남북교류
						1인가구
	전통문화	세대간 갈등	세대간 갈등			소득격차
	지방문화					
비주류 문화 예술	독립문화예술	주류 문화예술의 독점	주류 문화예술의 독점	독립문화예술	전통문화예술	
	대안문화예술	전통문화 위기	전통문화 위기	전통문화예술	지방문화예술	
		지역문화에 대한 차별	지역문화에 대한 차별	생활문화예술	독립문화예술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대안문화예술	

3.2. 자문위원 구성

- 자문위원은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문화예술 정책 및 현장관계자 등으로 구성함.
- 자문위원을 통해 부산의 문화다양성 특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조사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자문위원은 지표설계 초기 단계부터 최종 지표 정교화 단계까지 자문을 진행함. 또한 설문조사 및 현장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함께 도출하였음.

<표 Ⅲ-3> 전문가 자문위원 명단

소속	직급	이름	주력분야
부산연구원	박사	윤지영	문화지표
부산복지개발원	책임연구위원	이재정	고령화
부산대학교	박사	석영미	장애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장	홍미영	여성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문재원	이주, 다문화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실장	송교성	예술정책

4. 1차 자문위원 회의

4.1. 부산의 문화다양성 특징 파악

□ 1차 자문위원 회의에서는 선행연구 및 분류체계 초안을 기반으로 부산의 문화다양성 측면을 이해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부산의 모습을 살펴본 후 이 중 설문 지표로 삼아야 할 내용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함.

□ 다음은 1차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소수집단과 사회갈등 요소 내용임.

<표 III-4> 부산 문화다양성 분류체계를 위한 1차 자문회의 내용 요약

구분		분류체계 반영 여부	상세 내용
소수집단	외국인 근로자	●	문화다양성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외국인 관련 항목임. 우리나라와 같이 동일 인종비율이 높고 보수적인 국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은 항상 있어왔지만,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서 공동체로 이들은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정도 수용될 수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결혼 이주민	●	외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다뤄야 할 항목임.
	이주민의 자녀	●	1세대 외국인 근로자가 이미 한국에 정착한 지 오래되면서 2세대, 3세대 이주민 자녀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임. 이들에 대한 인식이 외국인 근로자나 이주민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외국인 유학생	●	선행연구에서 거의 등장한 적은 없지만 외국인 유학생이 최근 부산에 많아지는 추세라 인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신분이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우리속의 차별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 판단됨. 예를 들어 선진국이나 백인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그 외 인종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해도 흥미로울 것임.
	장애인	●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되나 여전히 문화다양성 지수나 유사 연구 등에서 기본적으로 반영해야 할 집단임.
	북한이탈주민	●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소수집단임 향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남북교류, 통일 등으로 인한 북한이탈주민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갈등 요소가 발생할 수 있음. 부산의 경우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세대가 다른 지역보다 높을 것이며 이로 인한 북한에 대한 인식도 다른 지역과 다를 수 있음.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인식도 파악해 보면 좋지만, 문항의 양을 감안해 볼 때 이는 추후 다른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보아도 무방할 것임.

구분		분류체계 반영 여부	상세 내용
	성소수자	●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회의 수용도가 낮을 것임. 특히 부산은 가부장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도 다른 지역과 다를 수 있음. 사회가 다변화될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정책이나 차별은 장기적인 사회문제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음.
	정신적 장애인	△	최근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인한 사회 문제가 종종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본 조사에 전면적으로 부각시키지 않고 추후 사회적 추세를 본 후 문항 추가 검토
	난민	△	중요한 사회 갈등요소이자 소수집단이지만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를 통해 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뿐 현재 부산에서는 난민을 거의 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난민 문제는 향후 조사에서 반영하는 것을 고려
	여성	×	부산지역의 보이지 않는 가부장성이나 여성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나 여성 자체가 소수집단이라고 정의내리기는 어려움. 이는 사회 갈등요소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함.
	노인	×	노인을 소수집단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세대 간 갈등 요소 중 하나로 보는 것이 적합함.
	영세민(임대아파트 거주자 등)	×	부산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 간 경제적 수준차이로 인한 갈등이 분명히 존재함. 그러나 설문에서 민감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직접적으로 영세민 이슈를 건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한부모	×	편모가정, 편부가정은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임. 지원정책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역시 설문에서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회 갈등 요소	세대 간 갈등	●	젊은 세대의 노인 혐오, 고연령층의 젊은 세대에 대한 편견 등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추세 속 세대 간 갈등은 사회 갈등 요소의 한 부분으로서 작동될 것임. 특히 부산은 고연령층 비율이 높으므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대 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 또한 기초연금 수령 비중도 전국에서 가장 높고 노인 세대에서도 경제적 양극화가 심한 편이라고 판단됨. 요양병원은 많지만 장기요양시설은 적고 공실률도 높은 편임.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기초수급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등) 예를 들어 부산에서는 노인시설에 대한 혐오가 강하다고 평가됨.
	성별 불평등	●	아직 부산사회에 남아있는 가부장성, 여혐, 남혐과 같은 사회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경향을 보임. 부산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에 대한 이슈가 도출되어도 흥미로울 것임.
	소득수준에 따른	●	기존 연구를 참조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요소 중 가장

구분		분류체계 반영 여부	상세 내용
	갈등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소득에 의한 갈등이라 할 수 있음. 특히 부산 또한 신도시와 고가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원주민과 이주민들의 사회경제적 갈등이 보이지 않게 존재함.
	남북교류에 대한 인식	●	앞서 북한이탈주민과 연계된 질문일 수 있으나, 향후 남북교류가 활발해 질 것을 대비한 사회갈등요소 문항으로 구성되어도 괜찮음.
	지역 갈등	●	아직 보이지 않는 영호남간 지역갈등이 존재함 또한 부산사회에는 부산지역만의 자부심(우월성)이 존재하여 타 지역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종교	×	종교 또한 공동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나, 종교관련 문화다양성 활동을 진행하기에는 현재 사회분위기로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독신가구 증가	×	독신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나 독신가구를 소수집단이나 사회갈등요소로 보는 것에 대한 논의가 추후 필요
기타	소수문화, 문화소외 관련 (독립문화, 전통문화 등)	×	본 연구의 방향을 고려할 때 소수문화는 제외하기로 함.

5. 2차 자문위원 회의

5.1.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 1차 자문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설문 초안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지표 분류체계를 다듬었으며 일부 지표는 삭제, 추가됨.

□ 2차 및 3차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용어를 최종적으로 점검함.

<표 Ⅲ-5> 부산 문화다양성 분류체계를 위한 2차 자문회의 내용 요약

구분		1차 자문회의	2차 자문회의	설문 참고 문헌 및 기타
소수집단	외국인 근로자	●	●	문화관광연구원(2017) 문항 참조
	결혼 이주민	●	●	문화관광연구원(2017) 문항 참조
	이주민의 자녀	●	●	
	외국인 유학생	●	●	
	장애인	●	●	문화관광연구원(2017) 문항 참조
	북한이탈주민	●	●	문화관광연구원(2017) 문항 참조
	성소수자	●	●	문화관광연구원(2017) 문항 참조
	난민	△	●	실질적으로 부산 내 난민은 극소수라 현실에서 부딪히게 될 경우는 적으나, 예멘난민 등 국내 사회적 이슈, 글로벌 이슈 등 장기적으로 닥쳐올 수 있는 소수집단이라는 점에서 추가하기로 함.
사회 갈등 요소	세대 간 갈등	●	●	World Value survey 문항 참조
	성별 불평등	●	●	문화관광연구원(2017) 문항 참조 World Value survey 문항 참조
	소득수준에 따른 갈등	●	●	
	남북교류에 대한 인식	●	×	남북교류에 대한 연구는 최근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자료가 있으므로 기본적인 인식차이는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만 진행하고, 본 연구의 주제 및 설문의 양을 검토해 보았을 때 남북교류관련 인식은 차기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종과의 갈등	—	●	여성가족부(2015) 문항 참조 소수집단 문제 뿐 아니라 사회갈등 요소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함

구분		1차 자문회의	2차 자문회의	설문 참고 문헌 및 기타
	지역 갈등	●	●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	—	●	일반적으로 국내 사회갈등에서는 항상 경제적, 소득수준에 따른 갈등요소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오지만 부산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도권과의 차별에 대한 보이지 않는 민감성이 존재함.
전반적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	●	전반적인 부산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 문화관광연구원(2017) 문항 참조

5.2. 문화다양성 문항 설계

- 2차 자문회의에서는 분류체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할 상세지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예를 들어 소수집단의 경우 기존 유사연구에서는 각 소수집단별 인지도, 관심도, 필요도, 수용도, 포용도 등 다양한 내용을 구성하였으나 각 연구의 조사 결과 내용을 토대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문항만을 추출하였음.
- 예를 들어 소수집단 수용도에서는 각 소수집단에 대한 지인, 동네이웃, 동료, 가족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문항을 반복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동네이웃과 가족 2항목에 대해서만 질문하였음.
- 사회갈등현상에 대한 인식은 기존 연구에서 참고할 만한 지표가 많지 않아 언론기사나 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일부 새롭게 구성하였음.

<표 III-6> 부산 문화다양성

구분		주요 내용
소수집단	소수집단 접촉 경험	각 소수집단별 접촉 경험 정도
	소수집단 인식지표 - <수용도>	각 소수집단별 동네이웃 및 가족으로서의 수용도
	소수집단 인식지표 - <포용도>	각 소수집단의 사회적 차별정도 인식
	소수집단 활동지표	다문화, 장애인, 성소수자, 성별 불평등 관련 경험
사회 갈등 요소	사회갈등현상 인식지표	각 사회갈등 현상 문항에 대한 인식정도
	사회갈등현상 인식지표 - <수용도>	성별 불평등, 세대 간 갈등 수용도

구분		주요 내용
	활동수준에 따른 연령대 수용도	동호회, 문화센터 프로그램, 공간 및 안부인사 가능한 연령대
	사회갈등현상 개선필요도	6개 사회갈등현상 개선필요도
전반적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문화다양성 관련 5개 문항 인식정도

6. 조사 수행 방법

6.1. 조사 대상 선정

- 조사 대상은 부산시 거주 시민으로 부산시 거주 최소 1년 이상 된 만 15세 이상 ~ 70세 남녀로 한정함. 부산에 잠시 출장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함.
- 본 조사결과에서 비교할 2017년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0대의 문화다양성 관련 인식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 문화다양성 관련 조사이기는 하지만 일반 시민의 의견만을 파악하고자 함. 즉 조사의 문항 대상인 소수집단을 위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함. 일단 민감한 이슈로 인해 접근가능성이 어렵고, 한정된 기간 내 자료수집의 난항이 예상되었으며 문화다양성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의 초점이 주로 일반 시민이기 때문임.

6.2. 조사 방법 및 표본 설계

-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 방법은 온라인 조사를 기반으로 하되, 온라인 조사가 어려운 연령층(10대, 50대 이상)은 면접조사로 진행하였음.
- 조사대상 선정은 연령과 성별, 지역에 따른 비례할당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지역할당의 경우 구별 할당을 진행하였음.

<표 III-7> 설문조사를 위한 성·연령별 구성비 및 사례수

구분		2015년 인구 구성비(%)			사례수(명)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연령	15-19세	6.5	3.4	3.2	79	41	38
	20-29세	14.3	7.1	7.3	172	85	87
	30-39세	16.7	8.5	8.2	201	102	99
	40-49세	18.2	8.5	9.8	219	102	117
	50-59세	21.1	10.1	11.0	254	121	133
	60-69세	14.7	7.0	7.7	175	84	91
	70-79세	8.3	3.6	4.6	100	44	56
합계		100.0	48.2	51.8	1200	579	621

<표 Ⅲ-8> 설문조사를 위한 권역별 구성비 및 사례수

권역	구	2015년 인구 구성비(%)		사례수(명)
원도십	중구	1.3	10.8	128
	서구	3.2		
	동구	2.6		
	영도구	3.7		
중부산권	부산진구	11.0	25.2	302
	연제구	6.0		
	남구	8.2		
북부산권	금정구	7.1	23.6	283
	동래구	7.7		
	북구	8.8		
동부산권	해운대구	11.9	21.3	258
	수영구	5.1		
	기장군	4.3		
서부산권	강서구	2.5	19.1	229
	사상구	6.9		
	사하구	9.7		
합계		100	100	1,200

IV. 부산 문화다양성 설문조사 결과분석

1. 부산 문화다양성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2. 문화다양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
3. 소수집단 접촉 경험
4. 소수집단 활동 경험
5. 소수집단 차별에 대한 인식
6. 소수집단 수용 의향
7. 사회갈등 현상에 대한 인식
8. 사회갈등 현상 개선 필요도

IV 부산시 문화다양성 설문조사 결과분석

- 부산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는 부산 거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상세한 조사 설계는 아래와 같음.

<표 VI-1> 설문조사 설계

- 자료수집 방법 : 구조화된 설문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및 대면면접 조사 병행
- 자료수집 기간 : 2019년 3월 6일 ~ 3월 17일
- 설문조사 대상자 : 2019년 조사 진행시점 기준 15~79세 최소 1년 이상 부산 거주자
- 총 표본 수 : 1,200명
- 표본추출방법 : 성, 연령, 지역에 따른 비례할당 표본추출(Quota Sampling)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 $\pm 2.8\%$

1. 부산 문화다양성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1. 응답자 특성 종합

- 부산시 인구통계 비율을 적용한, 성, 연령, 지역에 따른 결과 이외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약 39.4%가 사무직 종사자였으며 블루칼라 종사자 18.4%, 주부 17.3%가 응답하였음.
- 부산시 거주기간은 평균 약 33년이었으며 주관적 경제수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본인 또는 가구의 소득수준이 중하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45.8%로 가장 많았음.
- 개인의 인구통계 특성에 따라 문화다양성 인식이 서로 다른 결로 나타나고 있으며 뒤의 상세 분석결과에서 이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표 VI-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결과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합계	(1,200)	100.0
성별	남	(579)	48.3
	여	(621)	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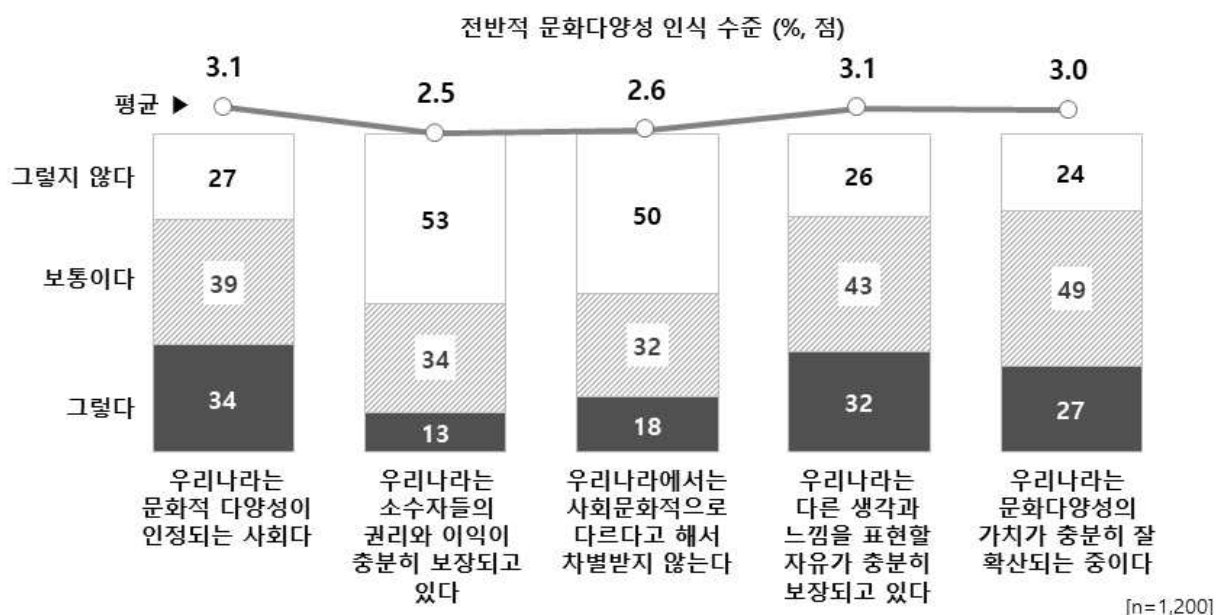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비율(%)
연령	10대		(79)	6.6
	20대		(172)	14.3
	30대		(201)	16.8
	40대		(219)	18.3
	50대		(254)	21.2
	60대		(175)	14.6
	70대		(100)	8.3
혼인여부	미혼		(458)	38.2
	기혼		(683)	56.9
	기타		(59)	4.9
지역	원도심		(128)	10.7
	중부산권		(302)	25.2
	북부산권		(283)	23.6
	동부산권		(258)	21.5
	서부산권		(229)	19.1
직업	학생		(159)	13.3
	주부		(207)	17.3
	사무직		(473)	39.4
	생산, 기능, 판매, 서비스업		(221)	18.4
	기타		(140)	11.7
최종학력	중졸이하		(103)	8.6
	고졸		(276)	23.0
	대졸이상		(821)	68.4
가족구성형태	1인 이하		(176)	14.7
	2인		(170)	14.2
	부부+자녀		(735)	61.3
	3대 및 기타		(119)	9.9
주관적 경제상태	하+중하		(550)	45.8
	중		(493)	41.1
	중상+상		(140)	11.7
	기타(응답거절)		(17)	1.4
부산거주년수			평균 33년	
소수 집단 활동 경험	성소수자	있음	(47)	3.9
		없음	(1153)	96.1
	장애인	있음	(373)	31.1
		없음	(827)	68.9
	다문화	있음	(240)	20.0
		없음	(960)	80.0
	성별 불평등	있음	(88)	7.3
		없음	(1112)	92.7
해외 경험	해외여행	있음	(950)	79.2
		없음	(250)	20.8
	해외유학, 근무	있음	(154)	12.8
		없음	(1046)	87.2
최근 1년간 문화예술 경험		있음	(1068)	89.0
		없음	(132)	11.0

2. 문화다양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

2.1. 문화다양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 종합 결과

부산시민의 약 30%정도가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 부산 응답자의 약 30% 정도만이 우리나라는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고, 가치가 잘 확산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소수자들의 권리 측면에서는 약 13%의 응답자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함.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은 아직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음.



[그림 VI-1] 부산시민의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수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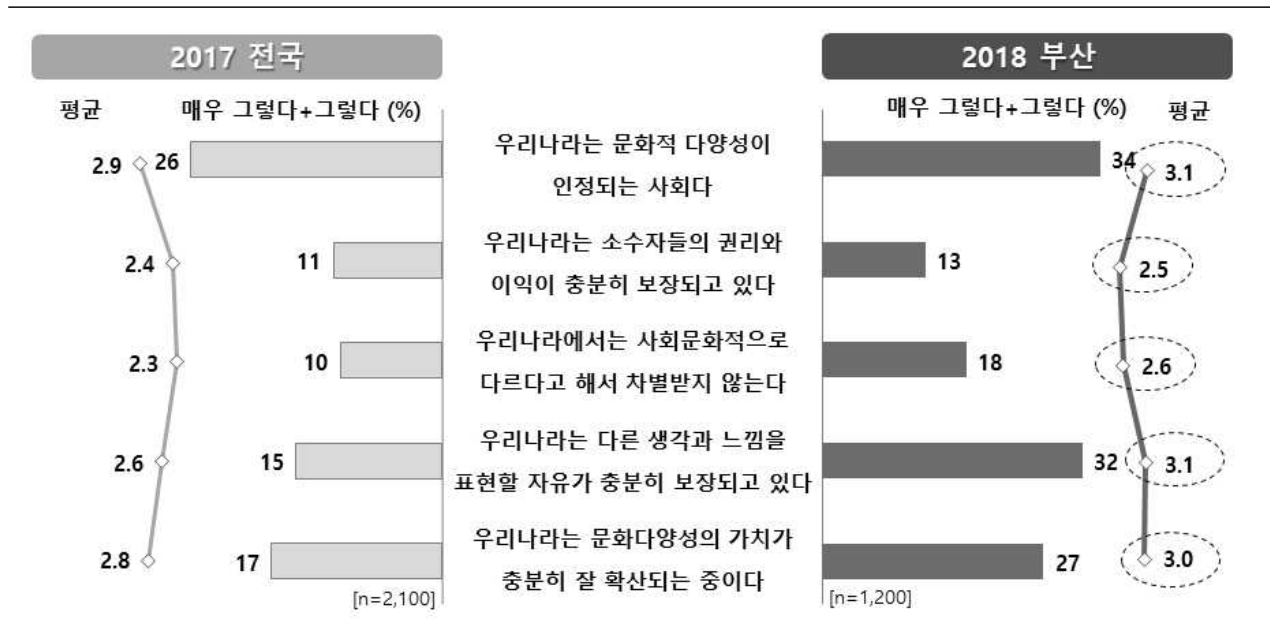
2.2. 전국 대비⁶⁾ 부산시 문화다양성 전반적 인식 비교

전국 대비 부산시민은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상황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

- 전국과 부산 모두 각 문항에 대한 긍정률이 높은 편은 아님.

6) 문화체육관광부(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 2017년 시행된 전국조사 자료와 비교해볼 때, 부산은 전국보다 우리나라 문화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이었음.
- 즉,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한 문항의 경우 전국조사에서는 15%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부산조사에서는 32%가 응답하여 약 2배 이상의 인식 차이를 보임.



[그림 VI-2] 전반적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비교

※ 상기 동그라미 표시는 95% 신뢰구간 기준 평균차이가 유의미함을 뜻함.

2.3. 세부집단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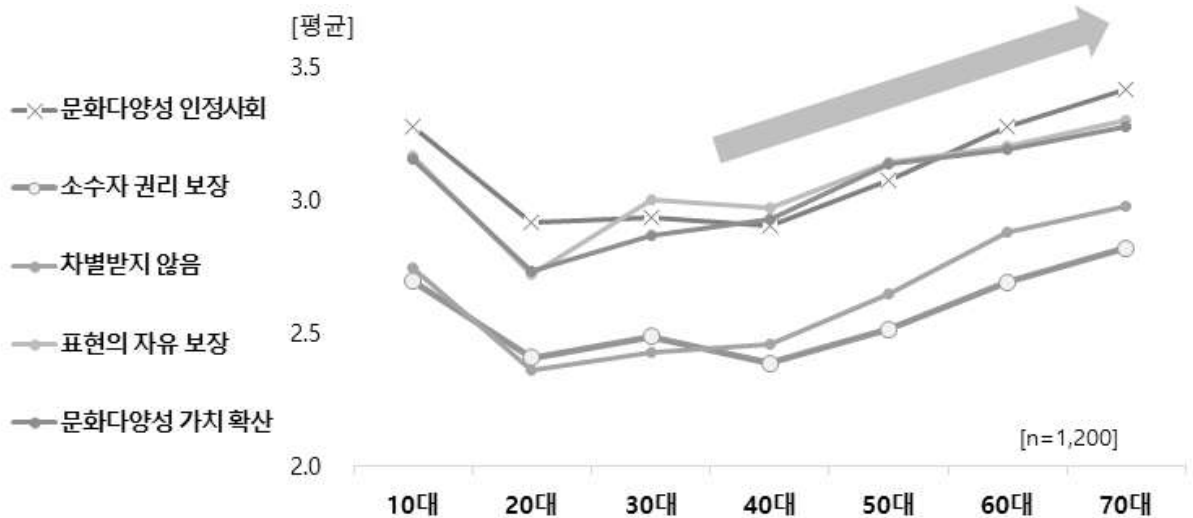
- ☞ 연령이 높을수록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수준에 대한 긍정응답률이 높아짐.
- ☞ 여성보다는 남성이,
- ☞ 미혼보다는 기혼집단에서,
- ☞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 ☞ 학력이 낮을수록,
- ☞ 전업주부일수록,
- ☞ 소수집단 활동경험이나, 해외 유학, 근무경험이 없을수록 긍정률이 높아짐.

2.3.1. 연령대별 문화다양성 인식 차이

□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문화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문화다양성 인식수준을 확인하는 5개 문항 중, ‘소수자 권리보장’, ‘차별받지 않음’ 문항에 대한 동의도와 나머지 3개 항목(‘문화다양성 인정사회’, ‘표현의 자유보장’, ‘문화다양성 가치확산’)등 가치를 지향하는 문항에 대한 동의도에서 차이가 나타남.

－ 이러한 경향은 연령대별로 유사하게 차이가 나타나는데, ‘차별받지 않음’ 항목의 경우 50대 이상이 타 연령대에 비해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그림 VI-3]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수준에 대한 인식_연령에 따른 차이

2.3.2. 성×연령별 문화다양성 인식 차이

□ 10대와 60대에서 같은 연령대간 성별에 따라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의 차이 나타남.

－ 10대 남성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구간에서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수준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문화다양성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데에 비해 60대 여성은 60대 남성보다 문화다양성의 현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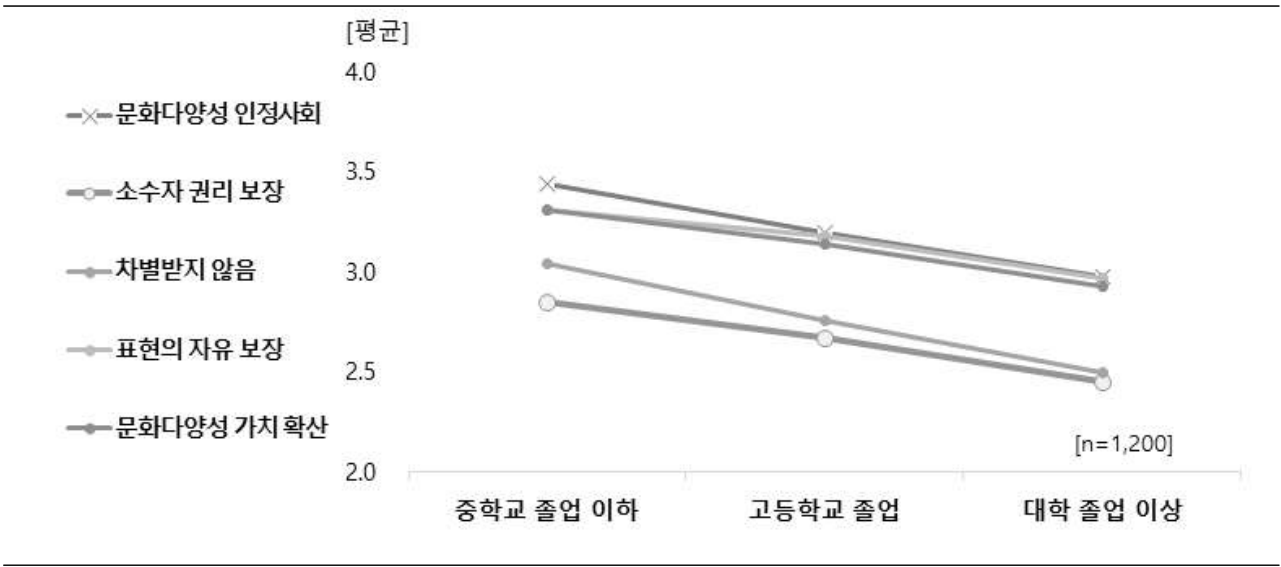
<표 VI-3> 전반적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긍정 %)_연령×성별 차이 비교

연령×성별	우리나라는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다	우리나라는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장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다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다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10대 남성	<u>43.9</u>	<u>24.4</u>	<u>29.3</u>	<u>39.0</u>	<u>36.6</u>
10대 여성	34.2	10.5	10.5	31.6	23.7
20대 남성	31.8	14.1	17.6	22.4	18.8
20대 여성	27.6	10.3	12.6	21.8	19.5
30대 남성	31.4	8.8	15.7	36.3	24.5
30대 여성	24.2	11.1	11.1	21.2	17.2
40대 남성	19.6	7.8	10.8	27.5	22.5
40대 여성	26.5	7.7	10.3	23.1	18.8
50대 남성	26.4	15.7	19.8	38.8	33.9
50대 여성	38.3	9.8	15.8	32.3	30.1
60대 남성	35.7	15.5	19.0	36.9	28.6
60대 여성	<u>56.0</u>	<u>17.6</u>	<u>37.4</u>	<u>42.9</u>	<u>45.1</u>
70대 남성	<u>54.5</u>	<u>20.5</u>	<u>22.7</u>	<u>52.3</u>	<u>45.5</u>
70대 여성	<u>50.0</u>	16.1	<u>23.2</u>	30.4	23.2

2.3.3. 학력 수준별 문화다양성 인식 차이

□ 학력이 높을수록 우리나라 문화다양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에 대해 3.5점(5점 만점) 미만의 낮은 동의도를 보이나, 중졸 이하 학력수준인 층이 대졸 이상 학력수준인 층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대학 졸업 이상 학력수준을 보유한 층에서는 우리 사회가 ‘소수자 권리 보장’, ‘차별받지 않음’ 등 소수자 권리 및 차별에 대한 인식이 나머지 가치 지향적인 3개 문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VI-4]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수준에 대한 인식_학력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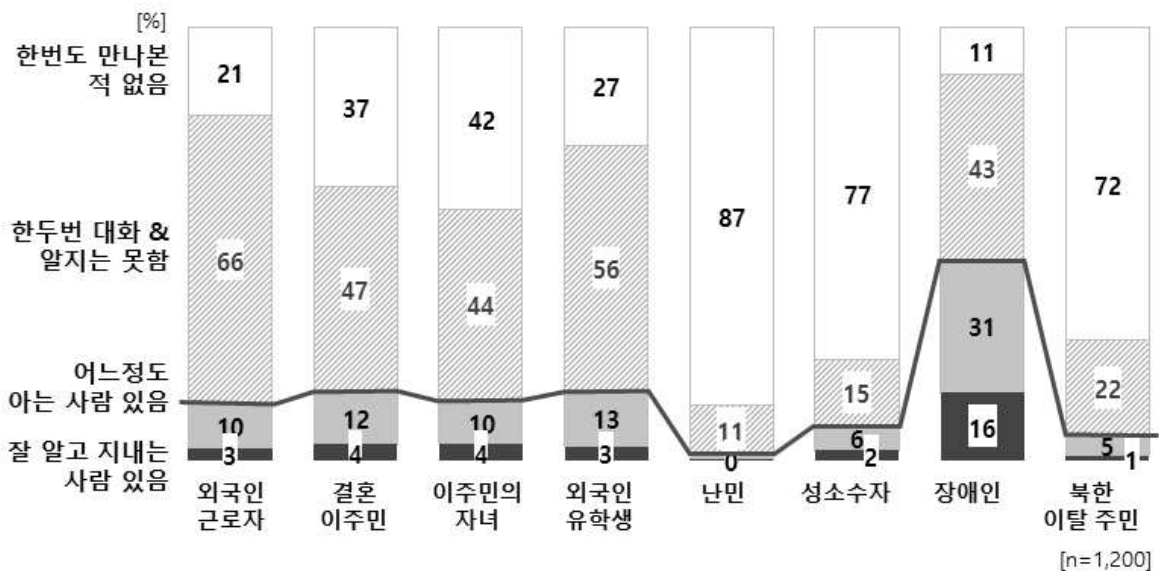
3. 소수집단 접촉 경험

3.1. 소수집단 접촉 경험 종합 결과

장애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접촉률은 약 10% 수준임.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난민 접촉 경험은 매우 미미한 편

- 8개 군의 소수집단 중 가장 접촉 경험이 많은 집단은 ‘장애인’임.
- 외국인 소수집단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의 자녀, 외국인 유학생) 경험정도(잘 알고 지내는 사람 있음+어느 정도 아는 사람 있음)는 약 15% 내외임.
- 상대적으로 접촉경험이 적은 집단은 ‘북한이탈주민’과 ‘난민’, ‘성소수자’임.

문) 다음 각 소수집단별로 귀하의 경험을 체크해 주십시오.



[그림 VI-5] 부산시민 전반적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3.2. 세부집단별 분석

- ☞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주민 접촉은 30~50대의 남성 집단, 서부산권 거주자의 접촉률이 높으며,
- ☞ 이주민 자녀는 20대 학생이나, 50대에서 높음.
- ☞ 외국인 유학생 접촉률은 20~30대 미혼, 학생층, 원도심 거주자에서 높게 나타남.
- ☞ 성소수자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접촉률 자체가 낮으나 연령이 낮은 미혼 학생, 1인 가구 거주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3.2.1. 성×연령대별 소수집단 접촉 경험

□ 연령대별 생활양상이 달라, 그에 따른 소수집단 접촉 경험률 차이가 나타남.

– 30~50대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과 같은 성인과 접촉 경험률이 높은 반면, 이주민의 자녀나 외국인 유학생은 10대나 20대에서도 높은 접촉 경험률을 보임.

– 특징적으로 성소수자와의 접촉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10~30대로, 30대 이상에서의 접촉 경험률이 현저히 낮아짐.

□ 동일 연령대에서도 성별에 따라 소수집단 접촉 경험률 차이가 있음.

– 10대/20대 여성이 성소수자에 대한 접촉경험률이 10대/20대 남성보다 높음.

– 30대 남성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민, 외국인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소수집단과의 접촉 경험이 30대 여성에 비해 높은 편임.

<표VI-4> 소수집단 접촉 경험률(%)-연령별 비교

연령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의 자녀	외국인 유학생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10대	5.1	13.9	<u>17.7</u>	<u>21.5</u>	5.1	<u>19.0</u>	40.5	<u>11.4</u>
20대	11.6	15.7	<u>15.7</u>	<u>32.0</u>	2.3	<u>22.1</u>	37.2	4.1
30대	<u>17.4</u>	<u>17.4</u>	<u>12.4</u>	<u>26.4</u>	2.0	<u>13.4</u>	41.3	7.5
40대	<u>13.7</u>	<u>18.7</u>	<u>14.2</u>	10.0	2.7	3.7	36.1	4.6
50대	<u>15.4</u>	<u>18.5</u>	<u>18.5</u>	13.4	1.2	2.4	<u>54.7</u>	7.9
60대	9.7	13.1	9.1	5.1	—	0.6	<u>61.7</u>	1.7
70대	13.0	9.0	8.0	4.0	—	—	<u>52.0</u>	6.0

※ 주 : 상기 수치는 접촉 경험률(각 소수집단별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사람 있음 + 잘 알고 지내는 사람 있음)을 의미함.

<표VI-5> 소수집단 접촉 경험률(%)-연령×성별 차이 비교

연령×성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의 자녀	외국인 유학생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10대 남성	4.9	14.6	17.1	17.1	4.9	12.2	41.5	9.8
10대 여성	5.3	13.2	18.4	<u>26.3</u>	5.3	<u>26.3</u>	39.5	13.2
20대 남성	14.1	16.5	14.1	31.8	2.4	14.1	38.8	5.9
20대 여성	9.2	14.9	17.2	32.2	2.3	<u>29.9</u>	35.6	2.3
30대 남성	<u>26.5</u>	<u>20.6</u>	12.7	<u>35.3</u>	3.9	12.7	45.1	<u>11.8</u>

연령×성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의 자녀	외국인 유학생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30대 여성	8.1	14.1	12.1	17.2	0.0	14.1	37.4	3.0
40대 남성	16.7	17.6	15.7	14.7	2.9	5.9	38.2	4.9
40대 여성	11.1	19.7	12.8	6.0	2.6	1.7	34.2	4.3
50대 남성	15.7	20.7	19.0	13.2	0.8	1.7	52.9	9.9
50대 여성	15.0	16.5	18.0	13.5	1.5	3.0	56.4	6.0
60대 남성	14.3	19.0	11.9	6.0	0.0	0.0	61.9	1.2
60대 여성	5.5	7.7	6.6	4.4	0.0	1.1	61.5	2.2
70대 남성	6.8	6.8	6.8	4.5	0.0	0.0	54.5	4.5
70대 여성	17.9	10.7	8.9	3.6	0.0	0.0	50.0	7.1

※ 주 : 상기 수치는 접촉 경험률(각 소수집단별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사람 있음 + 잘 알고 지내는 사람 있음)을 의미함.

3.2.2. 직업별 소수집단 접촉 경험

□ 직업에 따른 소수집단 접촉 경험률 차이가 나타남.

- 학생들이 이주민의 자녀, 외국인 유학생 등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소수집단에 대한 접촉 경험률이 높으며, 특징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접촉경험률 또한 다른 층에 비해 높음.
- 사무직/블루칼라 등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층들이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주민을 접촉하는 경험이 높은 편임.
- 주부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접촉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VI-6> 소수집단 접촉 경험률(%)_직업별 비교

연령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의 자녀	외국인 유학생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학생	8.2	13.8	19.5	27.0	3.1	15.7	37.7	7.5
주부	9.7	11.1	8.2	5.8	-0	1.0	51.2	3.9
사무직	14.4	16.9	14.6	18.0	1.7	8.0	43.6	5.7
블루칼라	18.6	19.9	14.5	17.2	2.3	9.0	46.6	8.1
기타	11.4	17.1	13.6	11.4	2.1	7.1	58.6	3.6

4. 소수집단 활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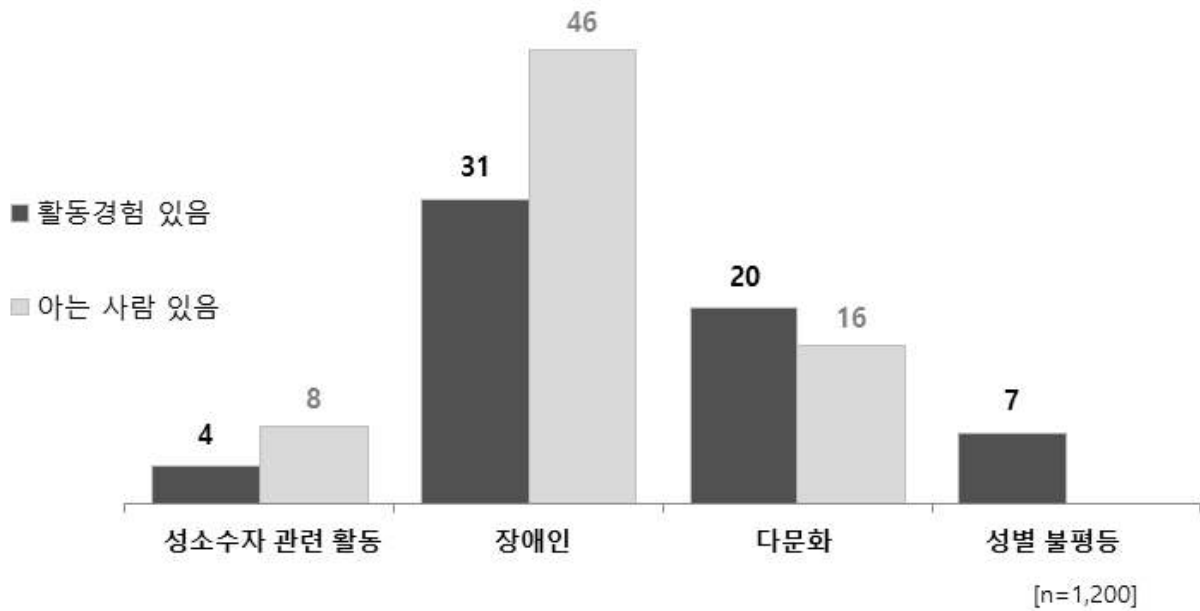
4.1. 소수집단 활동 경험 종합 결과

장애인·다문화 관련 축제/교육/자원봉사 참여경험 20% 이상

- 성소수자, 장애인, 다문화, 성별불평등 관련 활동 참여를 확인한 결과, 장애인 > 다문화 > 성별불평등 > 성소수자 관련 활동으로 나타남.
- 소수자를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보다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다문화의 경우에만 관련 행사 참여율이 높음.

문) 지금까지 다음 활동에 참여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관련 축제참여, 교육, 자원봉사 등)

* 성별불평등 관련하여 아는 사람 있음 항목은 질문하지 않음



[그림 VI-6] 부산시민 전반적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4.2. 세부집단별 분석

4.2.1. 연령대별 소수집단 활동 경험 차이

□ ‘소수집단 활동 경험’은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소수집단 관련 활동 경험은 주로 10~20대에 집중되어 있음. 이는 학교에서의 다양한 봉사활동이나 관심 분야에 대한 열린 마음 등이 더 작용한 결과로 추정됨.
-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성소수자’나 ‘성별 불평등’ 관련 활동 경험률은 매우 낮은 편임.

<표 VI-7> 소수집단 활동 경험(%)_연령별 분석

연령	성소수자 활동 경험		장애인 관련 활동 경험		다문화 관련 활동 경험		성별 불평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0대	<u>10.1</u>	89.9	<u>45.6</u>	54.4	<u>27.8</u>	72.2	<u>15.2</u>	84.8
20대	<u>9.9</u>	90.1	<u>41.9</u>	58.1	<u>34.9</u>	65.1	<u>12.2</u>	87.8
30대	<u>5.5</u>	94.5	34.3	65.7	<u>22.9</u>	77.1	8.0	92.0
40대	2.7	97.3	26.5	73.5	15.1	84.9	4.6	95.4
50대	2.0	98.0	31.1	68.9	16.9	83.1	8.7	91.3
60대	—	100.0	24.6	75.4	13.1	86.9	1.7	98.3
70대	—	100.0	16.0	84.0	13.0	87.0	4.0	96.0

주) 전체 응답자 (n=1,200)

4.2.2. 성×연령대별 소수집단 활동 경험 차이

□ 10대, 20대 여성이 적극적으로 소수집단 활동을 하는 편임.

- 10대, 20대 여성은 성소수자, 장애인, 다문화, 성별불평등 관련 활동 경험이 모든 연령×성별 집단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특히, 성소수자 활동이나 성별불평등 활동 참여 경험은 10대/20대 남성에 비해 10대/20대 여성의 참여경험이 높음.
- 반면, 10대 남성은 장애인 관련 활동 경험이 여성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은 편이고, 20대 남성은 다문화 관련 활동 경험이 높은 편임.

□ 30대 남성, 50대 여성의 소수집단 활동 참여경험에 주목할 필요 있음.

- 연령이 높을수록 소수집단 활동 참여경험이 낮아지는 반면, 50대 여성의 경우 장애인, 다문화, 성별불평등 활동 관련 참여경험이 50대 남성에 비해 높음.

- 또한, 20대 이후로 30대, 40대 여성에게서 급격히 감소된 소수집단 활동 경험이 50대에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남. 이는 30대/40대 결혼, 육아, 경제활동 등에 바쁜 여성들이 50대 이후에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현상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50대 여성 또한 성소수자 활동 경험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성/연령대 집단 중 가장 낮음.

<표 VI-8> 소수집단 활동 경험(%)_연령×성별 분석

연령×성별	성소수자 활동 경험		장애인 관련 활동 경험		다문화 관련 활동 경험		성별 불평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0대 남성	7.3	92.7	<u>48.8</u>	51.2	22.0	78.0	12.2	87.8
10대 여성	<u>13.2</u>	86.8	<u>42.1</u>	57.9	<u>34.2</u>	65.8	<u>18.4</u>	81.6
20대 남성	5.9	94.1	36.5	63.5	<u>32.9</u>	67.1	9.4	90.6
20대 여성	<u>13.8</u>	86.2	<u>47.1</u>	52.9	<u>36.8</u>	63.2	<u>14.9</u>	85.1
30대 남성	8.8	91.2	<u>38.2</u>	61.8	23.5	76.5	9.8	90.2
30대 여성	2.0	98.0	30.3	69.7	22.2	77.8	6.1	93.9
40대 남성	2.9	97.1	24.5	75.5	13.7	86.3	3.9	96.1
40대 여성	2.6	97.4	28.2	71.8	16.2	83.8	5.1	94.9
50대 남성	2.5	97.5	27.3	72.7	14.0	86.0	6.6	93.4
50대 여성	1.5	98.5	<u>34.6</u>	65.4	<u>19.5</u>	80.5	<u>10.5</u>	89.5
60대 남성	—	100.0	23.8	76.2	15.5	84.5	2.4	97.6
60대 여성	—	100.0	25.3	74.7	11.0	89.0	1.1	98.9
70대 남성	—	100.0	15.9	84.1	11.4	88.6	2.3	97.7
70대 여성	—	100.0	16.1	83.9	14.3	85.7	5.4	94.6

4.2.3. 가구구성 형태별 소수집단 활동 경험 차이

□ 10-20대 중, 본인이 속한 가구구성에 따라 소수집단 활동 경험에 차이가 나타남.

- 10-20대 중, 1인 가구 또는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성소수자 활동 및 성별불평등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세대와 같이 거주하는 10-20대는 장애인 및 다문화 관련 활동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음.
- 3세대 거주자의 경우 조부모의 가치관이 10-20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수치를 해석해 보면, ‘성’ 관련 인식에서 보수적인 경향이 활동 경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됨.

<표 VI-9> 소수집단 활동 경험(%)_10~20대 중 가구구성 형태별 분석

10~20대 중 가구구성 형태	성소수자 활동 경험		장애인 관련 활동 경험		다문화 관련 활동 경험		성별 불평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인 가구	<u>8.9</u>	91.1	35.6	64.4	31.1	68.9	<u>11.1</u>	88.9
2세대 가구	<u>11.4</u>	88.6	42.9	57.1	32.0	68.0	<u>14.9</u>	85.1
3세대 가구	3.7	96.3	<u>51.9</u>	48.1	<u>37.0</u>	63.0	7.4	92.6

주) 전체 응답자 (n=1,200)

4.2.4. 소득 및 해외여행 경험별 소수집단 활동 경험 차이

□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은 응답자의 소수집단 관련 활동경험이 더 높음.

- 소수집단의 특징별로 활동 경험이 주관적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일부 나타남.
- 장애인 관련 활동 경험은 주관적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다문화 관련 활동경험은 ‘중’ 이상인 집단과 이하 집단의 차이가 있음.
- 또한, 성소수자 활동이나 성별불평등 관련 활동의 경험은 주관적 소득수준이 ‘중상’이상과 ‘중’이하에서 차이가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응답자가 ‘성’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임.

□ 해외여행이나 유학, 근무 등 해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활동 경험이 더 높음.

- 특히 여행과 같이 짧은 기간의 경험보다도 유학, 근무 등 비교적 장기간 체류한 경험이 있을 경우 활동 경험률이 더 높은 특징을 보임.

<표 VI-10> 소수집단 활동 경험(%)_주관적 소득수준별 분석

주관적 소득수준	성소수자 활동 경험		장애인 관련 활동 경험		다문화 관련 활동 경험		성별 불평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중하/하	2.5	97.5	<u>27.6</u>	72.4	15.1	84.9	6.0	94.0
중	3.9	96.1	<u>31.6</u>	68.4	<u>21.5</u>	78.5	7.1	92.9
중상/상	<u>10.0</u>	90.0	<u>44.3</u>	55.7	<u>32.1</u>	67.9	<u>13.6</u>	86.4

주) 전체 응답자 (n=1,200)

<표 VI-11> 소수집단 활동 경험(%)_해외경험별 분석

해외여행 및 유학, 근무 경험		성소수자 활동 경험		장애인 관련 활동 경험		다문화 관련 활동 경험		성별 불평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해외여행 경험	있음	4.2	95.8	<u>32.3</u>	67.7	<u>21.6</u>	78.4	7.6	92.4
	없음	2.8	97.2	26.4	73.6	14.0	86.0	6.4	93.6
해외유학, 근무 경험	있음	<u>11.0</u>	89.0	<u>35.7</u>	64.3	<u>33.1</u>	66.9	<u>12.3</u>	87.7
	없음	2.9	97.1	30.4	69.6	18.1	81.9	6.6	93.4

주) 전체 응답자 (n=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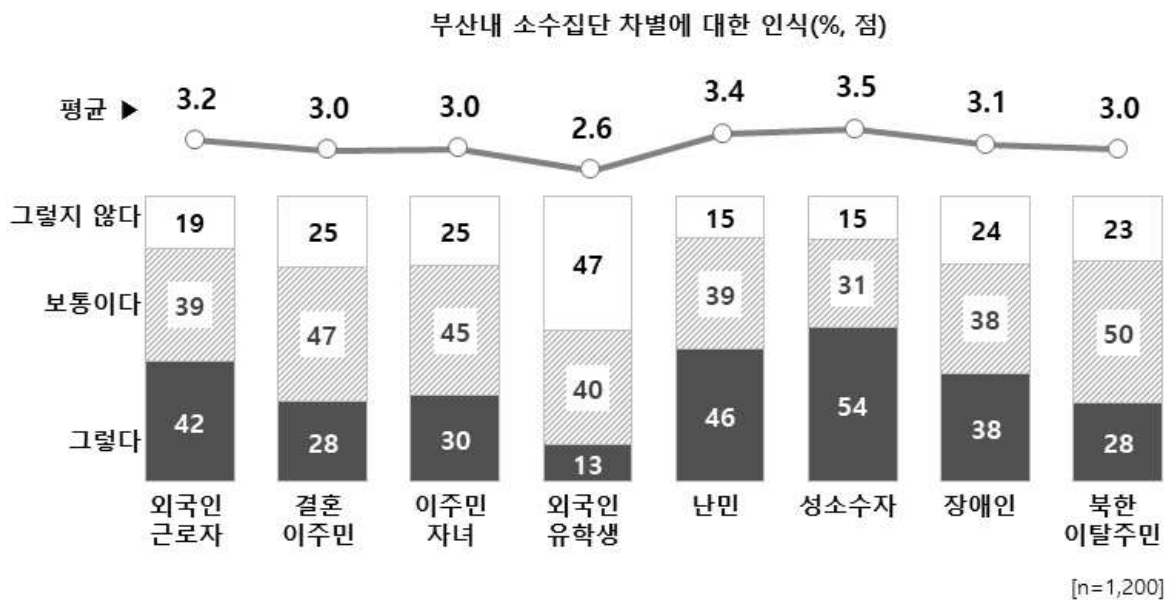
5. 소수집단 차별에 대한 인식

5.1. 소수집단 차별에 대한 인식 종합

부산 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

- 부산에서 가장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되는 소수집단은 ‘성소수자’임. (전체응답자의 54%가 매우 그렇다 + 그렇다 라고 응답)
- 다음은 난민,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순임.
- 상대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13%에 불과함.
- 접촉 경험을 문항에서 난민과 성소수자 경험이 가장 낮았는데 차별에 대한 인식 문항에서는 난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인식이 가장 높았음. 즉 일상생활에서 접촉하기 어려운 소수집단이기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문) 귀하께서는 다음 구성원들이 부산지역사회로부터 차별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VI-7] 부산 내 소수집단 차별에 대한 인식

5.2. 전국 대비 비교

부산시민은 전국대비 소수집단의 사회적 차별에 둔감한 편

- 부산 및 전국 모두 ‘결혼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는 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부산 및 전국 모두 가장 높았음.
- 부산은 각 소수집단이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국대비 낮음.
(8개 군의 소수집단 중 5개만 비교)
- 특히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부산이 38%(매우 그렇다+그렇다)인 반면 전국은 73%로 약 40% 가량 전국대비 낮음.
- 북한이탈주민 또한 부산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8%인 반면 전국은 59%로 상당한 인식차가 존재하고 있음.

문) 귀하께서는 다음 구성원들이 부산지역사회로부터 차별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VI-8] 소수집단 차별정도 인식

5.3. 세부집단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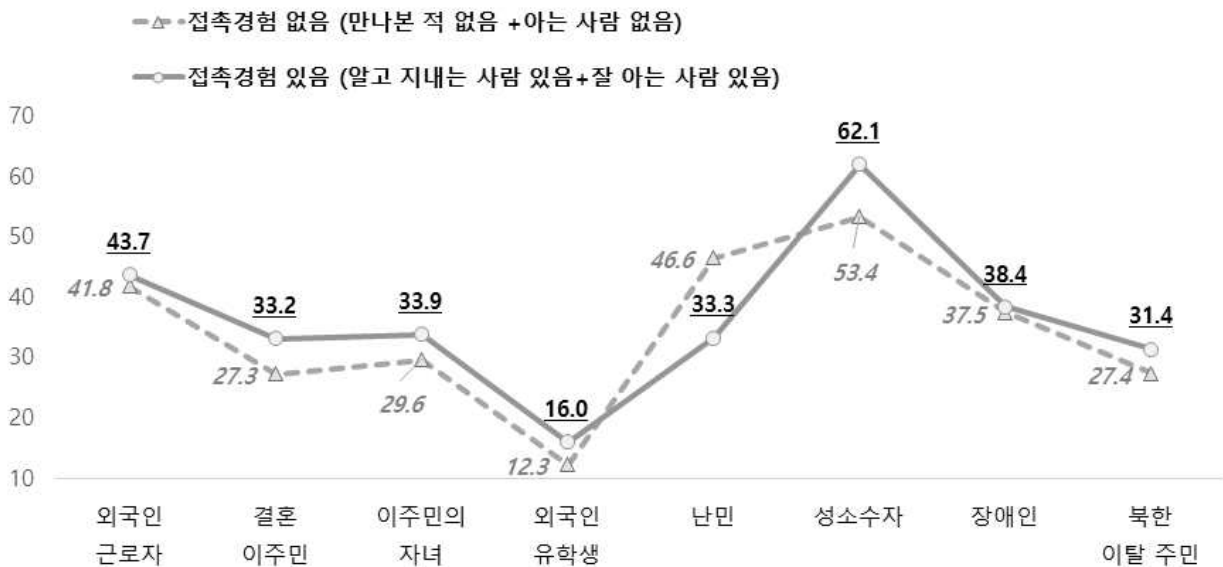
- ☞ 대부분의 세부집단별로 가장 차별인식이 높은 소수집단은 ‘성소수자’와 ‘난민’이었음.
- ☞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고 사무직 종사자, 해외유학이나 근무경험이 있을수록, 소수집단 접촉경험이 있을수록 부산지역 내 소수집단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편임.

- ☞ 특히 ‘성소수자’ 접촉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소수집단 경험자보다도 해당 소수집단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큼.

5.3.1. 소수집단 접촉 경험별 차별에 대한 인식 차이

□ 소수집단 접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소수집단별 차별정도의 인식 정도가 높음

- 소수집단별로 해당 집단을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거나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 만나본 적이 없거나 아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해당 소수집단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음.
- 특히, 결혼이주민, 이주민의 자녀, 성소수자와의 접촉 경험이 해당 소수집단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I-9] 소수집단 차별정도 인식 (그렇다 % + 매우 그렇다 %) - 소수집단별 접촉 경험별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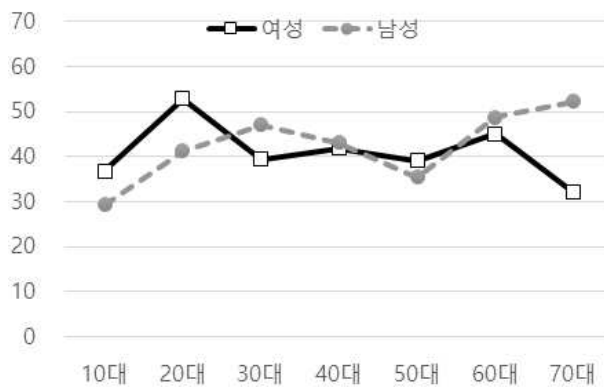
5.3.2. 성×연령별 차별에 대한 인식 차이

□ 소수집단이 받는 차별에 대해 가장 민감한 20대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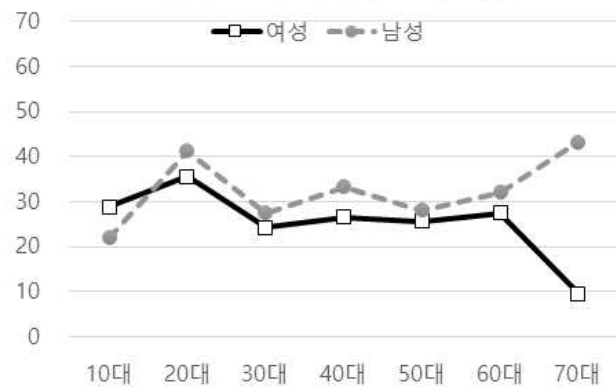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본 조사에서 확인한 8개의 소수집단이 부산 지역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비율이 20대 여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외국인 근로자, 난민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다만, 성소수자가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에서는 20대 여성보다 40-50대 여성이 더 높음.
- 소수집단이 받는 차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민감하지 않은 집단은 70대 여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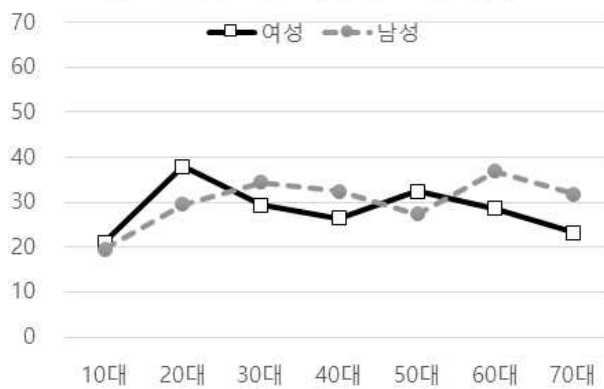
“외국인 근로자는 부산에서 차별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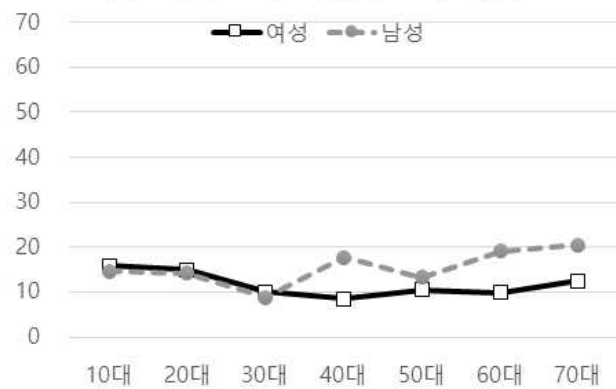
“결혼이주여성은 부산에서 차별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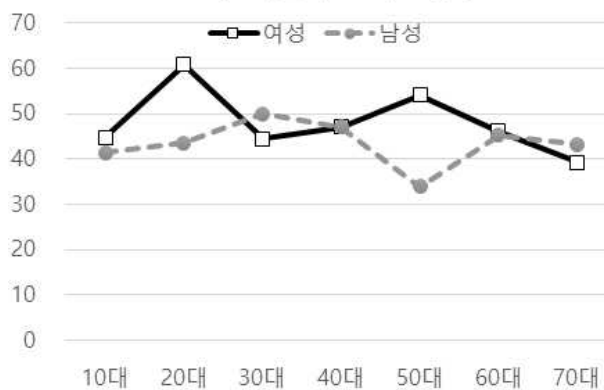
“이주민의 자녀는 부산에서 차별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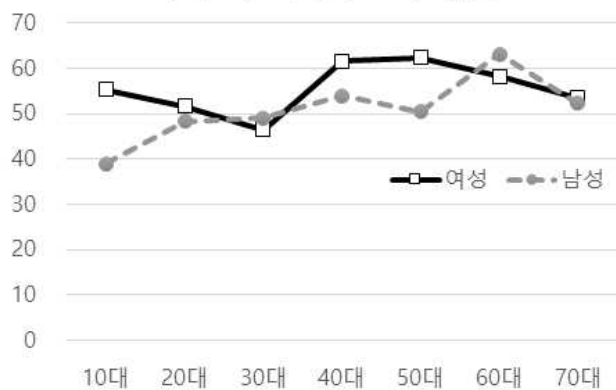
“외국인 유학생은 부산에서 차별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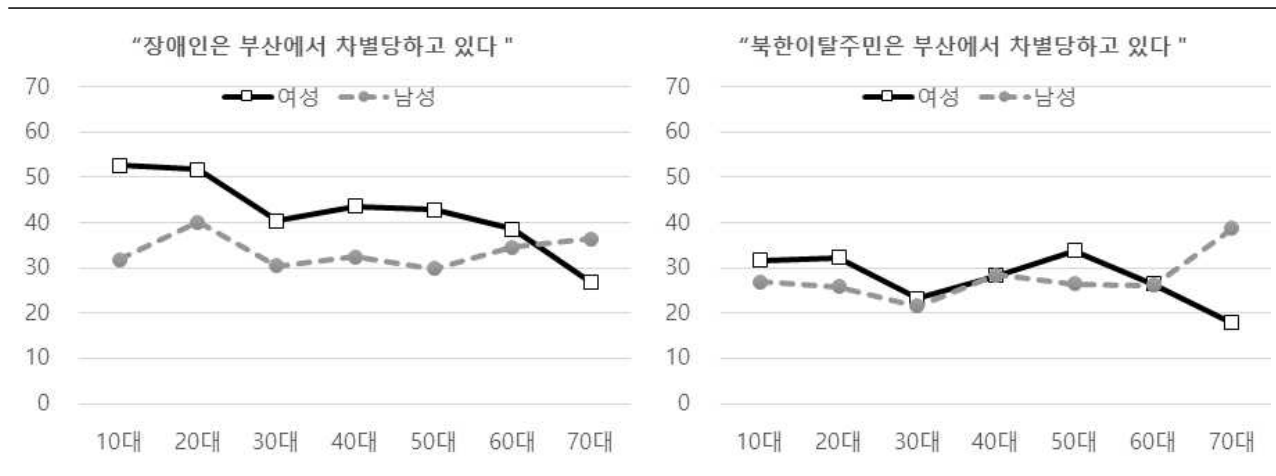


“난민은 부산에서 차별당하고 있다”



“성소수자는 부산에서 차별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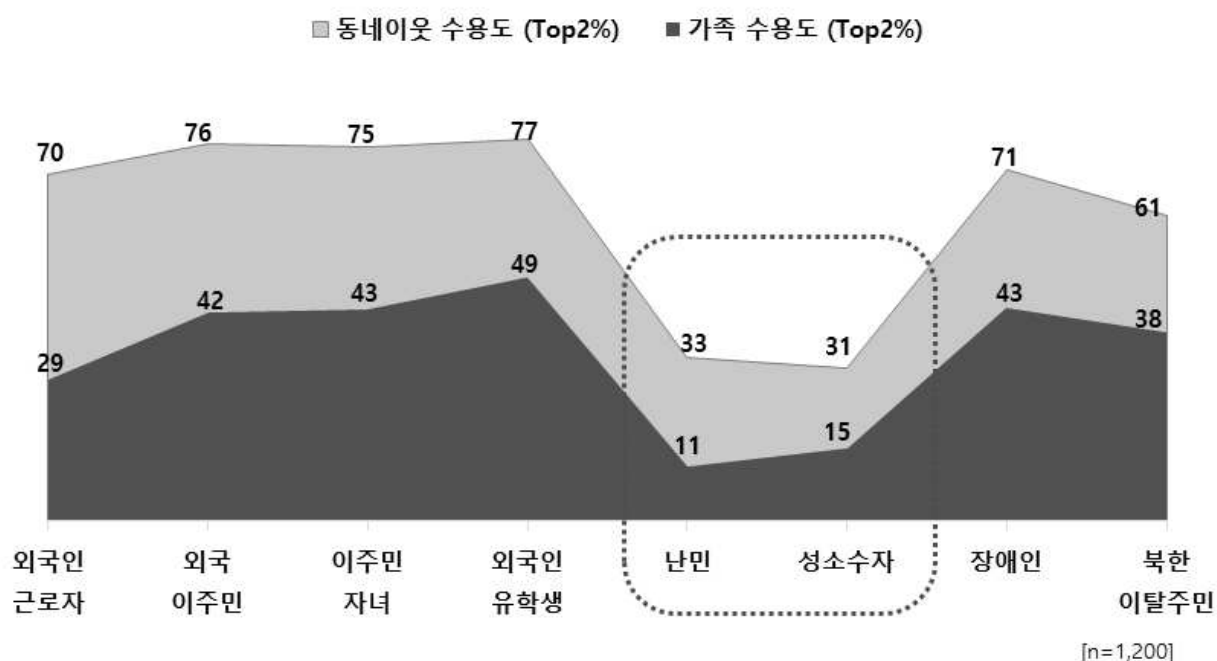
[그림 VI-10] 소수집단 차별정도 인식 (그렇다 % + 매우 그렇다 %) - 성×연령별 차이 분석

6. 소수집단 수용 의향

6.1. 소수집단 수용 의향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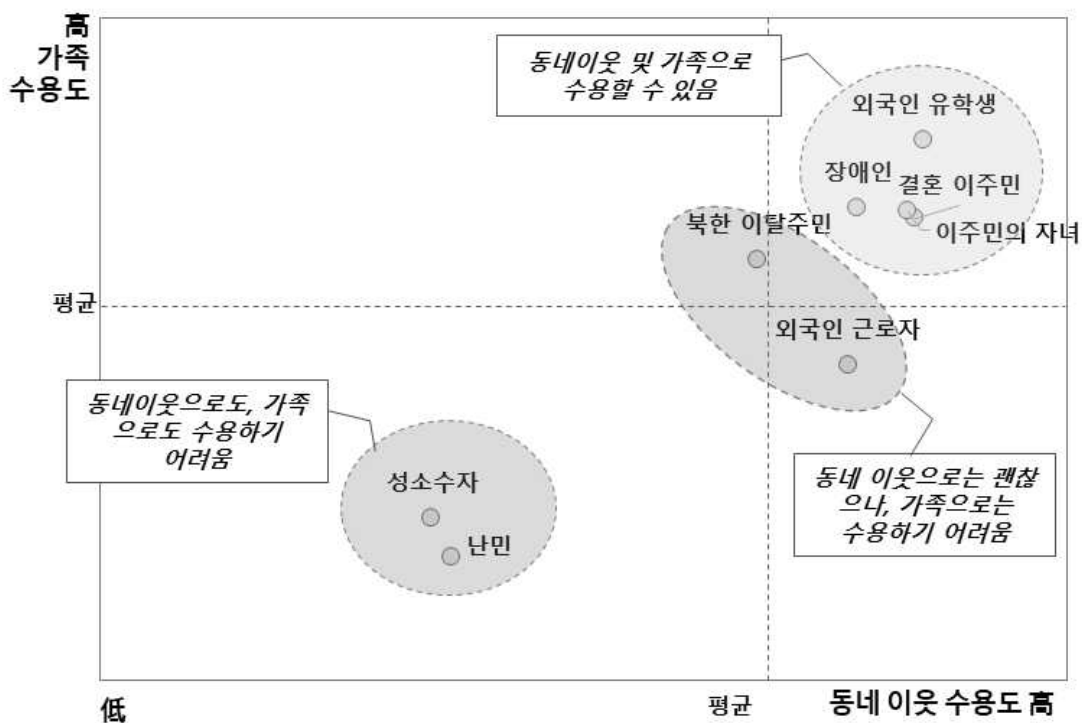
난민 및 성소수자는 아직까지 부산지역에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수용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함. 외국인 중 ‘유학생’ 수용도는 더 높은 편이며 외국인의 특성에 따른 수용도 차이가 확인됨.

- 8가지 소수집단에 대한 ‘동네이웃’과 ‘가족’으로서의 수용도를 질문한 결과 ‘난민 및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됨.
- ‘난민’ 및 ‘성소수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약 10%(매우 그렇다+그렇다 응답 비율) 정도, 동네이웃으로는 약 30% 정도임.
- 반면, 외국인 및 장애인에 대한 동네이웃 수용도는 70% 수준임. 그러나 가족으로서의 수용도는 외국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외국인 유학생’은 상대적으로 가족으로서 수용도가 높은 반면 ‘외국인 근로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는 20%대 정도임. 즉 외국인의 경제적 상황, 출신에 따른 인식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음.



[그림 VI-11] 부산시민 전반적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 가족 및 동네이웃 수용도를 중심으로 수용도를 도식화한 결과, 외국인 유학생 및 장애인, 결혼이주민, 이주민의 자녀는 동네 이웃 및 가족으로서 수용도가 비교적 높은 편임.
- 반면, 외국인 근로자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동네이웃으로는 수용할 수 있으나 가족으로서는 수용도가 낮으며, 성소수자나 난민은 아직까지 부산지역에서 동네이웃이나 가족으로도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그림 VI-12] 동네 이웃 및 가족으로서의 수용도 비교

6.2. 전국 대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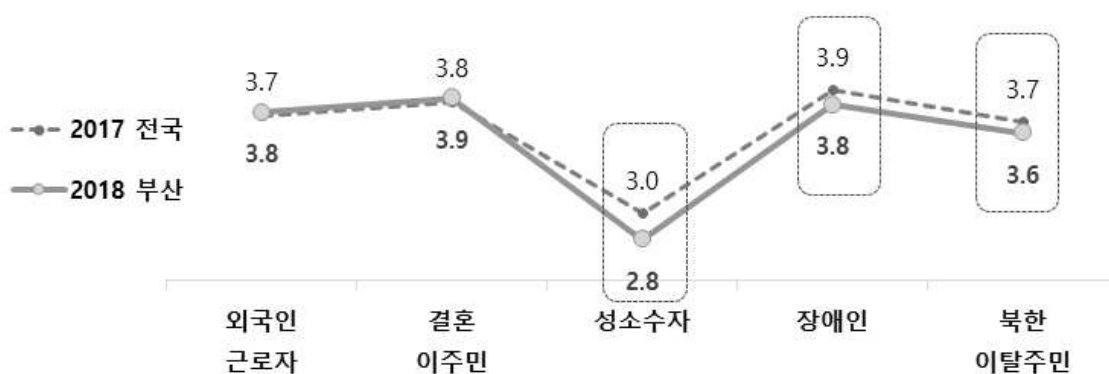
전국대비 부산지역 소수집단 수용도는 낮음. 특히 성소수자는 이러한 경향이 강함

- 2017년 전국조사 대비 부산은 전반적으로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전반적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및 차별 정도에서 전국대비 긍정 비율이 높았으나 구체적인 소수집단 수용도 측면에서는 보수적인 경향이 드러남.
- 동네이웃으로서 ‘성소수자’,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가 전국대비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전국 수치와 비슷했던 ‘결혼이주민’에 대한 수용도 또한 가족 수용도에서 낮아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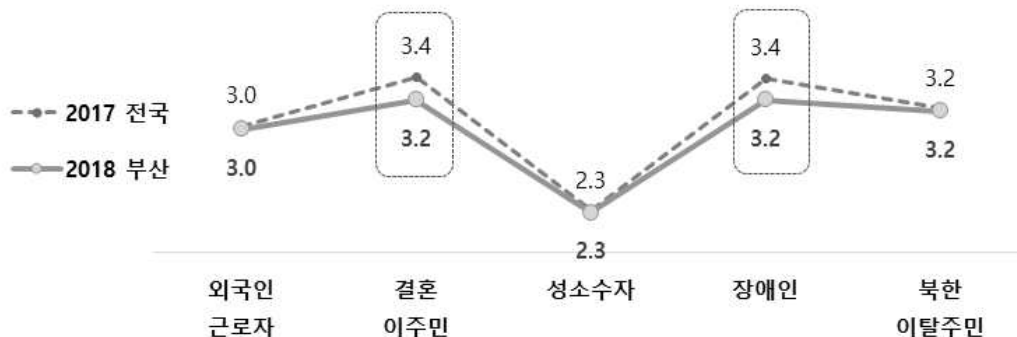
경향을 보임.

- 성소수자에 대한 동네이웃으로서의 수용도는 다른 소수집단 대비 특히 더 전국대비 낮은 경향을 보임. 즉 성소수자는 동네이웃으로서도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

동네이웃으로서 수용도 비교 (평균 비교)



가족으로서 수용도 비교 (평균 비교)



[그림 VI-13] 전국대비 비교_동네이웃/가족으로 소수집단 수용도

※ 상기 평균 비교 네모 표시는 95% 신뢰구간 기준 평균차이가 유의미함을 뜻함.

6.3. 세부집단별 분석

세부
집단에
따른
분석

연령 :

- ☞ 전반적으로 전 연령층에서 난민이나 성소수자 수용도는 낮은 편임. 그 외 연령별 특징을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70대 제외) 장애인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 단, 20~30대의 '난민'에 대한 수용도는 다른 연령대 대비 작은 편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도는 큰 편임.

성별 :

	<p>☞ 여성은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도는 높으나, 난민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는 남성 대비 낮은 편임.</p> <p>직업 :</p> <p>☞ 사무직 종사자는 외국인 근로자, 학생은 외국인 유학생, 이주민 자녀에 대한 수용도가 높음.</p> <p>☞ 주부는 다른 직업군 대비 특히 난민이나 성소수자, 장애인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편임.</p> <p>주관적 소득계층 :</p> <p>☞ 소득이 높을수록 외국인 유학생 수용도가 높아지나 난민에 대한 수용도는 낮아지는 특징을 보임.</p> <p>해외유학 경험이나 소수집단 접촉경험 :</p> <p>☞ 해외유학이나 근무경험이 있을수록, 소수집단 접촉경험이 있을수록 소수집단 수용도가 높은 특징을 보임.</p> <p>☞ 특히 성소수자 접촉경험이 있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p>
<p>소수 집단에 따른 분석</p>	<p>외국인 근로자</p> <p>☞ 20,30,7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수용도 낮음.</p> <p>☞ 가정주부의 수용도 낮음.</p> <p>☞ 학력이 높을수록 수용도 낮음.</p> <p>결혼 이주민</p> <p>☞ 60대, 7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수용도 낮음.</p> <p>☞ 가정주부 및 블루칼라 종사자의 수용도 낮음.</p> <p>이주민의 자녀</p> <p>☞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수용도 낮아짐.</p> <p>☞ 가정주부 및 블루칼라 종사자의 수용도 낮음.</p> <p>외국인 유학생</p> <p>☞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수용도 낮아짐.</p> <p>☞ 블루칼라 종사자의 수용도 낮음. 학생의 수용도는 특히 높음.</p> <p>난민</p> <p>☞ 20,30대, 7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수용도 낮음.</p> <p>☞ 가정주부의 수용도 낮음.</p> <p>☞ 학력이 높을수록 낮아짐.</p> <p>성소수자</p> <p>☞ 남성의 수용도 상대적으로 낮음.</p>

- ☞ 10, 2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수용도 낮음.
- ☞ 가정주부 수용도 낮음.

장애인

- ☞ 남성의 수용도 상대적으로 낮음.
- ☞ 10~30대, 70대 이상 수용도 상대적으로 낮음.
- ☞ 기혼대비 미혼집단 수용도 상대적으로 낮음.

북한이탈주민

- ☞ 여성의 수용도 상대적으로 낮음.
- ☞ 30대의 수용도 상대적으로 낮음.
- ☞ 미혼집단의 수용도 상대적으로 낮음.

6.3.1. 연령대별 소수집단 수용도 차이

□ 연령대에 따라 소수집단별 가족으로서의 수용도에 차이가 나타남.

- 전 연령대에서 난민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가운데 특히 20~30대 및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수용도가 더 낮은 편임.
-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도는 50대 이상에서 특히 낮음.

<표 VI-12> 가족으로서의 소수집단 수용도_연령별 분석

단위 : %(매우 그렇다+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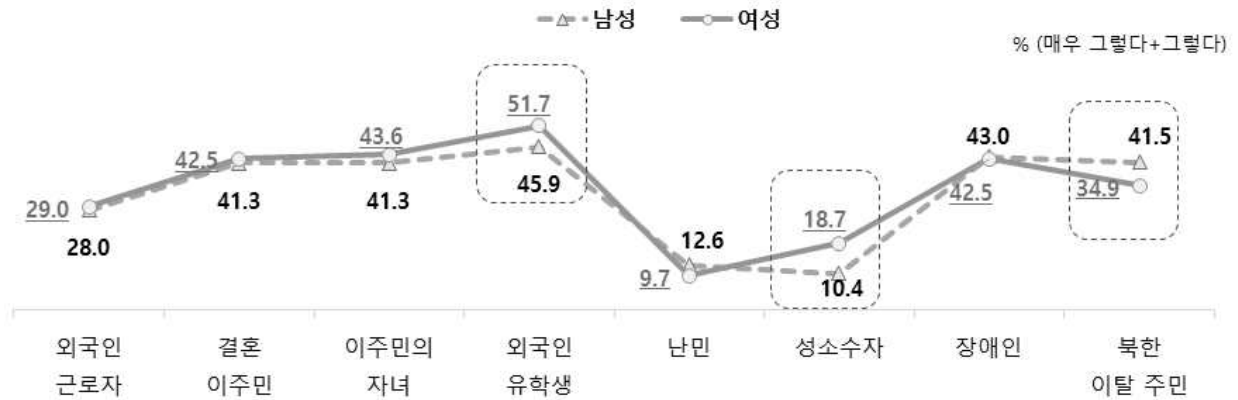
연령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의 자녀	외국인 유학생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10대	34.2	49.4	54.4	63.3	21.5	26.6	41.8	41.8
20대	29.7	49.4	46.5	55.8	↓7.6	29.7	40.7	39.5
30대	23.9	40.8	43.3	48.3	↓7.0	18.4	42.3	29.9
40대	23.3	37.9	40.6	42.0	12.3	18.3	47.0	35.2
50대	31.9	40.9	40.6	45.7	15.4	7.5	44.9	39.8
60대	32.6	41.7	40.6	48.0	9.1	2.9	44.0	44.0
70대	27.0	37.0	37.0	52.0	7.0	3.0	31.0	41.0

6.3.2. 성별 소수집단 수용도 차이

□ 외국인 유학생,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여성

- 여성은 외국인 유학생 및 성소수자에 대해 더 수용적인 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

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VI-14] 가족으로서 소수집단 수용도_성별 분석

6.3.3. 성×연령별 소수집단 수용도 차이

□ 20대 여성을 제외하고 가족으로서의 수용도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높음.

- 20대 여성은 소수집단에 대한 가족으로서의 수용도가 성/연령별 세부집단에서 가장 높음. 특히, 성소수자를 가족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이 약 47%로 20대 남성에 비해 30% 이상 높음.
- 20대를 제외하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족으로 소수집단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편임.
- 60대 여성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이주민의 자녀, 외국인유학생 등 다른 인종에 대한 가족 수용도는 60대 남성에 비해 높으나,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을 가족으로 수용하겠다는 비율이 60대 남성에 비해 낮은 것이 특징적임.
- 반면, 동네이웃으로서의 수용도에서는 성/연령 세부 집단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음.

<표VI-13> 가족으로서의 소수집단 수용도_성×연령별 분석

단위 : %(매우 그렇다+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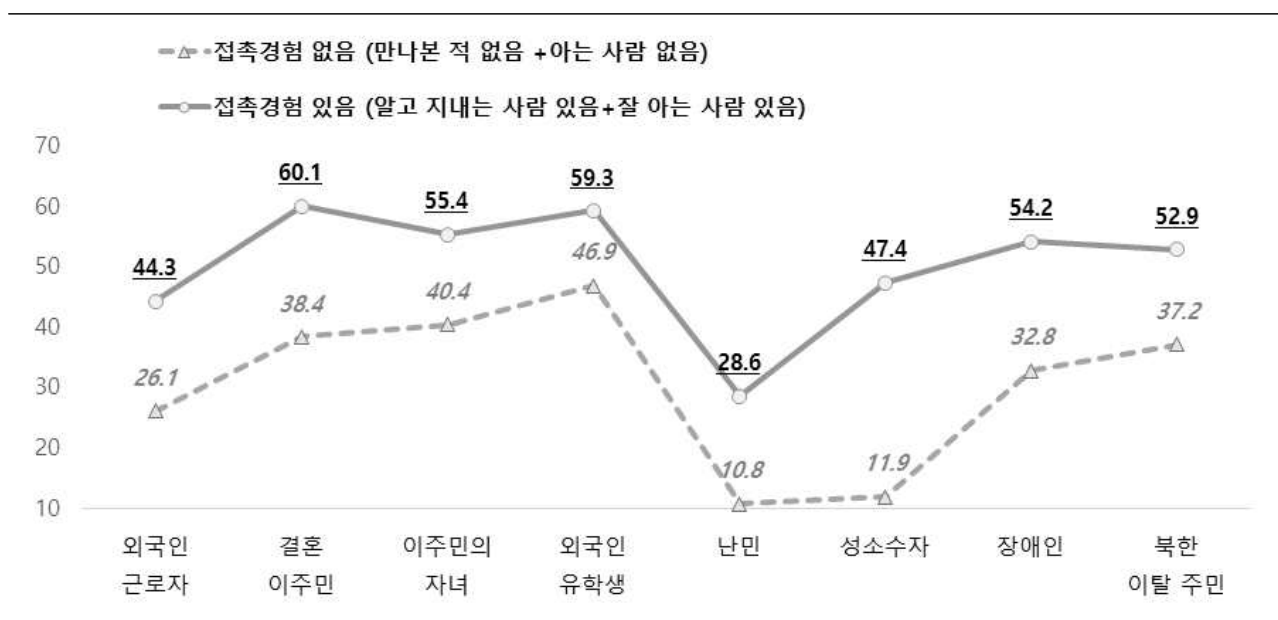
연령×성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의 자녀	외국인 유학생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10대 남성	34.2	51.2	58.5	61.0	22.0	19.5	39.0	39.0
10대 여성	34.2	47.3	50.0	65.8	21.0	34.3	44.7	44.7
20대 남성	22.3	43.5	36.5	51.7	7.0	11.7	30.6	34.1

연령×성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의 자녀	외국인 유학생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20대 여성	36.8	55.1	56.3	59.8	8.0	47.1	50.5	44.8
30대 남성	24.5	37.3	39.2	39.3	10.8	12.7	39.2	34.3
30대 여성	23.2	44.4	47.4	57.6	3.0	24.2	45.5	25.3
40대 남성	23.5	39.2	40.2	35.3	14.7	14.7	48.0	37.3
40대 여성	23.1	36.7	41.0	47.8	10.3	21.4	46.2	33.3
50대 남성	34.7	43.0	43.0	46.3	17.4	7.4	51.2	47.1
50대 여성	29.3	39.1	38.4	45.2	13.6	7.5	39.1	33.1
60대 남성	31.0	41.7	39.3	48.8	9.5	2.4	50.0	53.5
60대 여성	34.1	41.8	41.8	47.3	8.8	3.3	38.5	35.2
70대 남성	27.3	36.4	40.9	54.6	6.8	6.8	31.8	45.4
70대 여성	26.8	37.5	33.9	50.0	7.1	—	30.4	37.5

6.3.4. 소수집단 접촉 경험별 수용도 차이

-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유학생은 접촉경험에 따른 가족수용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
- 소수집단 접촉 경험이 있으면 해당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며 특히 성소수자 접촉경험 유무에 따른 인식차가 크게 나타남.

단위 : %(매우 그렇다+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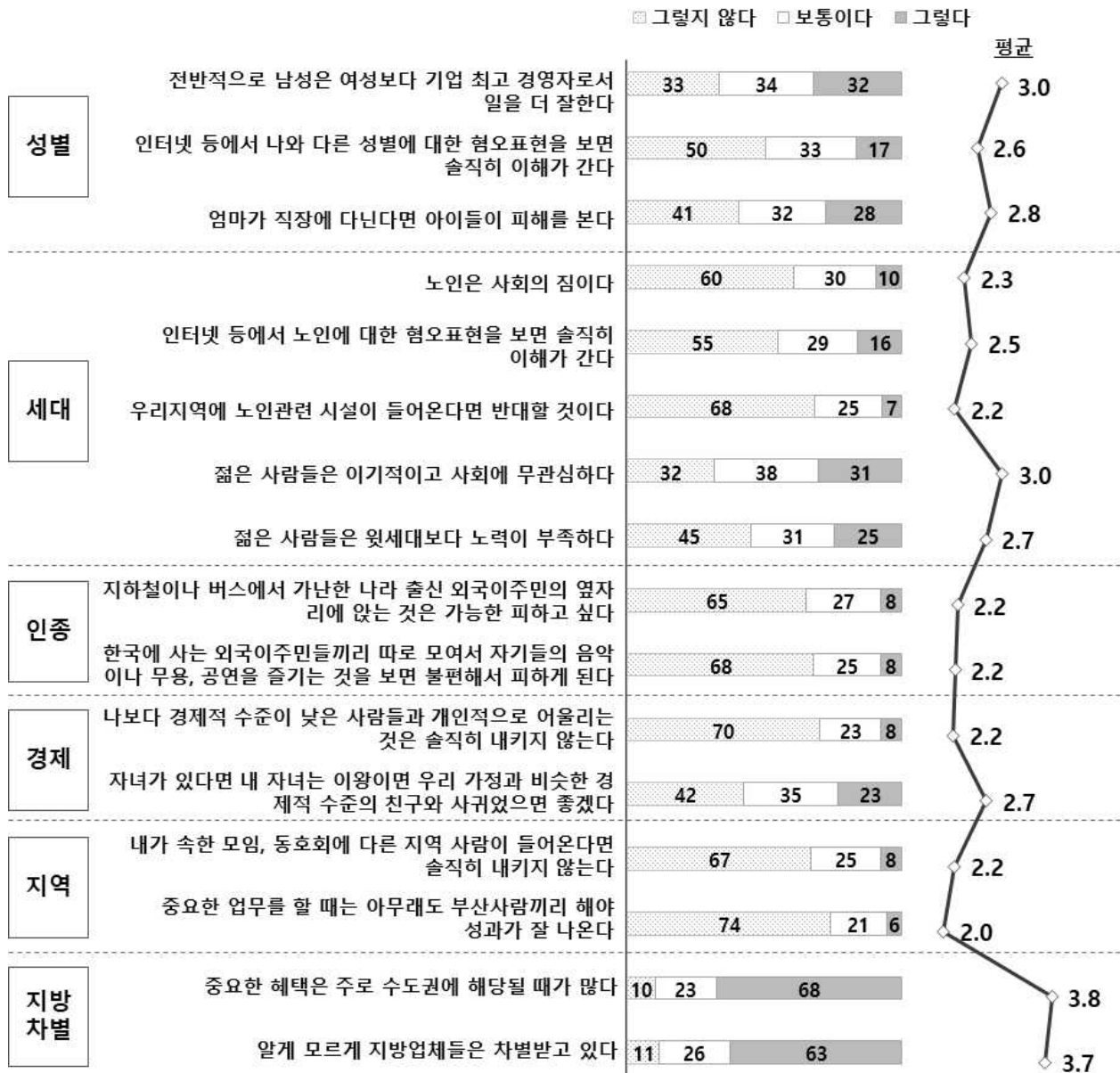


[그림 VI-15] 가족으로서 소수집단 수용도_소수집단 접촉 경험

7. 사회갈등 현상에 대한 인식

7.1. 사회갈등 현상에 대한 인식 종합

6가지 사회현상 이슈 중 부산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차별>에 대한 심각성이 가장 큼



- 부산시민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임. (‘노인은 사회의 짐이다’에 60%가 비동의)
- ‘노인 혐오’ 문제보다 ‘젊은 층에 대한 편견’이 상대적으로 더 큼. (젊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사회에 무관심(31%)’하며, ‘노력이 부족(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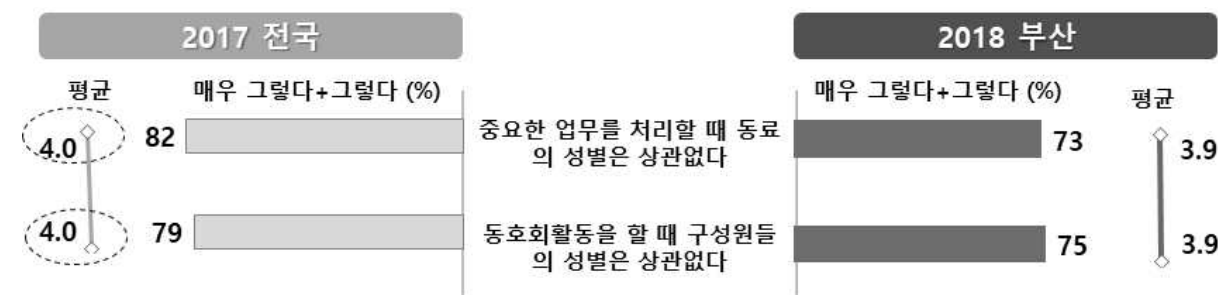
- 업무능력에서의 성별인식을 보면 아직 남성에 대한 선호가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인종이나 지역에 따른 차별인식은 크지 않은 편이나 수도권대비 지방 차별에 대해서는 뿌리 깊은 불신이 내재되어 있음.
- 경제수준에 따른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는 큰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세부 문항에서 ‘나’는 상관없으나 ‘자식’의 경우는 이왕이면 비슷한 수준의 친구와 어울리기를 희망하는 이중적인 인식이 나타남.

7.2. 사회갈등 현상 _ 성 불평등

7.2.1. 전국 대비 비교

부산시민은 전국대비 여성에 대한 보수적인 성향을 보임

- 부산지역 성인지 감수성은 70%대로 낮은 편은 아니나, 전국대비 다소 낮은 경향을 보임. 특히 동호회 활동보다도 ‘중요한 업무 처리’ 시 동료의 성별에 대해 더 보수적인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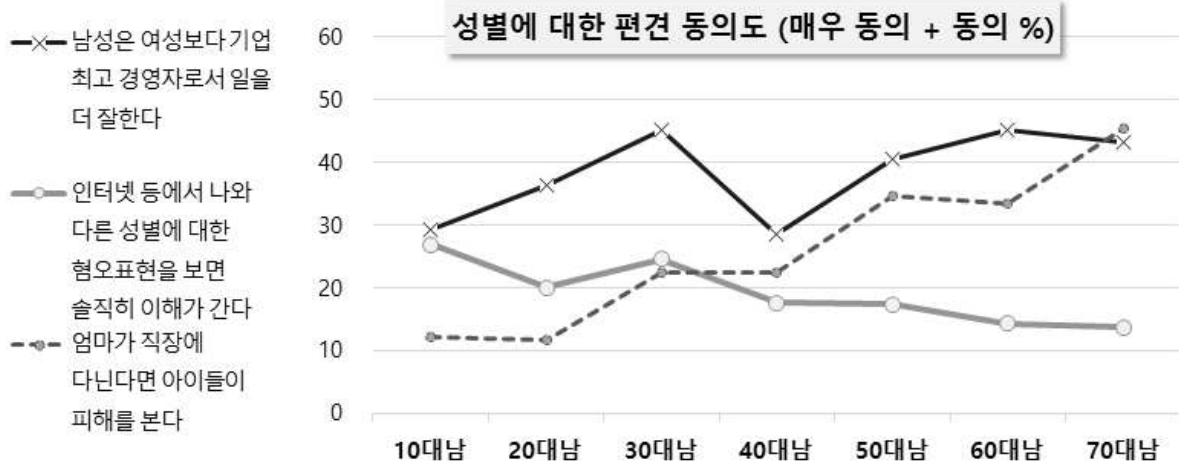
[그림 VI-16] 전국대비 부산지역 성 평등 인식 비교

7.2.2. 성 불평등에 대한 동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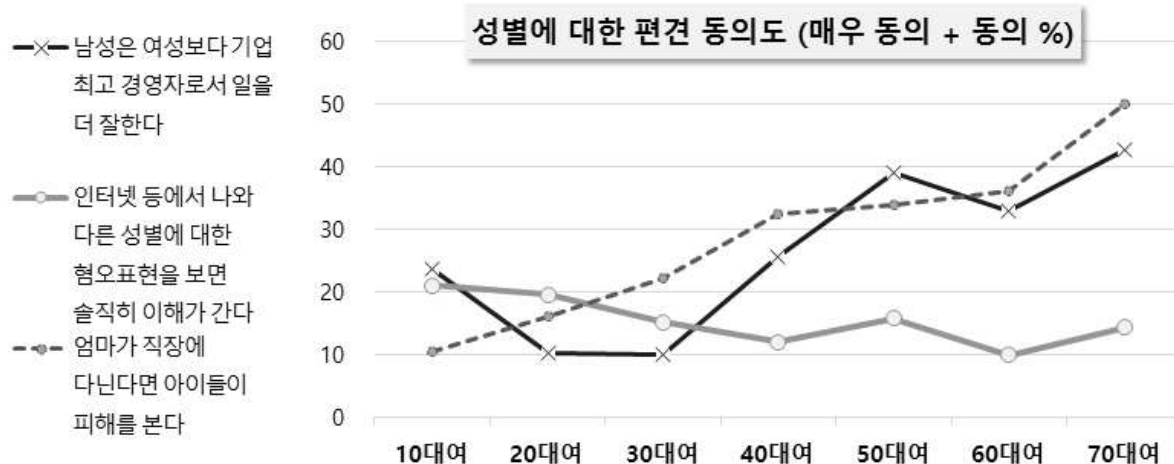
□ 30대 남성의 여성의 업무능력에 대한 편견 나타남.

- ‘남성이 여성보다 기업 최고경영자로 일을 잘한다’는 항목에 대해 10/20대에 비해 30대 남성의 동의율이 높았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현재 직장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남성들이 여성의 업무역량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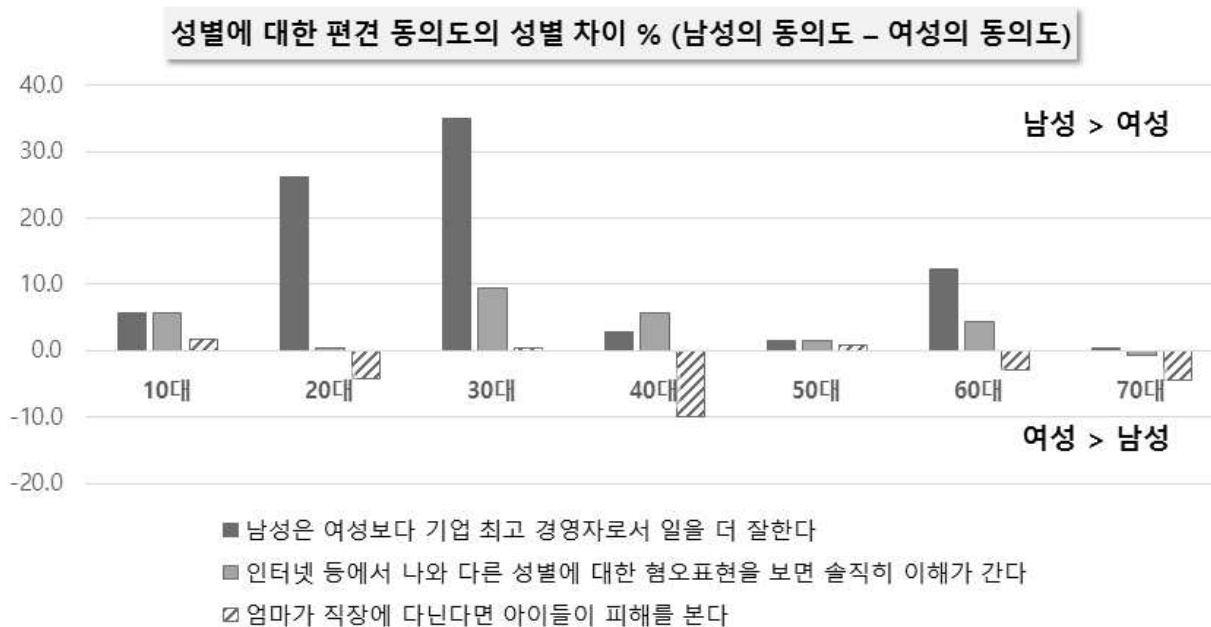
- ‘엄마가 직장에 다닌다면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항은 연령이 높은 남성일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여성을 보육·육아의 역할에만 한정짓는 태도를 알 수 있음.
 - 남성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에 이해가 간다는 입장을 보여, 10/20/30대 남성의 인터넷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 있음.
- 보육과 업무역량에 대한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유사한 패턴을 보임.
- 남성과 마찬가지로 10~30대와 40대 이상 여성의 성별 불평등 항목에 대한 응답패턴의 차이가 있음.
 - 특히 엄마가 직장에 다닌다면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항에서 40대 이상의 여성들의 동의도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등 보수적인 태도를 보임.
- 20~30대에서 여성 최고경영자에 대한 인식의 남녀 차이 극명함.
- 30대 남성은 30대 여성에 비해 30% 이상, 20대 남성은 20대 여성에 비해 약 30% 여성 최고경영자의 업무역량에 대한 신뢰가 낮음.



[그림 VI-17] 성별에 대한 편견 동의도 - 남성 (동의도 %)



[그림 VI-18] 성별에 대한 편견 동의도 _ 여성 (동의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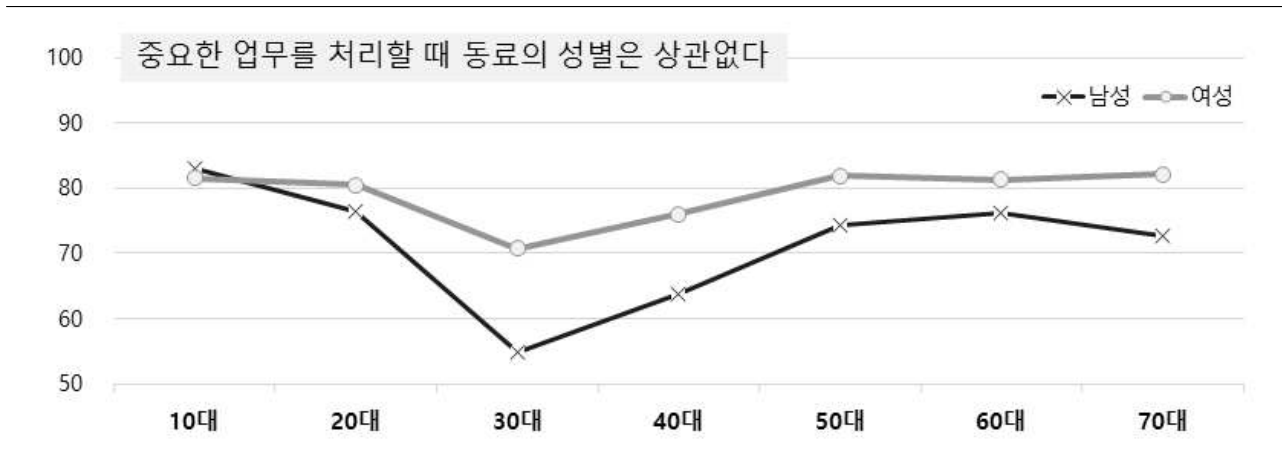
[그림 VI-19] 성별에 대한 편견 동의도 _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 (동의하지 않음 %)

7.2.3. 업무·취미활동에서 성 차이에 대한 인식

□ 업무 영역에서 남녀 성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30대에서 남녀차이가 크게 나타남.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업무 처리시 동료의 성별이 상관없다는 비율이 높은 편이나, 30/40/50대에서는 해당 항목에 대한 남녀 차이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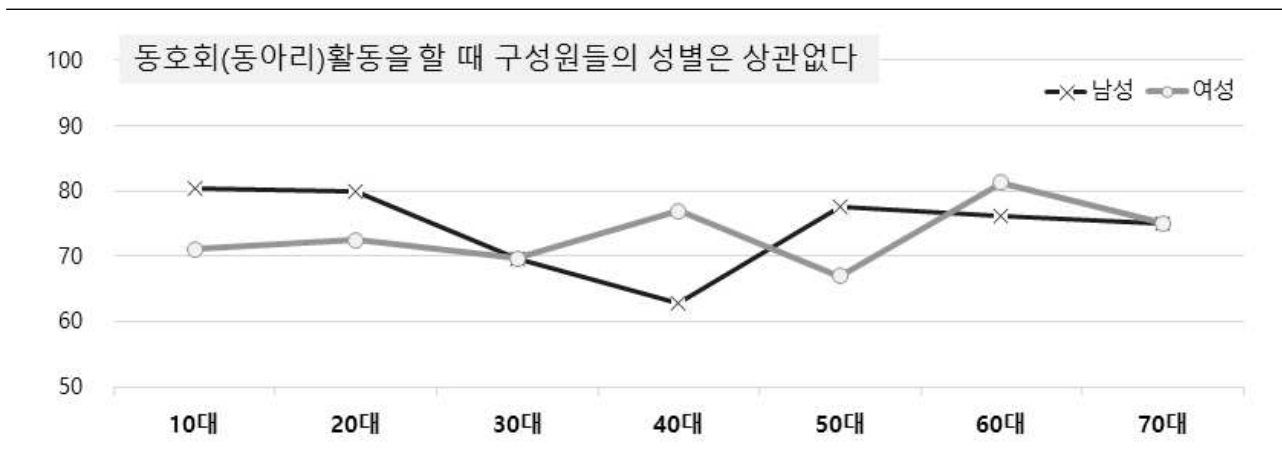
- 특히 30대 남성의 약 절반은 중요한 업무에서 남녀 성별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나타나, 30대 여성과 약 10% 이상의 차이를 보임.



[그림 VI-20] 전국대비 부산지역 성별 불평등 인식 비교

□ 동호회 활동시 성별을 고려하는 비율은 남녀 차이가 나타남

- 동호회 활동시 구성원들의 성별이 상관없다는 항목에 대해, 10/20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40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성별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I-21] 전국대비 부산지역 성별 불평등 인식 비교

7.3. 사회갈등 현상 _ 노인

□ 10, 20대 여성의 인터넷에서 노인 혐오 표현에 대한 공감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인터넷 등에서 나타나는 노인 혐오표현에 대해 솔직히 이해가 간다라는 항목에서 10, 20대 여성의 동의도가 타 연령대 여성에 비해 높은 편임.

□ 30대 남성은 연령대중 유일하게 여성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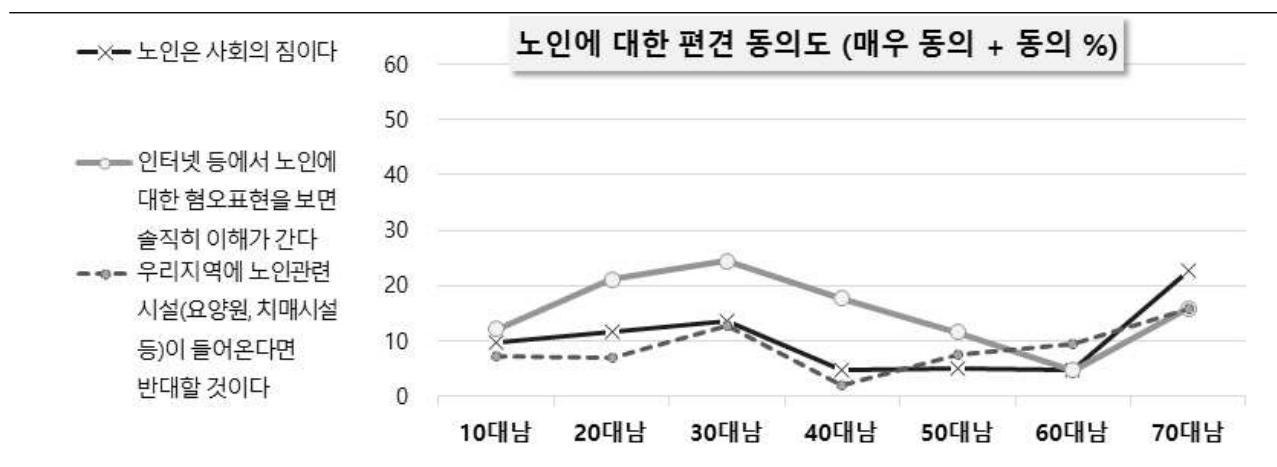
- 특히 인터넷에서의 노인 혐오표현, 노인이 사회의 짐이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여성에 비해 높음.

□ 20% 이상의 70대 남녀가 ‘노인은 사회의 짐이다’라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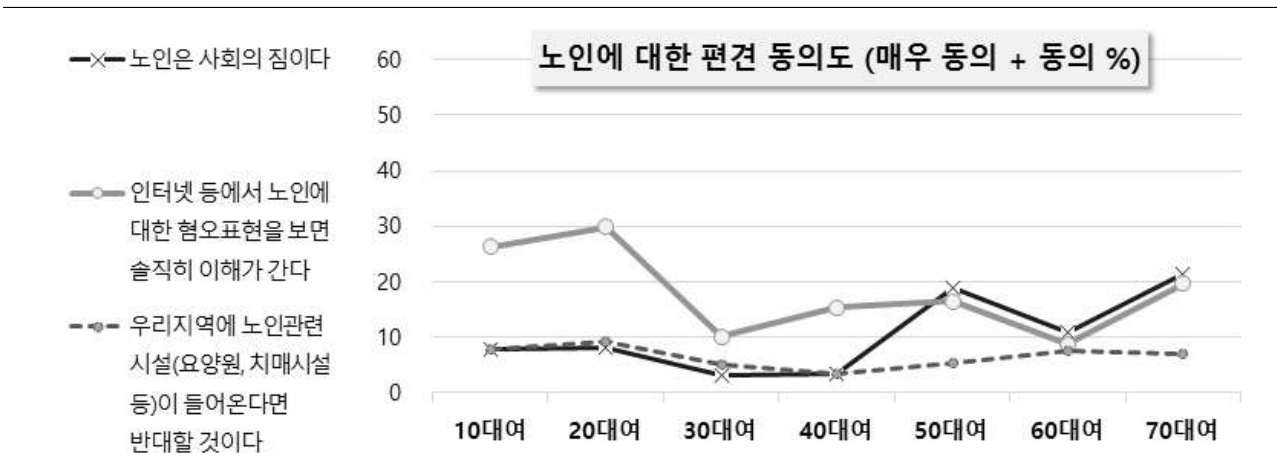
- 65세 이상인 70대 남녀는 ‘노인이 사회의 짐이다’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에 대한 어려움을 스스로 느끼고 있음.

□ 3세대 가구의 10-20대가 노인에 대한 편견이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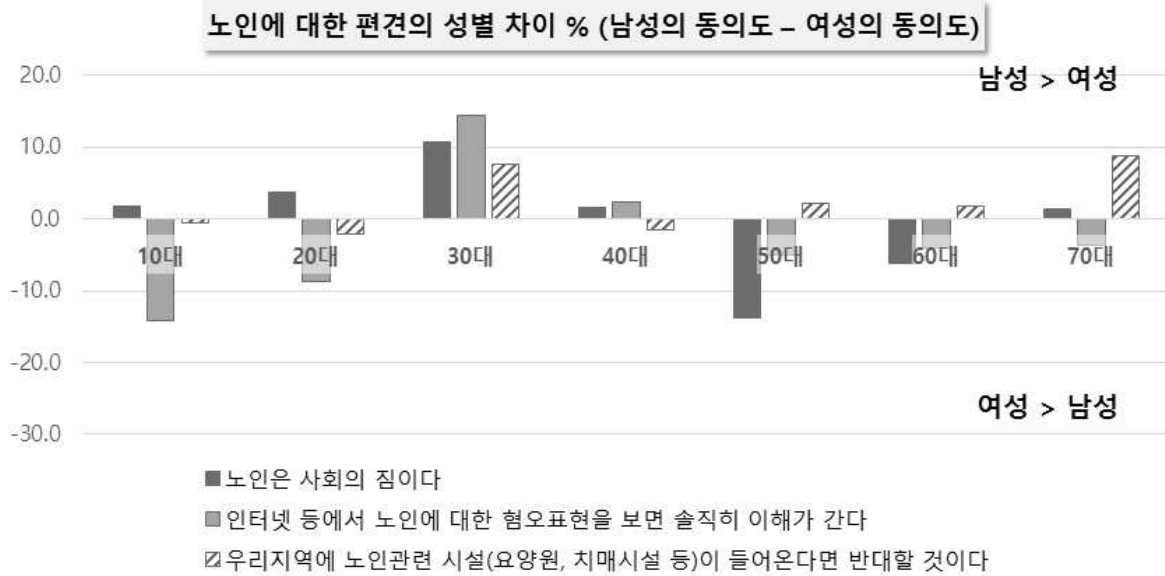
- ‘노인은 사회의 짐이다’, ‘우리지역에 노인관련 시설이 들어온다면 반대할 것이다’ 문항에 대해서 3세대로 구성된 가구에 사는 10-20대의 동의율이 5% 미만으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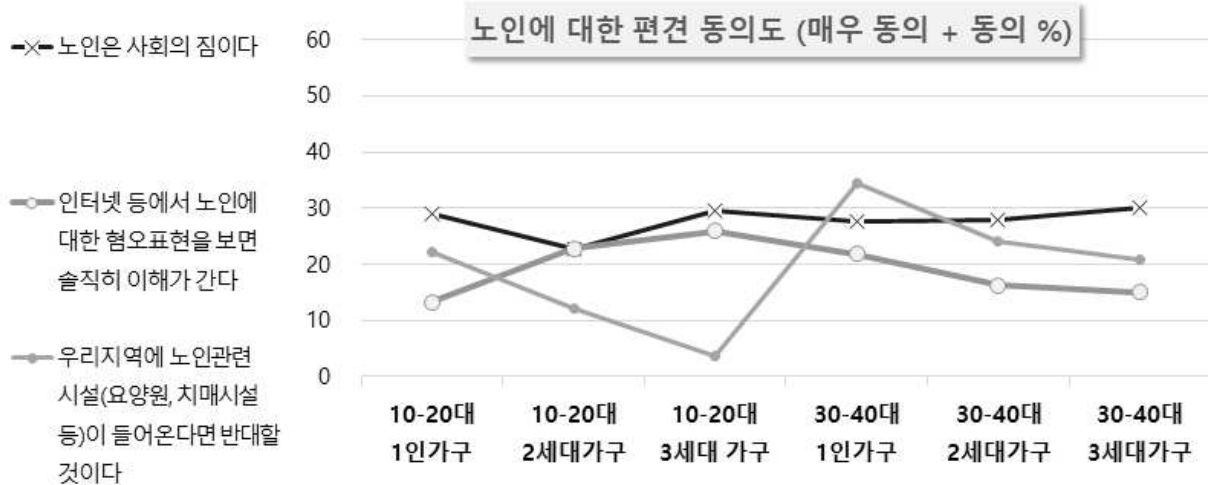
[그림 VI-22] 노인에 대한 편견 동의도 _ 남성



[그림 VI-23] 노인에 대한 편견 동의도 _ 여성



[그림 VI-24] 노인에 대한 편견 동의도 -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



[그림 VI-25] 노인에 대한 편견 동의도 - 10~20대 가구구성별 차이

7.4. 사회갈등 현상 -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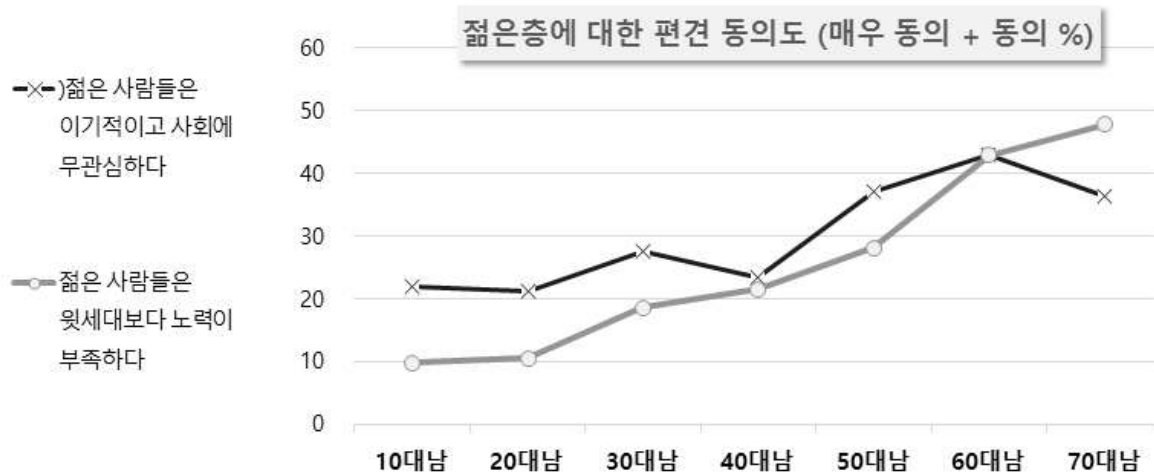
□ 청년에 대한 인식에서 연령대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청년세대에 해당하는 10/20/30대 남성이 40대 이후 남성에 비해 ‘젊은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사회에 무관심하다’는 것과 ‘젊은 사람들은 윗세대보다 노력이 부족하다’는 항목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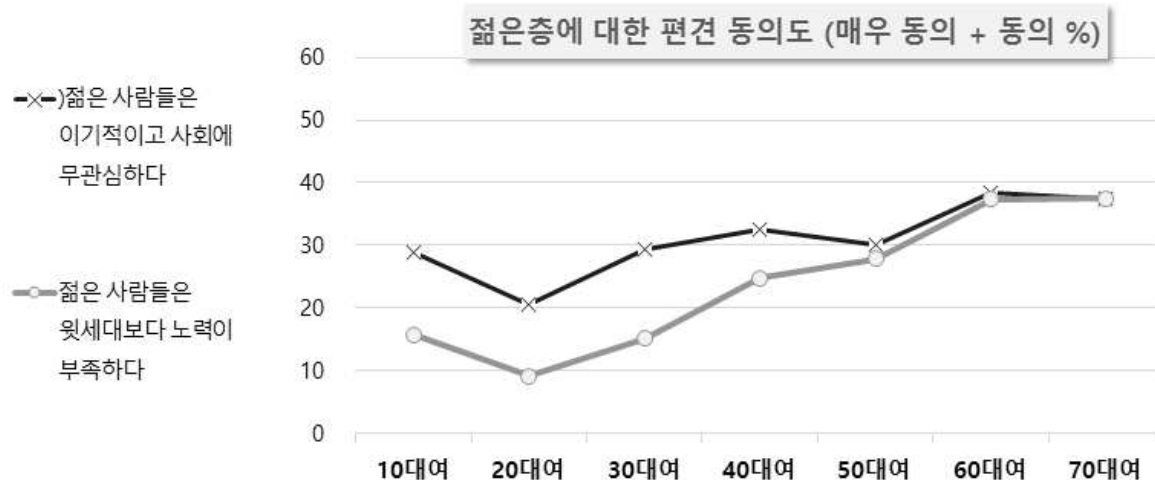
- 10대 여성이 청년세대가 이기적이고, 사회에 무관심하며,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으며,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해당 의견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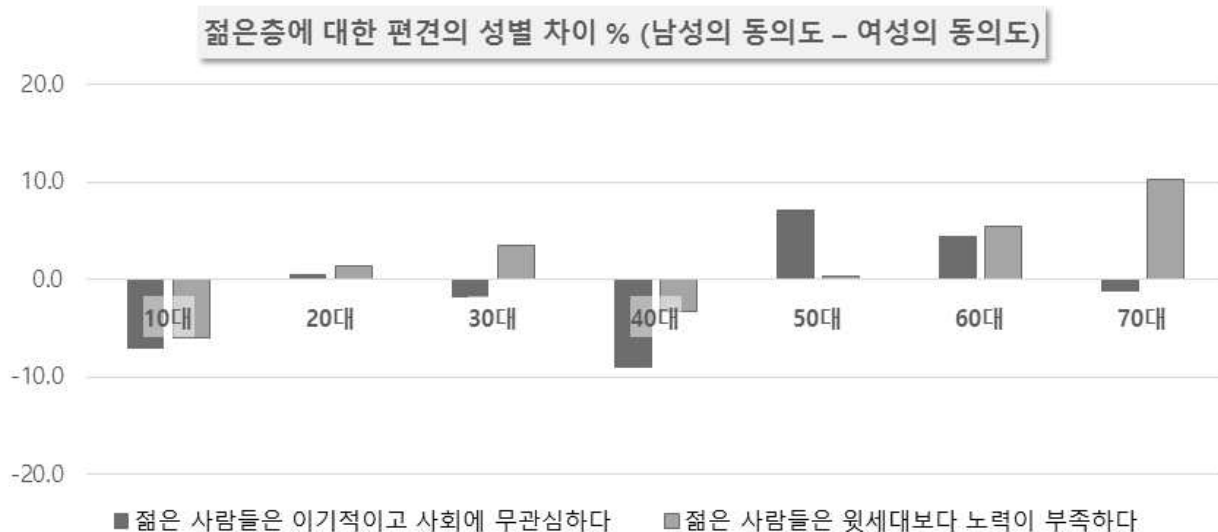
- 젊은 세대에 대한 편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50대 이상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편
 - 10대에서는 청년이 이기적이고 사회에 무관심하며 윗세대보다 노력이 부족하다는 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동의도가 낮음.
 - 젊은 사람들이 윗세대보다 노력이 부족하다는 항목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이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음.
- 50대 이상 가구구성별로 청년세대에 대한 인식 차이 있음.
 - 가구구성 중 20-30대 자녀와 동거하는 50대 부부가 젊은 사람들이 윗세대보다 노력이 부족하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낮음.



[그림 VI-26] 젊은 층에 대한 편견 동의도 _ 남성



[그림 VI-27] 젊은 층에 대한 편견 동의도 _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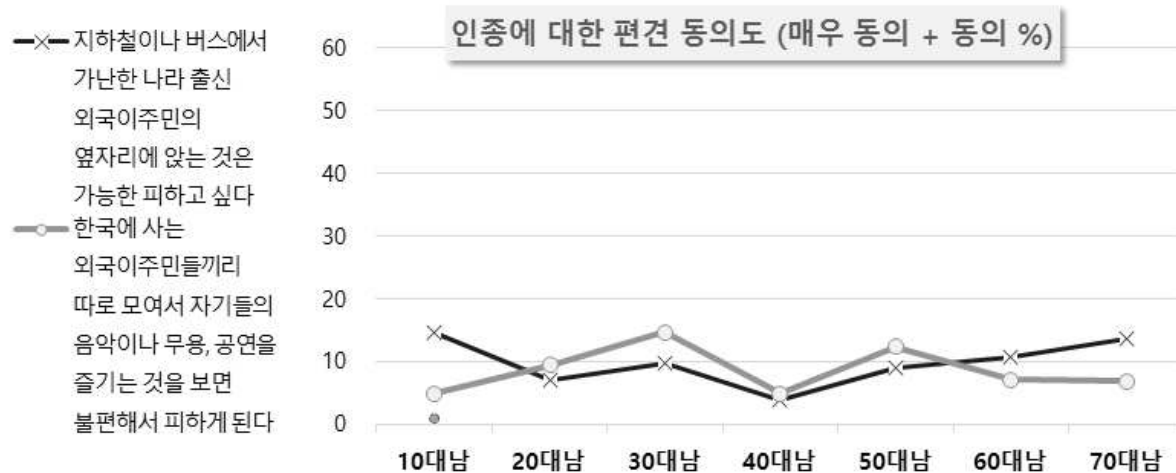
[그림 VI-28] 젊은 층에 대한 편견 동의도 _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

7.5. 사회갈등 현상 _ 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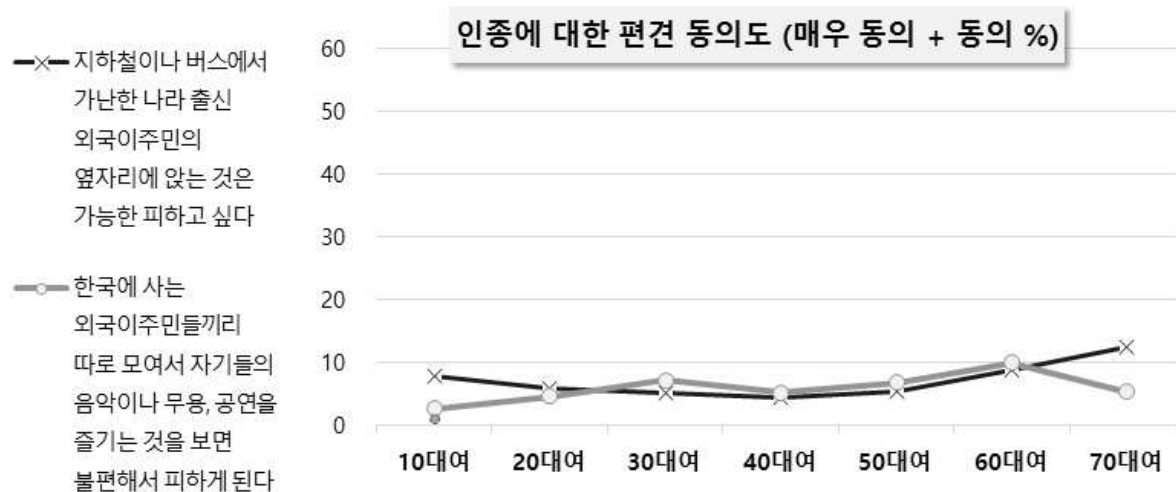
□ 인종 편견이 상대적으로 약한 10대

- 남녀 모두 인종에 대한 편견 동의도가 낮은 층은 10대임.
- 10대 여성은 외국이주민들끼리 자기들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을 피하게 된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도가 가장 낮음.
-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구간별 변화가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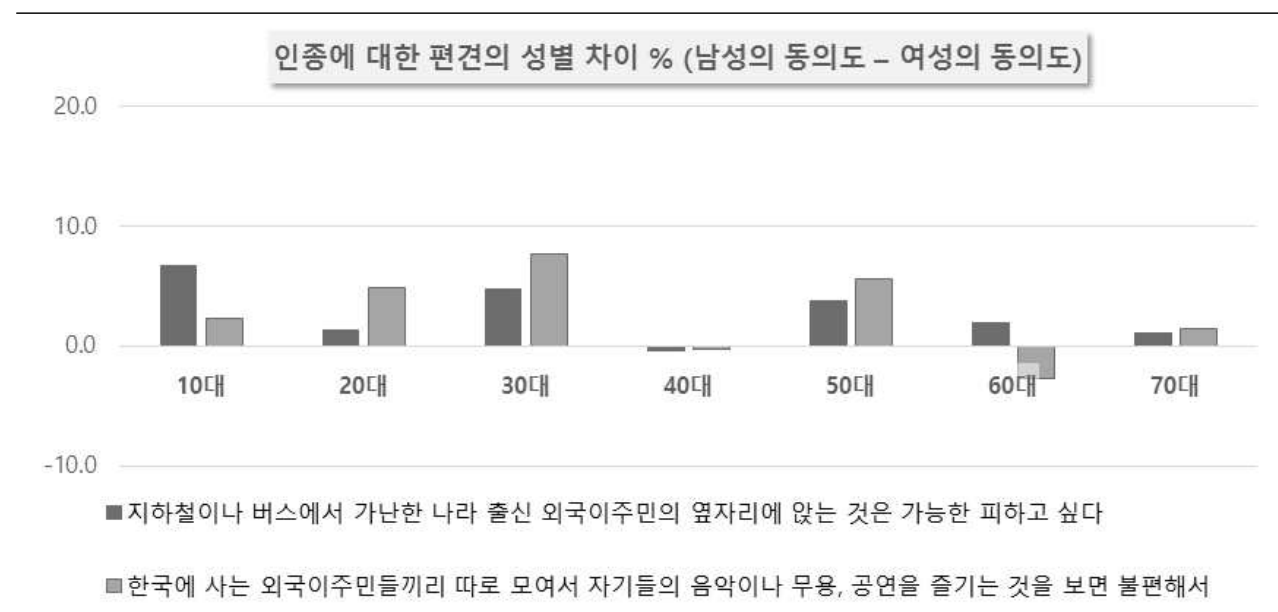
-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인종 편견에 대한 동의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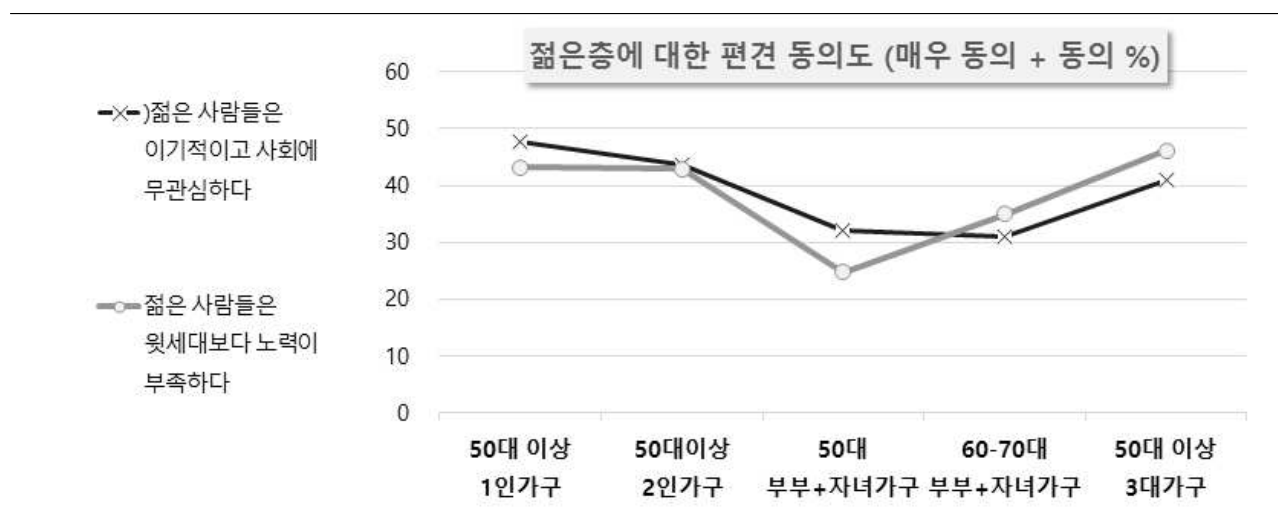
[그림 VI-29] 인종에 대한 편견 동의도 - 남성



[그림 VI-30] 인종에 대한 편견 동의도 - 여성



[그림 VI-31] 인종에 대한 편견 동의도 _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



[그림 VI-32] 젊은 층에 대한 편견 동의도 _ 50대 이상 가구구성별 차이

7.6. 사회갈등 현상 _ 경제적 수준

□ 남녀 모두 나의 관계·접촉보다 내 자녀의 타인과의 관계·접촉에 대해 보수적

— 경제적 차이가 나는 사람들과 본인이 교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층은 10대/20대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녀 모두 경제적 수준이 유사한 사람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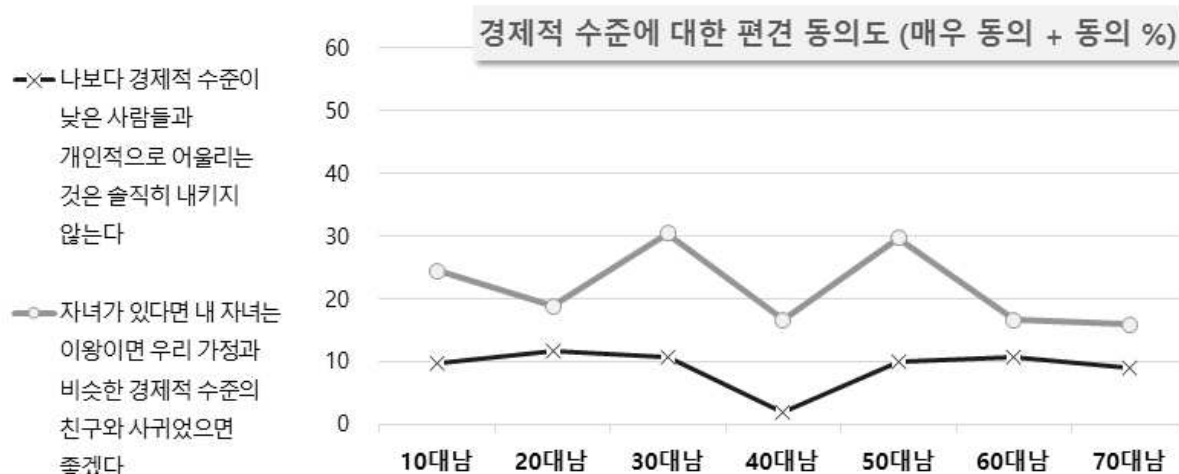
비율이 높아짐.

- 반면 자녀가 비슷한 경제적 수준의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비율이 10/20대에 낮다가 30/40/50대에 높아지는데 특히 남성의 경우 이러한 비율이 20대에 비해 30대에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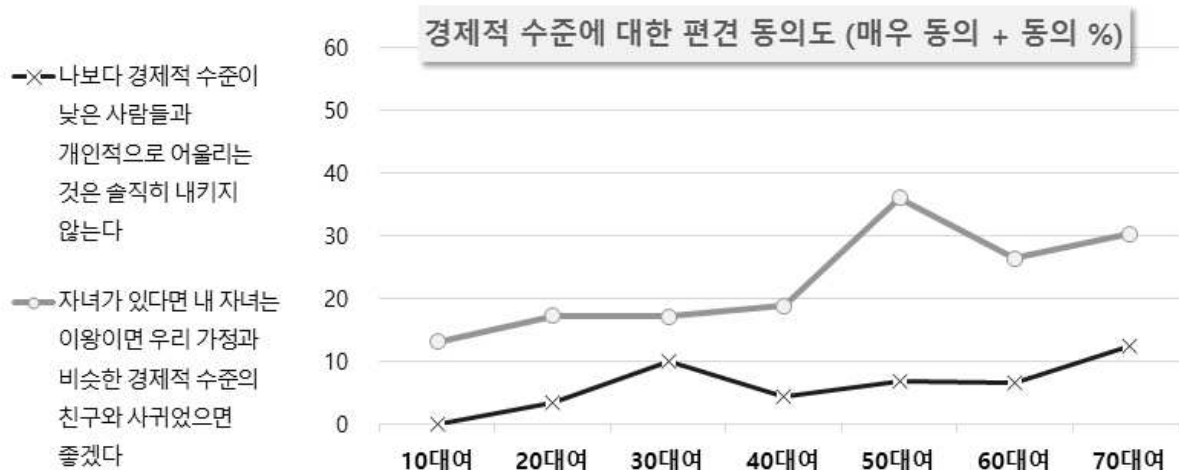
-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의지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음.

□ 소득/학력이 높은 집단이 자녀가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기를 바라는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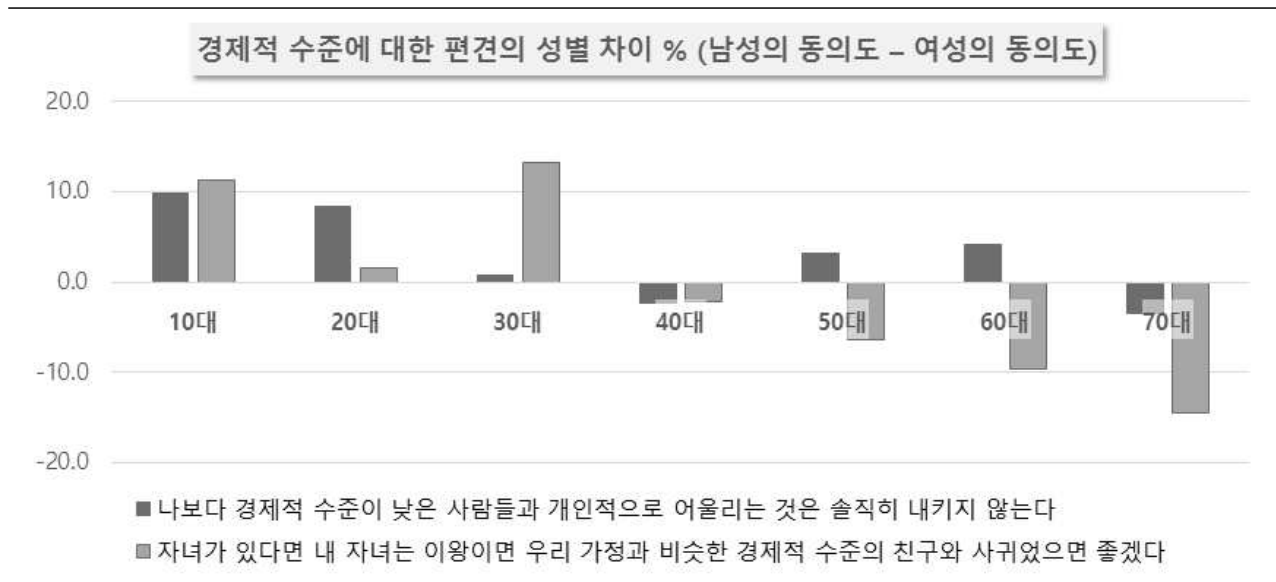
-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소득이 ‘하’ 또는 ‘중하’인 경우 경제적 지위가 다르더라도 본인이 교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주관적 소득이 ‘중상’ 이상인 경우 자녀와 본인 모두 비슷한 경제적 수준인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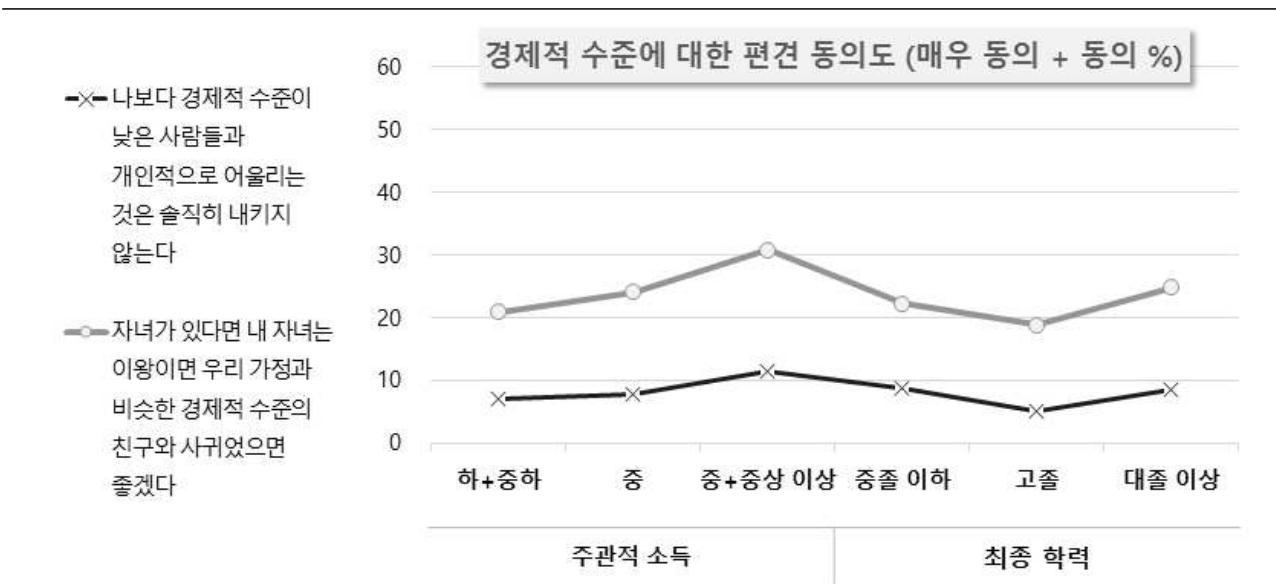
[그림 VI-33] 경제적 수준에 대한 편견 동의도 _ 남성



[그림 VI-34] 경제적 수준에 대한 편견 동의도 _ 여성



[그림 VI-35] 경제적 지위 편견에 대한 편견 동의도 -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 (동의하지 않음 %)



[그림 VI-36] 경제적 지위 편견에 대한 편견 동의도 - 소득 및 학력수준별 차이 (동의하지 않음 %)

7.7. 사회갈등 현상 - 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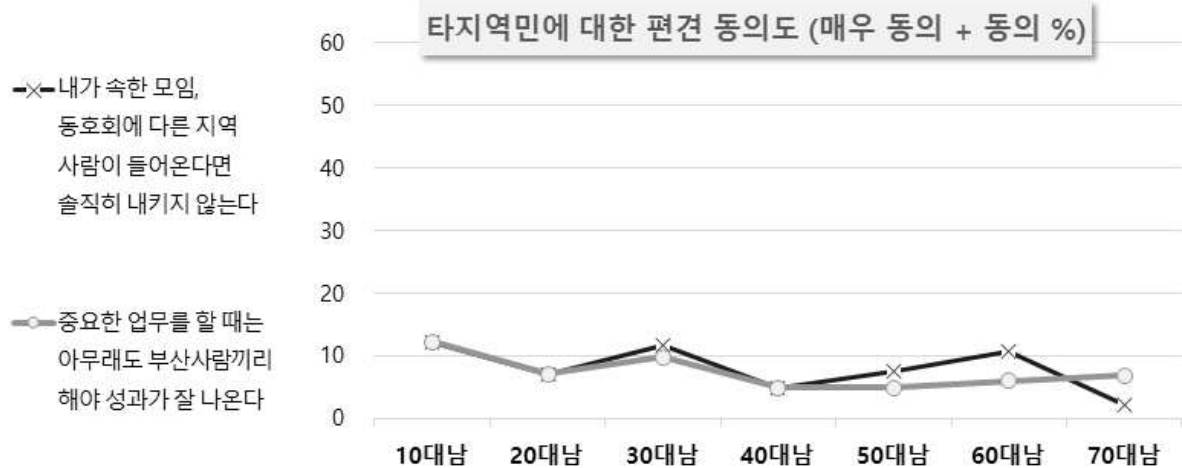
□ 40대 이후 여성, 타 지역민과의 동호회 활동에 대해 보수적

-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업무적 교류를 타 지역민과 하는 것보다 동호회에서 타 지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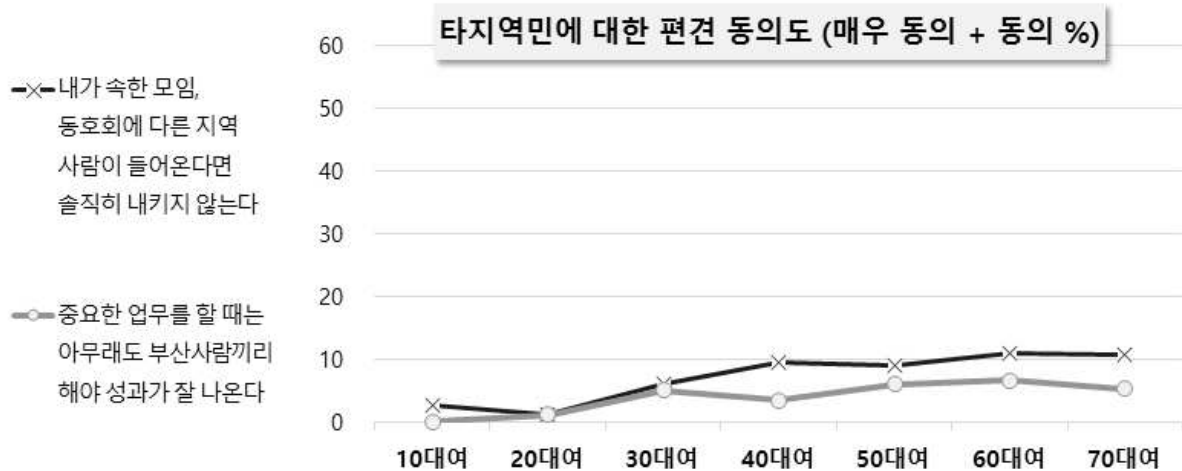
과 교류하는 것을 꺼려하는 비율이 더 높음.

□ 여성보다 남성이 타 지역민과의 교류에 대해 편견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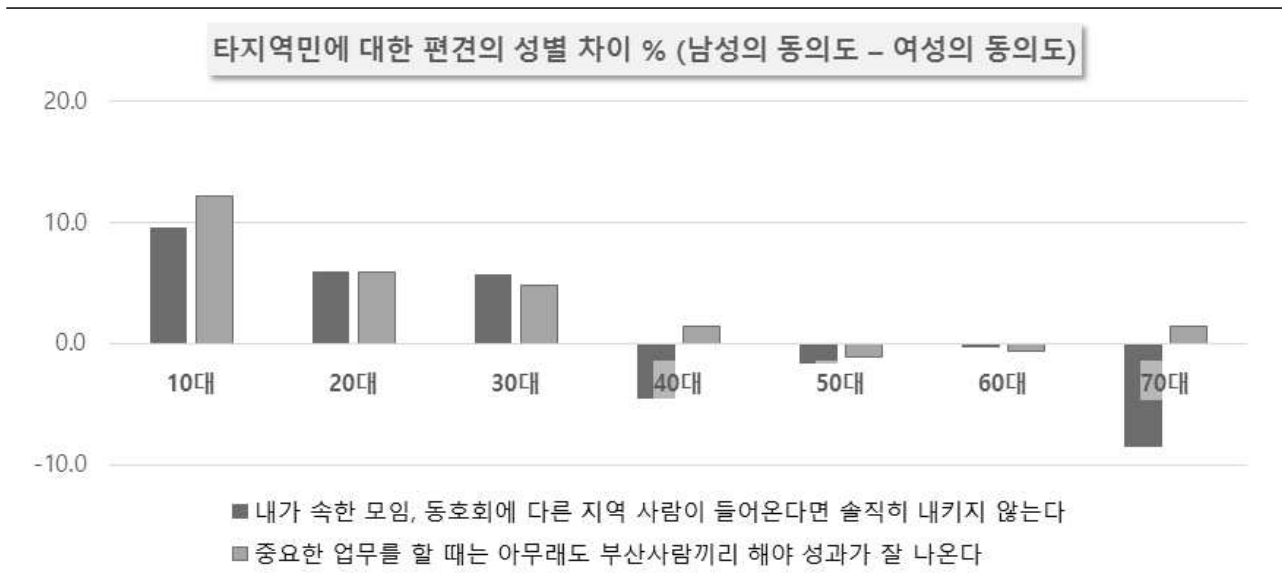
- 여성보다는 남성이 타 지역민과 업무 및 취미생활에서 타 지역민과 함께하는 것을 꺼려하는 비율이 높음.



[그림 VI-37] 타 지역민에 대한 편견 동의도 _ 남성



[그림 VI-38] 타 지역민에 대한 편견 동의도 _ 여성



[그림 VI-39] 타 지역민에 대한 편견 동의도 _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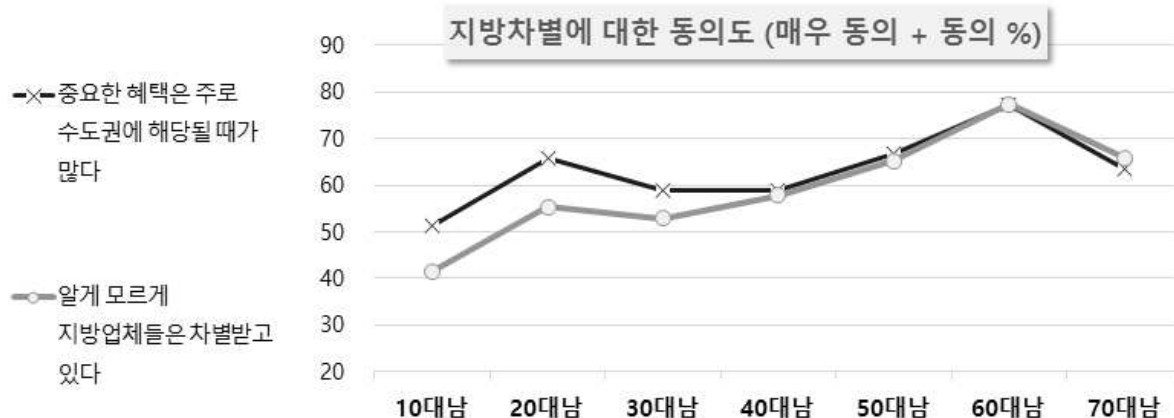
7.8. 사회갈등 현상 _ 지방 차별

□ 전반적으로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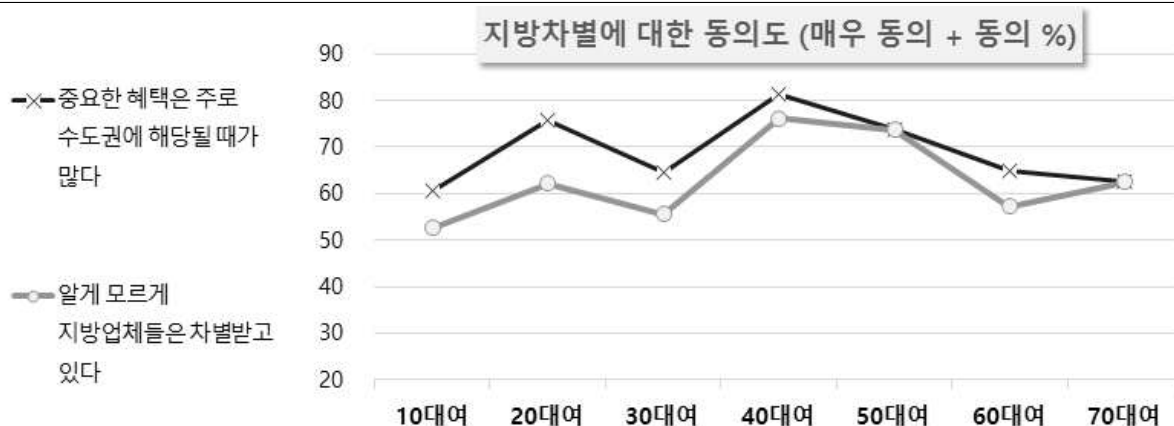
- 남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음.
- 20대 이후의 남성/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지방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임.

□ 지방차별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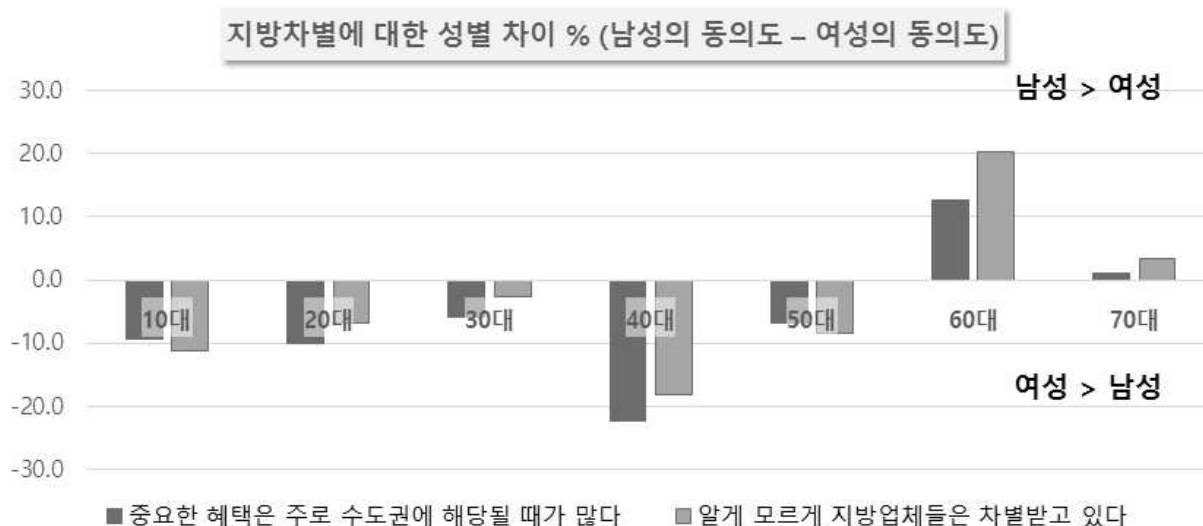
- 특히, 40대 여성은 40대 남성에 비해 지방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약 20% 가까이 더 높음.



[그림 VI-40] 지방차별 편견에 대한 동의도 _ 남성 (동의하지 않음 %)



[그림 VI-41] 지방차별 편견에 대한 동의도 _ 여성 (동의하지 않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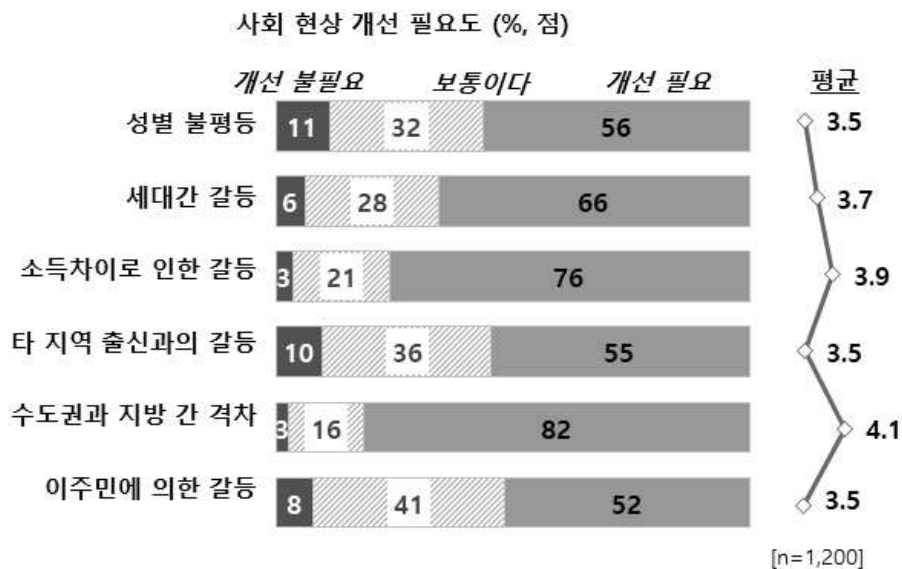
[그림 VI-42] 타 지역민에 대한 편견 동의도 _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

8. 사회갈등 현상 개선 필요도

8.1. 사회현상 개선 필요도 종합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사회현상 개선 1순위이며, 다음은 <소득차이로 인한 갈등>임

- 성별 불평등은 약 56%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사회현상 대비 개선필요도가 낮은 편임. 앞서 전국대비 부산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성별 불평등보다 오히려 세대간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이주민이나, 타 지역 출신자로 인한 갈등은 과반수 정도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VI-43] 사회현상 개선 필요도

8.2. 세부 집단 분석

전반적으로 모든 세부집단에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개선 필요도가 가장 높음.

연령 :

- ☞ 모든 연령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회현상은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문제임. 특히 50대에서 이러한 격차문제에 더 민감한 것으로 확인됨.
- ☞ 60~70대는 성별 불평등에 대한 개선 필요도가 더 낮은 편임.
- ☞ 타 지역 출신과의 갈등은 젊은 연령층보다 중장년 이상 연령층에서 더 높음. 즉 지역갈등 문제에 대해

서는 연령이 젊을수록 더 희석되는 경향을 보임.

성별 :

☞ 모든 사회현상에서 여성이 인식하는 개선필요도가 남성대비 높음.

직업 :

☞ 전반적으로 사무직 종사자의 사회갈등 현상 개선 필요도가 높음. 특히 수도권 및 지방간 격차 문제에 더 민감한 것으로 확인됨.

학력 :

☞ 학력이 낮을수록 전반적으로 사회현상 개선 필요도가 낮은 편임. 대부분의 세부집단에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에 대한 개선필요도가 가장 높은 반면, ‘중졸이하’ 학력 보유자는 지방간 격차보다도 ‘소득차이로 인한 사회갈등’에 대한 개선 필요도가 더 높은 특징을 보임.

해외유학 경험이나 소수집단 접촉경험 :

☞ 해외유학이나 근무경험이 있을수록, 소수집단 접촉경험이 있을수록 사회현상 개선필요도가 높음.

8.2.1. 성별 차이

□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사회갈등 개선의 필요도를 소폭 높게 인식

－ 성별 불평등 개선 필요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약 17%p 정도 높다는 점 이외에도 세대간 갈등에서 여성이 인식하는 개선 필요도가 남성에 비해 약 10%p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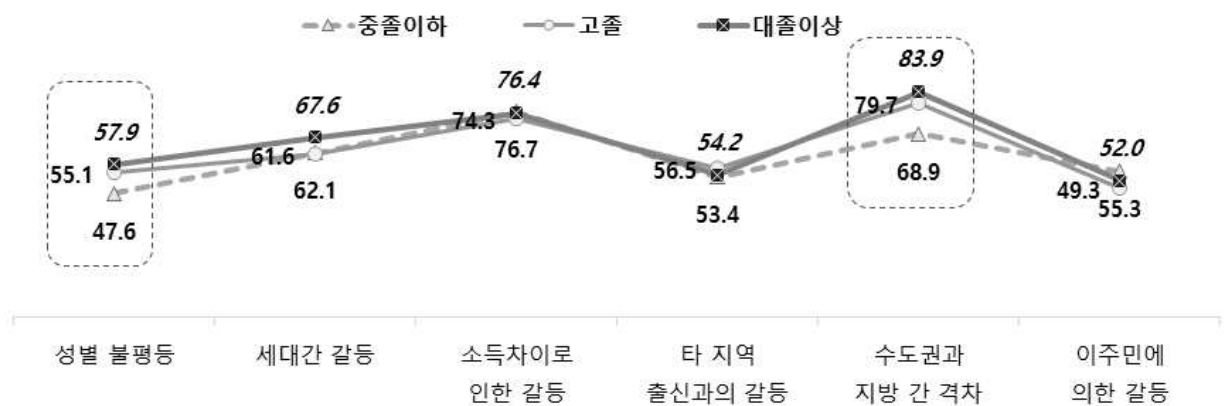
[그림 VI-44] 사회갈등 개선 필요도_성별 분석

※ 상기 수치는 top2%(시급히 개선 필요+개선필요)를 의미

8.2.2. 학력별 차이

□ 사회갈등 개선 필요도에서 학력 간의 차이 나타남.

-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성별 불평등과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의 개선 필요도가 약 10% 가까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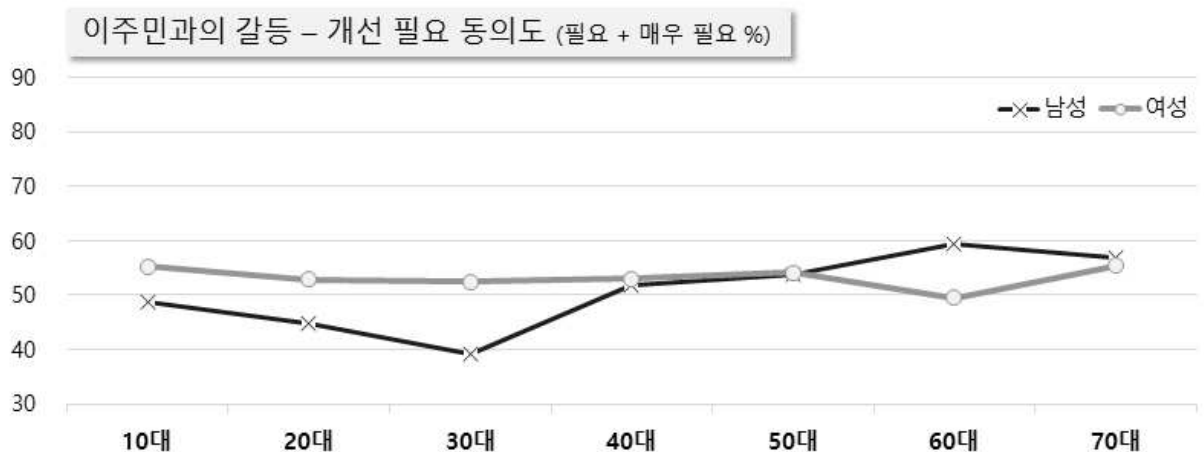


[그림 VI-45] 사회갈등 개선 필요도_학력별 분석

8.3. 이주민과의 갈등 개선 필요도

□ 30대 남성의 이주민 갈등 개선 필요도 낮은 편

- 여성은 이주민과의 갈등 개선 필요도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는 반면, 남성의 경우, 30대에서 이주민과의 갈등 개선 필요도가 타 연령대에 비해 낮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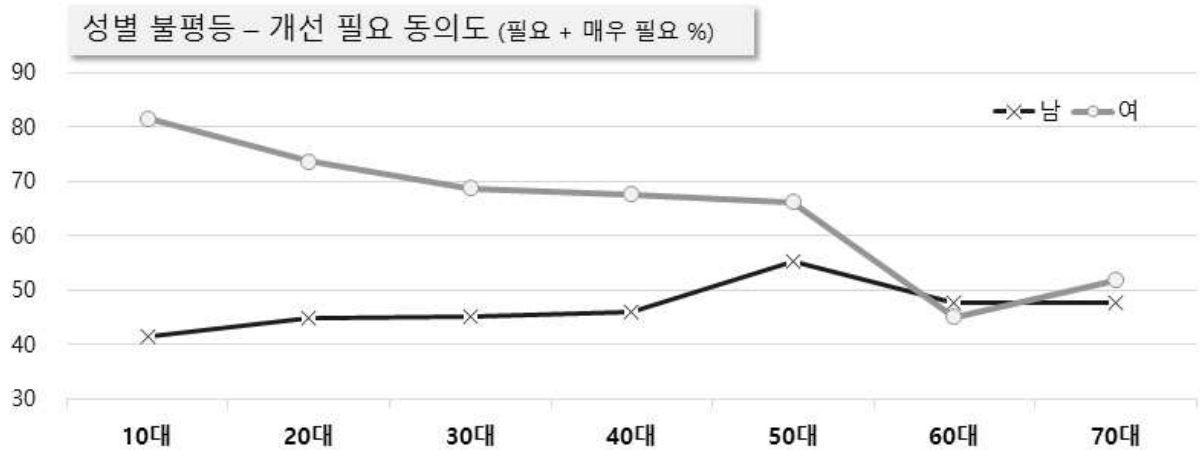


[그림 VI-46] 이주민과의 갈등 개선 필요도_성×연령별 분석

8.4. 성별 불평등 개선 필요도

□ 성별 불평등 개선 필요도에서 남녀 차이 극명하게 드러남.

- 10대 여성이 인식하는 성별 불평등 개선 필요도가 남성의 약 2배로 큰 차이가 있음.
- 여성과 남성의 성별 불평등 개선 필요도 인식 차이는 40대까지 지속되다, 50대 남성이 40대 남성에 비해 성 불평등에 대한 개선 필요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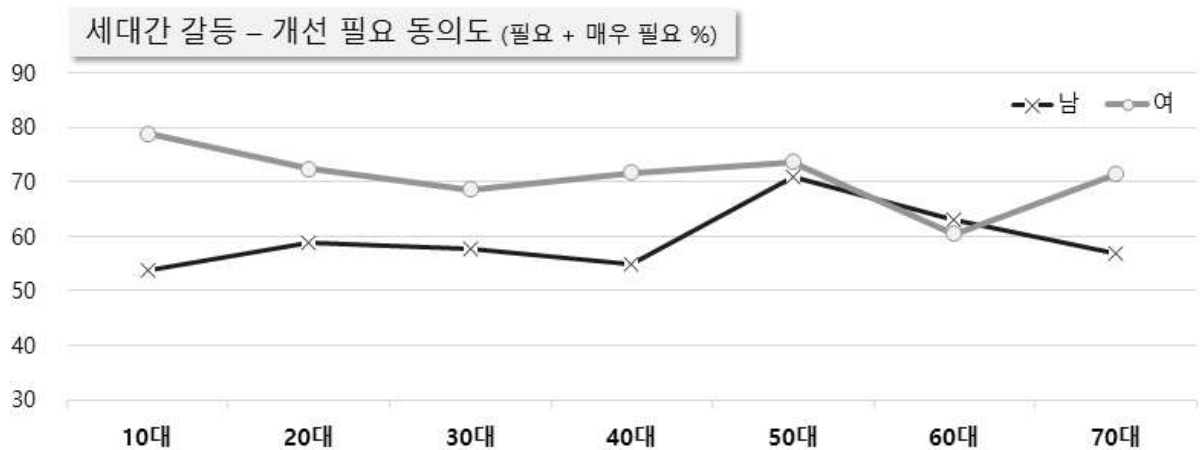


[그림 VI-47] 성별 불평등 개선 필요도_성×연령별 분석

8.5. 세대간 갈등 개선 필요도

□ 10~40대까지 세대 간 갈등의 개선 필요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

- 특히 40대 이하의 연령집단에서 남녀 차이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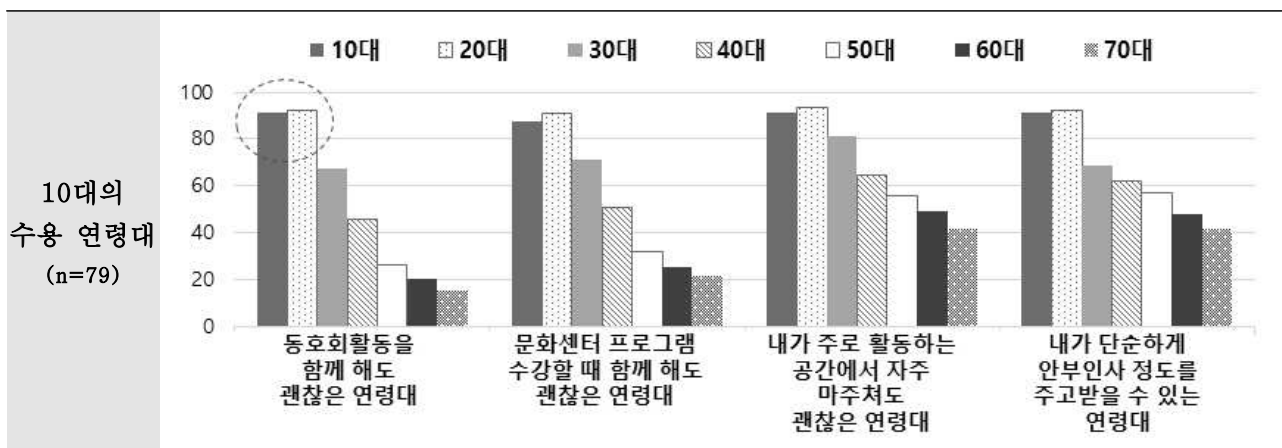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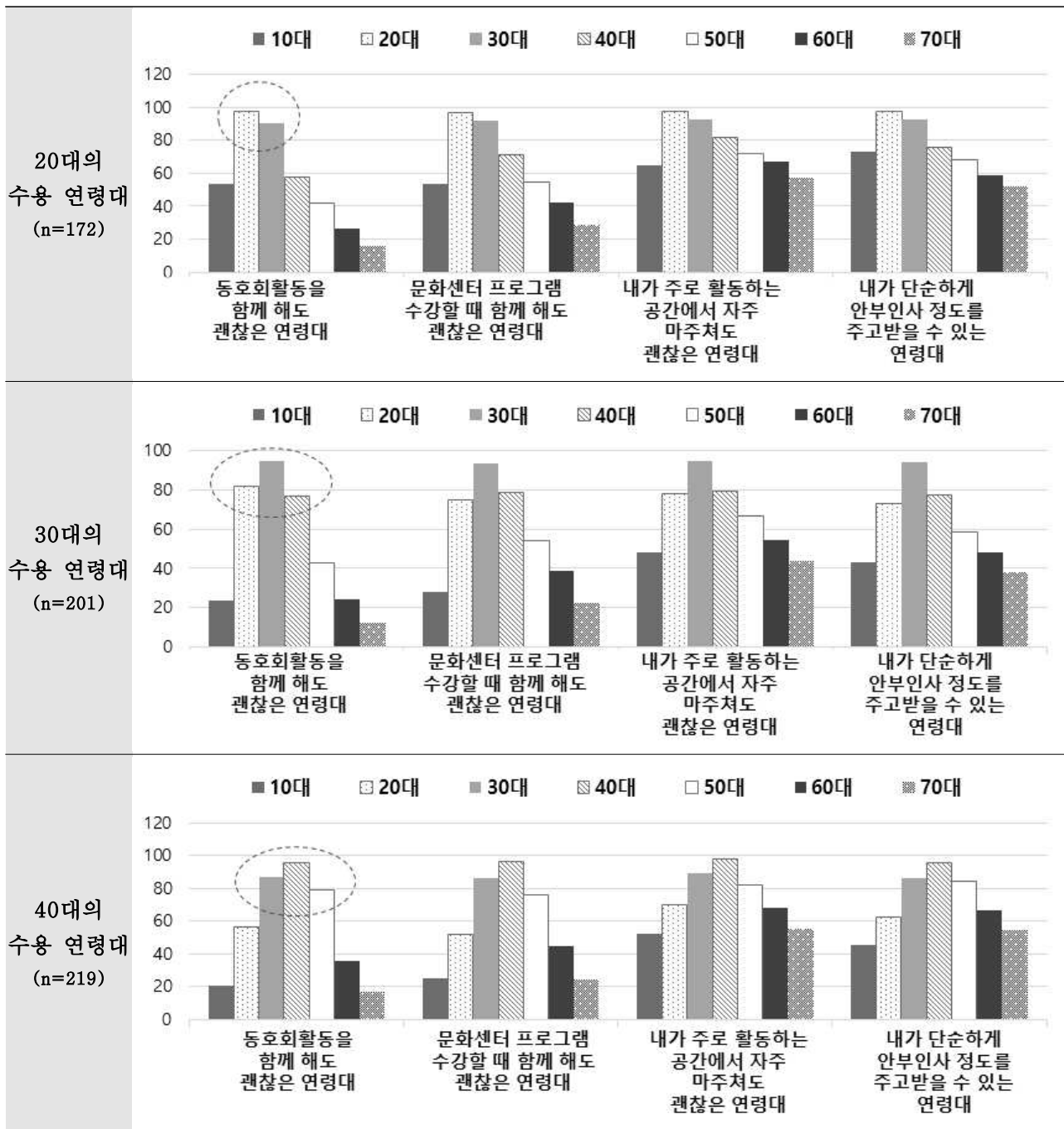
[그림 VI-48] 세대간 갈등 개선 필요도_성×연령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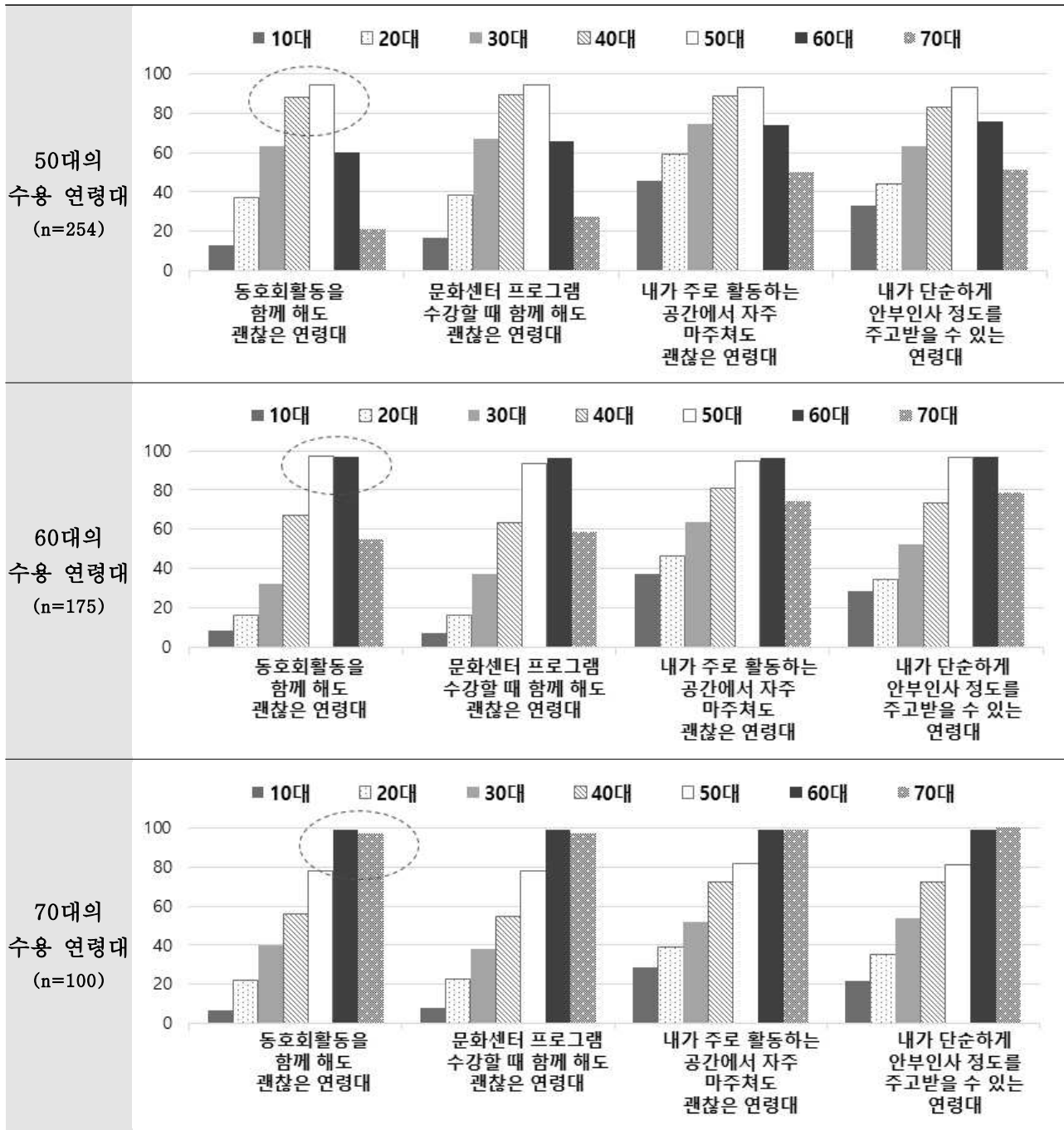
8.5.1. 활동 유형에 따른 연령 친밀도

- 20대를 제외하고 10대에 대한 거리감 존재
- 40대 연령까지는 본인보다 한 단계 윗 연령대에 대한 친밀도가 있으나, 50대부터는 아래 연령대에 대한 친밀도를 더 느낌.
- 즉 60대에 대한 심리적 단절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10대 : 10~20대에 대한 친밀도 높음. 60대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약 30~40%정도만이 같은 공간에서 마주쳐도 괜찮다고 인식
 - 20대 : 20~30대에 대한 친밀도 높음. 10대에서는 20대 친밀도가 높으나 20대에서는 10대 친밀도 낮음.
 - 30대 : 20~40대에 대한 친밀도 높음.
 - 40대 : 30~50대에 대한 친밀도 높음. 40대는 50대보다 30대에 대해 더 친밀함을 느낌.
 - 50대 : 40~50대에 대한 친밀도 높음. 전반적으로 본인보다 한단계 앞 연령대에 친밀감을 느끼던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보면 50대는 앞 연령대인 60대에 대한 친밀도가 높지 않음.
 - 60대 : 50~60대에 대한 친밀도 높음. 70대에 대한 거부감 존재
 - 70대 : 60~70대에 대한 친밀도 높음. 10대의 70대에 대한 거부감보다 70대의 10대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큰 편임.

문) 다음 각 활동별로 함께 참여해도 괜찮은 연령대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그림 VI-49] 활동유형에 따른 연령별 수용도

8.5.2. 세부집단별 분석

연령 :

☞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이 더 많은 편임. ('직장여성은 아이에게 피해를 줌' : 20대 14.0% Vs. 70대 48.0%)

☞ 70대를 제외하고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즉 젊은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에 대해 특별히 부정적이지 않음. 오히려 노인에 대해서는 젊은 층보다 중년 이상에서 더 부정적이기도 함. ('노인은 사회의 짐이다' 동의율 20대 9.9%, 50대 12.2%, 70대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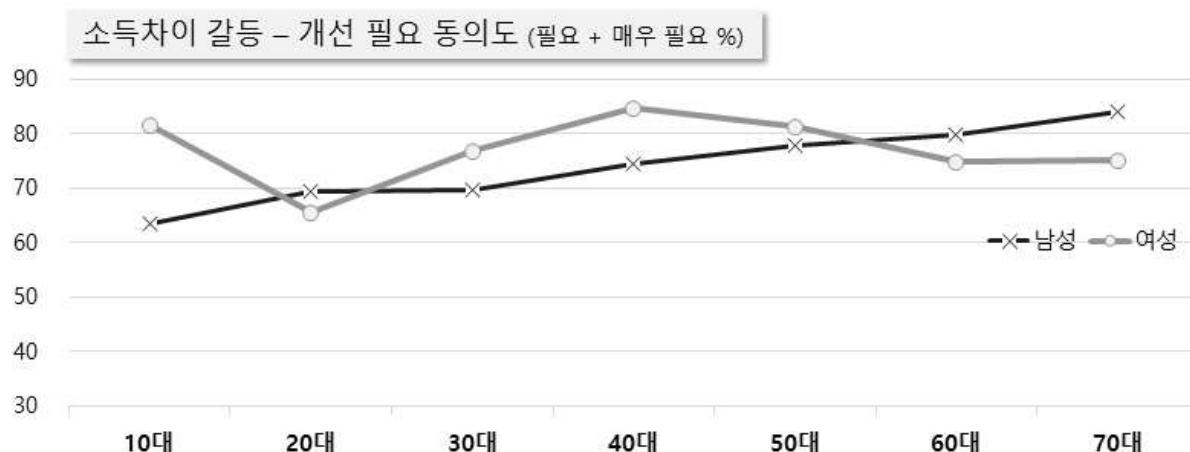
- ☞ 반면 '젊은 층'에 대한 인식 차는 연령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은 노력이 부족'하다 응답에서 20대는 9.9%인 반면 70대는 42.0%로 인식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임.

성별 :

- ☞ 남성은 여성대비 기업최고경영자로서 남성이 더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함.
- ☞ 여성은 남성대비 '중요한 혜택이 수도권에 많다'라는 인식이 더 강함.

8.6. 소득차이 갈등 개선 필요도

- 남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은 30/40/50대에서 소득차이 갈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
 - 30/40/50대 여성은 해당 연령대 남성에 비해 소득차이 갈등이 개선 필요하다는 인식이 소폭 높은 편임.
 - 특히 40대 여성은 40대 남성에 비해 개선 필요도가 약 10% 정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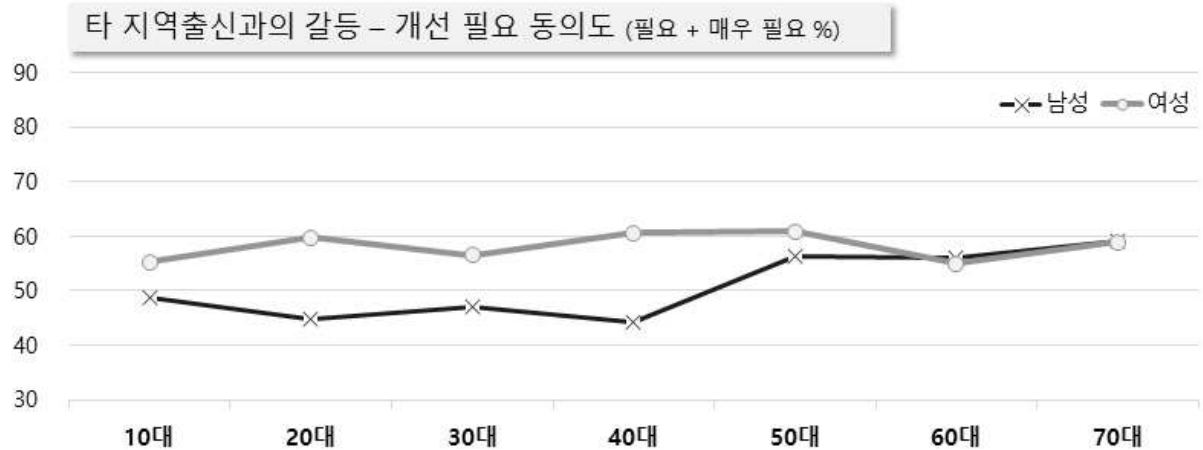
[그림 VI-50] 소득차이 갈등 개선 필요도_성×연령별 분석

8.7. 타 지역 갈등 개선 필요도

- 타 지역출신과의 갈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음.
 - 여성의 경우 40대 이하에서 남성보다 약 10% 가까이 개선 필요도를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대간 차이가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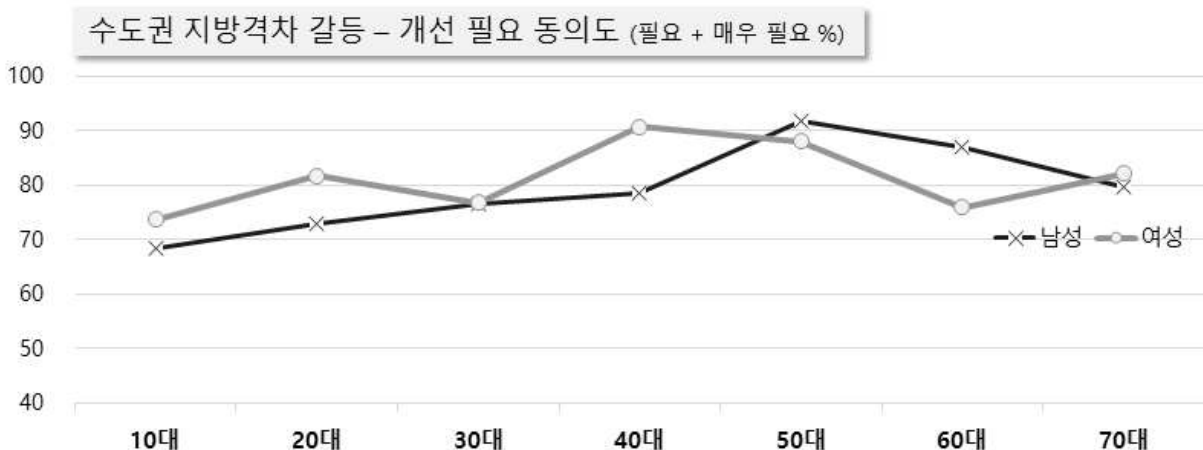
- 남성의 경우, 10/20/30/40대에서 타 지역 출신과의 갈등이 개선 필요하다는 인식이 거의 유사함.



[그림 VI-51] 타 지역출신과의 갈등 개선 필요도_성×연령별 분석

8.8. 수도권 지방격차 갈등 개선 필요도

- 남녀모두 10대에서 40대로 갈수록 수도권-지방격차 갈등 개선 필요도가 상승하는 경향
 - 특히,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해당 연령대의 남성에 비해 개선 필요도를 인식하는 층의 비율이 약 10% 가까이 높음.



[그림 VI-52] 수도권 지방격차 갈등 개선 필요도_성×연령별 분석

V. 부산 문화다양성 관계자 인터뷰 결과분석

1. 결혼이주민 활동가 인터뷰 결과
2. 이주민 활동가 인터뷰 결과
3. 청년 활동가 인터뷰 결과
4. 장애인 활동가 인터뷰 결과
5. 여성 활동가 인터뷰 결과
6. 여성 연구자 인터뷰 결과
7. 성 소수자 활동가 인터뷰 결과

V 부산시 문화다양성 관계자 인터뷰 결과분석

1. 결혼이주민 활동가 인터뷰 결과

1.1. 부산 이주민 관련 현황

- 부산은 서울에 비해 이주민 수 및 이주민 활동단체 수가 적은 편
 - 서울은 외국인도 많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아서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적음. 또한, 작은 도시나 지방의 경우 외국인 며느리가 많아서 이에 대한 거부감이 적음.
 - 부산은 서울과 작은 도시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음. 활동단체가 서울처럼 많지 않으며, 있어도 함께 활동하기에는 활동 분야가 다름.
- 이주민의 한국 거주 연차에 따라 생활패턴이 다름.
 - 이주민이 한국에 오면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지만, 5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사람은 언어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이상 센터에 가지 않음.
 - 그러다 보니 갈 곳이 사라지고, 점점 한국인과 접촉하는 분야도 협소해짐. 자기 동네, 이웃 정도까지만 접촉하고, 문화재단 등과 접촉하면서 활동 영역을 확보함.

1.2.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

-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인 편
 - 부산의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는 다문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편하게 다가감.
 - 고등학생, 대학생은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다문화가족이 주위에 많지 않기 때문에 접촉이 많지 않음.
 - 대학생은 대학교 내에서만 알고 지내며, 외국에서 온 학생들도 학교 내에서만 활동하고, 외부에서 시민과 함께 활동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고 있지 않음.

□ 성인들의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접촉 경험과 인식에 한계 있음.

- 40~50대 여성은 다문화 관련 봉사활동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이주민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음.
- 40대 이상은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낮은 연령대에 비해 높다고 생각함.
- 60대 이상 남성 노인들은 외국인 이주민을 보고 시집 잘 왔다는 등의 말을 많이 하는 등 거부감이 없음.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에게 우리나라 왔으니 애 많이 낳아줘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함.

1.3. 이주민 특성에 따른 부산 시민의 인식 차이

□ 이주민이 한국에 왜, 어떻게 왔느냐에 따라 해당 집단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짐.

-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민, 이주민의 자녀, 외국인 유학생으로 이주민을 구분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 수용도가 가장 낮음. 이는 대중매체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함.

□ 한국인 가족에 편입되는 결혼이주여성, 이주민 자녀에 대한 온정적 태도

- 결혼이주민 여성에 대해서는 한국은 시집오면 '우리 집 식구'라고 생각하고 챙겨야 한다는 인식이 있음.
- 이주민의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인식하여 가족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 같음.

□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경제적 지위, 체류 불안정성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음.

- 외국인 근로자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왔다고 생각함.
- 외국인 근로자는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갈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피해를 주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듯함.

□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호의적 태도, 그러나 이주노동자이자 학생인 경우가 다수

- 외국인 유학생은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아는 것도 많고 돈도 많다고 생각함.
- 그러나 실제로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배우는 학생들이 많음. (노동자이자 유학생의 지위를 보유)

□ 부산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개선됨.

- 10년 전에 비하면 부산 내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뀜. 10년 전에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신기해했지만, 지금은 편하게 받아들임.
- 이러한 변화는 정책으로 인하여 다문화는 우리 주변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1.4. 이주민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성과

□ 초등학교·중학교의 다문화 교육이 일정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음.

- 학교에 다국적의 외국인 선생님들이 오기 때문에 학생들은 익숙하지만, 아직까지 60대 이상의 교장, 교감 선생님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이주민 자녀의 경우, 차별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짐. 아이들이 스스로 엄마가 외국인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나 차별 받을까봐 엄마가 아이에게 말하지 말라고 교육하기도 함.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아이는 70% 정도 있음.
- 15년 전에 국제결혼이 많았으며, 현재 초등학교에는 그때 결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많음. 각 반에 1~2명이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다문화가 이제는 특별하지 않음.
- 다문화 관련 교육에 관련하여 이주민과 선주민의 분리가 아닌 통합교육에 대한 성찰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일정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함.
- EBS 광고나 인권에 대한 캠페인, 이주민 2세대와 관련된 집중교육을 하면서 이에 따른 성과도 있었음.

□ 먼저 정착한 이주민들이 후배들을 도와주는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

-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 문화를 몰라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의 적응을 도와주다보니 많이 힘들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려 사는 방법을 터득함.
- 초반에는 한국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 무조건 따르라는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은 몽골에서 다른 친구가 오면 한국 문화는 이런 문화가 있고, 이렇게 하면 좋으며 저렇게 하면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해줄 수 있음. 노하우가 생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어떻게 하면 좋다고 서로 공유함.

1.5. 이주민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과제

□ 이주민 중 유학생의 차별적 지위에 대한 관심 낮은 편

- 다문화 관련된 교육은 교육부에서, 보건·위생에 관련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진행하는데 주로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됨.
-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접근 방식에서는 일부 개선할 점이 있으나, 해당 집단이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 반면, 유학생은 국제교류부서에서 담당하는데, 유학생은 글로벌한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유학생이 받을 수 있는 차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음.

□ 이주민 남성은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향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면 대부분 여성이며, 남성들은 갈 곳이 없음. 대부분의 남성 이주민들은 국제교류재단이나 대학 언어 교실 등 돈을 주고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남성반을 따로 만들어놓으면 가겠지만 아무래도 수가 적기 때문에 돈을 내고 대학교에서 배움.

□ 이주민 대상 교육이 일방적 동화 정책에서 상호이해로 전환될 필요

- 한국에 왔으니 한국 방법에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과 한국 문화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주는 것은 다름.
- 외국 사람은 외국 사람대로, 한국인은 한국인대로 서로를 대하는 경험치가 필요함. 이러한 경험을 쌓는데 5년 이상의 시간 투자는 필요함.

1.6. 이주민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향후 방향

□ 장기적 관점에서 이주민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 부산교육청에서는 처음에는 한국인과 다문화 자녀들이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을 진행함.
- 이후 통합교육에서 다문화 학생들에게 어머니의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이중언어 교육을 진행하다 이중언어 교육이 중단됨.
- 이중언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20~30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5년마다 바뀌

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음.

□ 이주시기에 따른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

-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은 민족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기보다는 이주 시기, 이주 당시의 연령대에 따라 다름.
- 이주 초기인 5년 차까지는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다, 5년 이상부터는 내 나라를 알리고 싶다는 등의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주기별 지원이 필요함.

□ 이주민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공간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

- 이주민들의 나라별 커뮤니티가 있지만, 각 커뮤니티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음.
- 한국어 교실은 초기 5년에 운영되나, 5년 이후가 되면 한국어 교육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5년간 소속감을 가지고 있던 곳에서 밀려나게 됨.
- 여러 나라 문화가 다양하게 숨쉬고, 각자의 모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자기 나라의 언어로 자기 문화를 말할 수 있거나 엄마의 언어를 배우면서 엄마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2. 이주민 활동가 인터뷰 결과

2.1. 부산 이주민 현황

□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라서 이주노동자만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혼이주여성 대다수가 일하고 있어서 결혼이주여성도 많이 방문함. (상담의 10%가 다문화 가족 관련 상담)
-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결혼이민자가 되겠지만, 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면 외국인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주민이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난민 신청 자격을 상담하지 않지만, 노동자인 난민들이 상담하러 옴. (부산에는 28~30명 정도 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90%는 사상구에 거주).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는 명칭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민이 모두 포함되어있음.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대상임.

□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기 어려움.

- 본 센터가 있는 지역은 80년대 자동차부품공장, 신발공장이 있던 곳으로 예전에는 산업체 고등학교 다니면서 주·야간 공부하던 학생들 등이 거주하던 곳이었음. 이후 공장이 문을 닫고 나서 이주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거주하고 있음.
- 이주노동자들은 공장에서는 대체로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음.
-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디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다양하나, 대체로 이 지역에서 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70~80대 한국인이 집주인인 집에 거주함.
-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 가족이 없으면 선주민과의 교류가 단절되기 쉬우며 한국인 가족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동화되지 않으면 남편과 세대 차이 등이 극복되기 어려움.

2.2. 이주민 내의 다양성

□ 이주민이 증가된 지 오래되어 이주민 내에도 세대 다양성이 공존

- 이주노동자 관련 활동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어가는데, 이주노동자들도 세대가 달라져서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

□ 이주배경과 계기에 따라 이주민 내 다양성이 공존

- 이주결혼을 통해 온 사람이 있고, 유학이나 산업을 위해 한국에 왔다가 결혼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성 산업 종사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음.
- 산업연수생으로 온 이주민들과 결혼이주여성들과의 갈등도 초반엔 심했음. 국적별로 유학생으로 온 사람들, 근로자, 결혼이민자(결혼이 유지가 잘 되는 사람들과 유지되지 않는 사람들) 등등 차별이 있음.
- 결혼이주여성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성매매 여성들이 들어오면서 부정적 인식이 생긴다는 점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함.
- 결혼이주여성 역시 시댁 식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은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증명하면서 살고 있음.

□ 이주배경 자녀 내 다양성이 증가

- 한국 남성과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경우, 부모가 이혼하면서 어머니 친정(외국)에 아이들을 보냈다가 한국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재입국하는 아동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 중도입국자녀는 일반학교 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반이 따로 있는 다문화특성화 학교로 보내지나 한국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적응이 어려운 경우 또한 발생함.

2.3. 부산시민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 이주노동자를 불쌍하게 보는 시선이 많음.

- 언론에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는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서 이주노동자들을 불쌍하게 보는 시선이 있음.
- 이주의 계기를 이주노동이 아닌 유학이라고 얘기하는 경우, 불쌍하게 보거나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적어 이주노동자가 아닌 유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음.

□ 이주노동자·난민에 대한 접촉 경험 부족이 부정적 시선으로 연결

- 이주노동자나 난민은 우리 식구가 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인식조사 결과에도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이주노동자·난민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낯설고, 무서워함. 이 때문에 이주민이 많아지면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말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말을 하기도 함.
- 이주노동자가 속한 산업군은 청년들이 피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노조 등이 이주노동자로 인하여 일자리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함. 또한, 건설업계에서는 이주노동자로 인해 저임금 현상이 발생한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함.

□ 해외 경험이 있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

- 20대는 유학 경험이나 워킹홀리데이 등의 경험으로 본인 또한 이주노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함.
- 특히 이주노동자 중 같은 연령대(20대)인데 나는 누리고 살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봉사활동을 오기도 함.

□ 10년 전에 비해 결혼이주여성·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인식은 나아지는 중

- 대부분 이주민의 자녀에게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태도는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됨.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지역의 학교일수록 학생 수 감소에 비해 이주민 자녀 학생 수가 급증하여 한부모·조손가정 학생들 관리로 인한 어려움을 가중시켜 학교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음.

2.4. 부산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 현황

□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수는 매우 적음.

- 부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인 반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1개소임.
- 결혼이주여성 또한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을 한다고 보았을 때,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수가 매우 부족함.

□ ‘근로’는 대다수의 이주민과 연결될 수 있는 이슈이나 이주배경에만 초점을 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행정에서 보기에겐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사람만이 노동자이고, 결혼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나 아르바이트로 노동을 하는 유학생은 외국인 근로자라고 인식하지 않음.
- 난민이나 이주노동자로 입국한 이후 한국인과 결혼 할 수 있어,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

자·난민이 다문화가족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지원센터가 구성되고 정책 지원이 이루어짐.

2.5. 이주민 지원 정책의 향후 방향

- 이주민 지원센터(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
 -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은 없어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나, 지원센터를 없애는 방식 또한 중요함.
 - 최근 건강 가족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통합되는 추세임.
- 이주 초기 정착기(약 5년) 이후에 대한 지원 필요(커뮤니티, 공간 지원 등)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초기 교육·지원을 하는 곳이나, 초기 정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는 지원이 없음.
 - 반면, 입국한 지 5년 정도 되면 일하기 시작하여 노동환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네트워크·커뮤니티 형태의 지원 필요
 - 부산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1개소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좁고, 시설 내 외국인 근로자가 네트워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한계가 있음.
 - 외국인 근로자가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자국민의 식당으로 가서 모임을 하기도 하나, 자조적인 활동 중심이다 보니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정착 초기 한국어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어 외국인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사업영역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프로그램 또한 포화상태임.
-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건강한 노동자로 한국인과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
 - 과거에는 결혼이주여성을 잡아두기 위하여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며느리(결혼이주여성)가 일하기 바람.
 - 궁극적으로 이주민이 선주민과 잘 어울리고 안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이며 이는 개인 하나하나를 놓고 보았을 때 너무나 당연한 일임.
-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도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초등학교에 다문화 강사단을 파견하여 교육하던가, 이런 게 직장 등 성인에게도 전파되

있으면 함.

- 현재 직장에서 진행되는 4대 법정교육에 다문화도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음. 다문화교육이 아니라 인권교육으로. 인권교육이 바로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교육임. 이를 통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질 것.

□ 협의의 '문화'로 해석하는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확장될 필요

- 문화다양성을 일상의 영역으로 해석하면 차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필요 있음.
- 정책 입장에서 문화다양성에서의 '문화'를 협의로 해석할 경우 축제나 자국민 문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잘못된 접근임.

□ 이주민이 선주민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형태의 지원이 필요

- 창원에는 이주민지원센터가 복합상가 안에 있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장소를 이동한 적이 있음.
- 이주민을 지원하는 센터를 선주민과 만날 수 없는 고립된 지역에 설치할 경우, 이주민이 더 고립될 가능성이 있음.

3. 청년 활동가 인터뷰 결과

3.1. 부산 세대간 갈등 현황

☐ 부산은 세대 간 갈등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

- 부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특성이 있음. 오히려 외지인에 대한 견제보다는 타 세대의 진입에 대한 견제가 더 심함.
-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부산에 오거나 부산에서 활동하다가 다른 지역 갔다가 다시 와도 배제하지 않지만 다른 세대에 대한 배제는 심함. 일자리 자체가 너무 없다는 점도 맞물려있음. 예를 들어, 시민사회단체의 간사, 문화예술단체, 재단, 기업에서 팀장이라는 직급은 40대가 넘어야 함.
- 세대의 경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대의 활동이나 장점(예. PPT 능력 등)에 대한 부담감이 청년 세대에 대한 거부감으로 연결될 수 있음.

☐ 청년의 창업·새로운 활동에 대한 사회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는 아님.

- 부산에는 산업, 기술, 서비스 직종의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어 전반적으로 일자리 수가 낮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서비스 업종의 창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요구가 있음.
- 소셜벤처 같은 경우에도 청년이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했을 때, 지지하는 분위기가 거의 없고 오히려 기존 세대가 본인의 활동 영역과 비교하여 견제하기도 함.
- 다른 지역에 비해 부산의 시민사회단체가 많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단체가 유지되는 것이지 새로 만들어지는 단체는 거의 없음.

☐ 부산 청년 중 여성의 경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

- 최근 전국청년네트워크에서 청년 정책 안에서 젠더에 대한 리서치를 시작하는 등 청년 세대 안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
- 부산시에서도 문화분야에서 기획자 그룹 안에 여성 후배들이 거의 없는 편이며, 최근 들어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직급이 높아질수록 점점 사라지는 경향이 있음.

3.2. 부산시 청년 지원 정책 운영 현황

□ 2017년 5월 부산 청년 기본 조례 제정

- 부산시는 2017년 5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부산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운영 중임.
-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청년정책에서는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확대, 일자리 질 향상, 생활안정, 청년문화 활성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부산청년포럼은 2016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2017년에 제정된 부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다 사단법인 등록은 2019년 1월에 진행함.

□ 부산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이후 시민사회 공동대응의 필요성 대두

- 조례 제정 이후 부산시 소속으로 청년위원회가 약 70명 정도로 구성되어 분과별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부산은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시 급하게 진행되어 청년일자리조례와 청년문화조례를 합쳐 제정되어 아쉬움이 있어, 일자리와 문화에 관련된 정책의 차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조례 제정 이후에도 일부 시 의원들의 발언 중, 청년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나 불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언급되고 있어, 시민사회에서 연대하여 항의를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부산청년포럼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 청년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사업 모니터링을 운영하거나 청년 출마자의 지도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3.3. 부산문화재단 청년 지원 정책 운영 현황

□ 부산문화재단에서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조례에 기반한 사업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 상황

- 부산문화재단은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 35억 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예산이 배정된 편임.
- 사상 인디스테이션, 민락 인디트레이닝 센터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공간이며, 공간 유지비를 제외하고 실제 지원금은 15억 정도로 다른 시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높은

편입.

-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이후에 부산문화재단의 청년 지원사업과 조례에 기반한 사업 등이 같이 운영되고 있어, 각 사업별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부산 청년 기본 조례에 기반하여 청년수당 지급, 청년을 위한 디딤돌 카드, 공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를 위한 전기차 지원 등 청년 지원 사업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음.

□ 2018년 청년문화실태조사(부산문화재단)를 통해, 분야별 청년정책 어젠다를 도출

- 청년(만 18~34세)문화실태조사 결과, 청년정책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청년문화를 볼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높음.

<표 VII-1> 분야별 청년정책 어젠다 목록

분야	정책 어젠다
청년정책 기반 개선 및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과 신설 - 부산청년센터 설치 - 청년 참여기구(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상설화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청년 혁신일자리 - 표준이력서 및 블라인드 채용민간 확대 - 아르바이트 포함 임금 체불 긴급 지원
진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갭이어 - 청년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 확대 - '부산형 대학 자유학기제' 도입 권고 및 활동비 지원
주거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주거 기금 마련 및 임차보증금 지원 -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공공이 주도하는 부동산 정보제공기준 마련 - 부산형 청년임대주택 확대
소득/채무 등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출발자산 - 부산청년혁신적금 - 악성화 대출 채무 조정 지원 사업 - 청년 생활 자금 대출 지원 사업
삶의 질/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사례관리사 및 센터운영 - 부산 청년마음건강 센터 설립 - 부산 청년건강검진 확대
문화/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예술·창작 지원 청년할당 - 청년문화허브-만랩 운영 - 지역 주요 문화시설 프로그램 연계 - 청년 휴페스

(출처: 김종욱, 김형균, 김도관, 박경옥(2018). 부산청년종합실태조사)

3.4. 부산 청년 지원 정책의 과제

□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이슈를 중심으로 청년 정책이 논의될 필요 있음.

- 부산에서는 청년만을 이슈에 두고 정책이나 사업을 설계한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청년을 주요 안건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간담회나 행사를 시민사회에서 만들었으나, 청년이 아닌 활동가와 실제 청년인 활동가들 간의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로 의견 수렴에 어려움을 겪음

□ 청년이 관찰자 관점을 벗어나서 직접 정책 입안에 나설 필요 있음.

- 본 조사결과 ‘노인은 사회의 짐이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20-30대와 40대 이상이 다르게 나타남. 이는 40대 이상이 아래 세대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 30대가 창업이나 사회활동을 하려고 해도 결정권이나 자율권이 없어 관찰자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당사자 중심의 청년정책 입안이 필요함.

□ 세대 간 갈등에 대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

- 부산시민센터(시민단체)에서 청년활동가 휴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단순히 워크숍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 단체에 속해있는 청년활동가를 모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것에 대한 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 꼭 필요한 활동이라는 반응을 보임.
- 문화 수용을 위해서 예열하거나 뜯 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음.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단체에서도 세대 간 갈등에 대한 내부정리를 하지 못하는 실정임.
- 사회 전반에 세대 간 갈등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기 위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세대 역할, 세대 간 이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함.

4. 장애인 활동가 인터뷰 결과

4.1. 부산시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 부산시민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미비

- 본 조사결과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전국 73%인데 반해 부산이 38%로 낮은 것은 장애인이 지원받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됨.

□ 10년 전에 비해 장애인 접촉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

- 2000년대 이전에는 장애인을 보기가 힘들었음. 길에서 시각장애인은 있어도 지체장애인들은 없었음. 최근 전동휠체어가 보급되면서 장애인들의 외부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아짐. (2007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작)
- 소수집단에 대한 다수자의 인식 개선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함께 어울리는 것임. 서로 모를 때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식함. 활동 지원 서비스와 함께 활동하는 등으로 인해 접촉이 증가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함.

4.2. 부산 장애인 현황

□ 장애인은 주목받기 싫어 문제점을 드러내고 개선하려는 데에 소극적인 특성 있음.

-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을 때 ‘이건 차별이다,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많음. 차별받았을 때 장애인인 것을 드러내고 문제를 제기해야 하나,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있어 한계점이 있음. (장애인 자체의 인신 전환이 필요)

□ 부산은 산이 많은 지형으로 장애인의 이동성에 어려움이 많음.

- 부산은 산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부산에서 다니기 힘들. 장애인은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데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니까 비중 있게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음.
- 특히, 장애인 콜택시의 문제가 큼. 장애인 콜택시에 고령자도 탑승할 수 있게 풀어버리면 서 대기가 매우 길어짐. (법정 대수는 늘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증가하지 않음.)

□ 부산은 도시·문화·관광 분야에서 무장애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음.

- 부산은 무장애 관광이나 문화시설의 배리어프리 등의 여건이 잘 되어있지 않음.
-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도시계획에 비중 있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의 의료·직업만을 담당하고 도시환경에 대한 부분은 담당하고 있지 않음.
- 영화관 장애인석의 경우, 현재 맨 앞줄이나 맨 뒷자리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영화를 즐기기 어려운 환경임. (계단으로 된 객석 환경 개선 필요)
- 물리적인 배리어프리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함. 문화관광 관련된 예약을 할 때, 장애인의 인터넷 접근이나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을 배려하지 않음.

4.3. 부산 장애인 지원 정책의 과제 및 방향

□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 장애인 접촉이 많아졌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최근 장애인을 배려한 법적인 제재나 타인의 시선, 공공기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여건이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장애인을 봤을 때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함.
- 장애인을 비장애인이 경쟁대상으로 보지 않고 도와줘야 하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복지 중심으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장애인 인식과 관련된 지속적 교육의 필요성 및 성인대상 장애인 교육의 개선 필요

-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300명 이상 기업,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음.
- 실제 교육을 하고 나면 아이들은 호기심을 가지면서 질문도 많이 하고 길에서 만나면 인사하기도 함.
- 성인이나 공무원 교육을 하면 의무적으로 듣는 분위기이나 실제 교육 이후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생각됨.

□ 외국 사례에 대한 무분별한 벤치마킹이 아닌 한국 실정에 맞는 장애인 제도나 정책 도입이 필요

- 한국에서는 외국 사례를 정책이나 제도에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의 효과에만 주목하고 실제 한국 상황에 맞는 적용을 고민하지 않아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거의 없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법은 있지만, 시행 규칙이 정확하게 없고 강력한 규제 역시 없음.

□ 장애인에 대한 부처 간 통합 지원이 필요

- 대중교통으로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하철 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하고, 인도, 건물목 등은 경찰청이나 시청에 요청해야 하는 등 장애인이 스스로 관련 부처를 파악하여 문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장애인 정책 및 지원에서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가 큼. 정부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관련 사업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드뭄.

□ 장애인의 문화권에 대한 인식 및 지원 정책이 필요

- 장애인을 지원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생활인으로 보았을 때, 복지뿐만 아니라 문화적 권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장애인의 문화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망 이외에도 예술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필요 있음.
- 축제·영화관람·공연 관람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장애인의 참여가 적은 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음. (축제 참여자 중 장애인 참여자 수의 비율을 축제 평가에 반영하는 안이 제기됨.)

□ 장애인의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

- 수혜자가 아닌 창작자·공연자로 활동하는 장애인의 등장을 문화예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 있음
- 장애인이 문예회관을 대여하려 할 때, 할 수 있는 공연의 한계가 있는 등, 장애인이 적극적인 문화창작자로 활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으로만 보는 시선에서 전문 영역으로의 발전을 이뤄낼 필요 있음.

4.4.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장애인

□ 문화다양성의 주요 영역 중 하나인 장애인

- 영국이나 호주의 경우, 문화다양성 사업 중 핵심 사업이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며, 일본의 경우에도 장애인 관련 조례가 있음.
- 현재 부처로 나누어져 있는 장애인에 관련된 지원 정책이 문화다양성에 포괄되어 문화다양성 관련 부서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수행이 필요함.

□ 장애인의 다양성에 대한 주목이 필요

- 장애인을 ‘신체적인 결함’이라는 것으로 통합하여 분류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됨. 장애인 고용할당제의 경우에도 장애인 채용에 지원한 시각장애인이 합격 이후에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음.
- 장애인의 수는 소수집단 중에서 가장 많은 편인데, 장애인이 된 다양한 경로가 있음에도 통칭하여 장애인으로 분류한 정책이 집행됨으로써 실제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이 수립·집행되기 어려움.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의 차이, 시각장애인 내에서도 선천적 장애인/후천적 장애인/약시 등의 구분이 없음.)

5. 여성 활동가 인터뷰 결과

5.1. 부산시민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

□ 성차별에 대한 남성의 낮은 관심

- 보통 미디어에서는 20대 남성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⁷⁾이 부각되는 반면, 본 조사결과에서 따르면 부산은 30대 남성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문제인 것으로 보임.
- 성차별 이슈에 대해서는 남성의 공감도가 낮음. 정책, 의제, 담론과 관련된 여성 이슈는 남성이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상대적으로 일본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으로 발표했을 때 200명 중 절반 이상이 남성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남성의 참여는 1~2명 정도밖에 되지 않음.
- 부산에서 성차별 이슈와 관련된 행사를 진행했을 때 남성 참여는 거의 없는데 이는 남성은 출산이나 육아도 남녀 모두의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임.
- 현장에서 아무리 여성 운동을 해도 남성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여성만이 각성하게 됨. 남성들이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수록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 관련 인식의 격차가 점차 커질 것임.

□ 성차별 이슈를 사회적 문제, 남성과 연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남성에서 저조

- 부산시에서 출근 시간에 지하철 여성 전용칸을 운행하고 있는데 여성 활동가들은 여성을 전용칸 안에 가둬놓는다는 비판하는 반면 남성들은 여성에게 특혜를 준다는 관점으로 불만을 표출함.
- 여성을 지원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이나 맥락에 관해 관심 가지기보다는 지원 자체에만 초점을 둠.

5.2. 부산 남성의 성차별 이슈에 인식

□ 남성은 여성이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 (경쟁논리)

- 남성들은 여성이 시장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를 여성이라고 봄. 이러한 이슈 때문에 20~30대 남성의 거부감이 큼.

7) 시사인(2019.04.15.) 20대 남자, 그들은 누구인가. <https://www.sisain.co.kr/?act=articleView&idno=34344&mod=news>

- 40~50대는 이미 사회적 지위가 있지만, 20~30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무지' 상태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인식이 지속될 경우 성평등 문제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어려움.

□ 부산의 경우, 지방차별로 남성들이 스스로를 약자라고 생각하여 여성을 약자로 인식하지 않음.

- 지방차별에 대한 이슈와 함께 생각했을 때, 10대 남성을 제외하고 20대 이상은 지방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남성들은 자신이 약자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문제가 약자라고 인식이 되기 힘들며, 서울이 아닌 지방에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인식이라고 생각함.

□ 부산의 가부장적 분위기가 성별·세대 간 갈등 문제 해결의 걸림돌 중 하나

- 부산의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남아있음. 부산 여성 활동가들은 '공기 같은 가부장성'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그만큼 가부장성이 오랜 시간 동안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부산의 가부장성은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세대 간 갈등을 소통하여 풀어나가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산 남성의 입장에서는 가부장성을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힘든 문제일 수 있음.

5.3. 부산의 성차별 관련 정책의 과제

□ 성차별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방식의 한계 극복 필요

-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슈가 서울에서 제기되기 때문에 이슈를 풀어내는 방식이 집담회, 커뮤니티 등의 방식으로만 접근되어 한계가 있음.

□ 정책에서 종합적으로 접근되지 않는 성차별 이슈 (여성을 기능적으로 분화하여 정책 수립)

- 여성에 대한 정책은 여성과 가족을 합친 부서에서 성차별 및 여성정책을 수용하기 때문에 여성 문제와 가족 문제를 합쳐 출산과 보육에만 한정됨.
- 저출산 대책으로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지만, 여성 관련 정책은 거의 여성폭력 밖에 없으며, 예산 또한 적음.

□ 이주여성에 대한 획일적 접근 및 지원 (노동자로서의 여성이 아닌 출산자로서의 여성에만 주목)

- 다양한 형태의 ‘이주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정책이나 수용에 대한 폭은 결혼이주여성에 한정되어 나타남.
- 이주여성은 노동을 위한 이주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존재는 결혼을 위한 이주밖에 없다고 인식하며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또한 가족 관련 부서에서만 진행되고 있음
- 이주여성 문제에서는 결혼이주여성과 결혼이주 외 이주여성과의 차이가 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수용은 있지만,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이주한 여성에 대해서는 수용은 낮다고 볼 수 있음. 이 경우, 여성이 취업을 정상적인 경로로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이주민이라는 지위와 더불어 여성이라는 차별이 겹쳐져 더 많은 차별에 노출되고 있음.

□ 노동환경에서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주목 필요

-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도 시급함. 서울시는 성평등 기본 조례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산은 전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음. 성평등 근로담당관, 성평등노동조례 등 노동환경에서의 기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 부산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문제는 고위직에 여성이 너무 적다는 것임. 유리천장과 같은 것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야 함.
- 일하는 연령층에서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 업무 능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함. (남성은 여성보다 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일을 더 잘한다)

5.4. 부산의 성차별 관련 지원 정책의 방향

□ 성인지·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지역(부산)에서의 연구 필요

- 성인지,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예산 마련이나 연구를 진행하는 행정조직이 필요하나 현재 그렇지 못해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 및 평가 등이 진행되기 어려움
- 부산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삶 전반에서 차별이 느껴지나 이에 대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경영이나 인사 등에 성평등 지수, 척도가 반영될 필요 있음.
- 3·1운동 백주년에 부산 지역의 3·1운동을 최초로 한 것은 여학교인데 이에 대한 연구를 한 곳이 거의 없음. 부산에서는 여성에 대한 연구가 없다고 볼 수 있음.

□ 종합적 관점에서 성평등 정책을 집행할 전문 행정인력 필요 (예. 성평등 전문관)

- ‘미투’ 운동 이후 중앙정부부처는 여성가족부에서, 서울시나 광주시도 성평등 전문가를 행정예 배치하고 있으나, 부산은 ‘미투’ 운동 이후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없음.
- 일부 부산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계 ‘미투’와 관련하여 한시적인 지원을 한 것이 전부이며, 학교나 대학교, 사회에서 벌어진 미투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전혀 없음.

□ 부산시 행정 조직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필요

- 기본적으로 시 행정인력이 성 인지, 성 감수성 등에 대한 성숙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정책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 시민사회에서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서 산하에 두는 것이 아닌 시장 직속 기구로 배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부산의 도시 비전이나 시정 비전에 ‘여성’에 관련된 키워드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시의 정책이 여성을 고려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임.

□ 보편적·철학 관점에서 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 (초등학교부터 시행)

- 초등학교때부터 성평등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산에서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음.
- 부산교육청에서 작년에 고등학생 대상으로 민주주의 교육 중 한 파트로 ‘젠더와 민주주의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성평등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뤄질 필요 있음.
- 극우적인 성향,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소수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성평등 철학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성평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이해를 진행될 필요 있음.
- 이주여성 관련 활동단체 관계자에 의하면 이주여성들은 본인 나라에 비해서는 한국의 여성 인권이 훨씬 좋다고 인식하여 성차별,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또한 필요함.

6. 여성 연구자 인터뷰 결과

6.1. 부산시민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해석)

□ 부산시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피상적 인식에 대한 우려

- ‘우리나라는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다’라는 인식이 높은 것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준거가 없어서 피상적으로 응답했던 것 같음.
- 우리나라가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라는 인식하고 있는 층의 경우, 최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여성 혐오나 소수자의 권리가 너무 높다고 말하는 집단과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유추를 할 수 있음.

□ 문화적 차별, 소수집단에 대한 민감성이 낮음.

- ‘우리나라에서 사회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도가 높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관심이나 민감성이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이 60~70대보다 10대가 더 높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미래가 소수자에게 위협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함.
- 예를 들어, 성평등 문화가 퍼지고 젠더문화가 퍼지고 미투운동이 퍼지면서 남성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여성이 강력한 세력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남성들이 위협감을 느끼고 있어, 오히려 문화적 차별·문화다양성 감수성을 스스로 자제하거나 낮추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듭.

□ 10대/20대 등 미래사회 주역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위험 수준

- 현재 학교 내에서 일어난 성대결이나 스쿨미투 같은 것들이 매우 심하며, 특히 대학에서는 극한의 성대결로 가는 경향 또한 있음.
- 실제로 나와 다른 성별에 대해 분노나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두려움이나 위협감에서 출발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10대는 몇 년 있다가 청년사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본 조사결과 10대 남성의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워 1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6.2. 부산시민이 인식하는 성별 불평등·성소수자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해석)

- 60대 여성은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의 경험으로 성별 불평등 현실에 고착화
 - 60대 여성은 오랜 시간동안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에 젖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에서 소외되어 성별 불평등에 대해 같은 연령대 남성보다 심함.
 - 60대 남성이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60대 여성에 비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은 사회적 시선을 고려한 응답이거나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 교육에 의한 영향일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인식은 이와 다를 것임.
 - 반면 60대 여성의 경우 사회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고 고정관념에 묶여 있으며, 자식(특히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들의 입장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각이 형성되어 오지 않았나 하는 유추가 됨.
- 성소수자 이슈는 성 평등과 별개로 보는 경향 있음.
 - 양성평등 교육에서 남자가 치마를 입는 외국 동화를 사례로 활용하였다가 해당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와 교육 커리큘럼에서 삭제한 경우 있음. (남성의 성역할 문제)
 - 본 조사결과, 10대는 성에 대해 보수적으로 다른 것은 다 가족으로서 수용할 수 있으나 성 소수자를 가족으로 수용하겠다는 의향은 낮음.
- 30대 남성은 업무영역에서 여성 동료보다 남성 동료를 선호
 -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동료의 성별은 상관없다’는 문항에 대해 30대 남성의 동의도가 타 연령대에 비해 낮은 편임.
 - 30대 남성의 직장 내 여성동료는 출산휴가 등으로 인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음. (업무 현장에서 가족친화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반증)
 - 30대 남성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연령대이며, 엄마가 직장에 다니면 자신이 함께 육아에 참여해야 해서 그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음. 이게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 자신이 피해를 보는 것임. 육아가 자신의 책임으로 오는 것이 싫으며, 육아는 엄마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7. 성소수자 활동가 인터뷰 결과

7.1. 성 소수자 이슈의 특징

- 성 소수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숨길 수 있어서 가시화되지 않음.
 - 성 소수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집단 내부에서만 활동한다는 것임. 외국인이나 북한이탈 주민, 장애인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특성이 없으므로 성 소수자 스스로도 ‘숨길 수 있는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가시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스스로 숨기려는 경향이 있는 집단도 있지만 반대로 이를 성 소수자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퀴어문화축제 등 활동을 하는 집단도 있음.
- 성 소수자 활동은 대부분 젊은 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서울에서는 40~50대 성 소수자도 활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수가 현저히 적으며 대부분 활동을 하지 않음.
- 성 소수자를 반대하는 뚜렷한 집단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임.
 - 일부 보수적인 교회나 단체에서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등 뚜렷하게 배척되는 집단이 있다는 것이 성 소수자 이슈의 특징 중 하나임.
 - 뚜렷한 배척 집단이 있다 보니 인권 조례에 성 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이 논의되지 않거나 삭제되는 경우도 발생함.

7.2. 부산시민이 인식하는 성 소수자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해석)

- 성 소수자에 대한 수용도는 난민과 함께 낮은 편인데, 난민은 최근 새롭게 등장한 개념임을 고려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성 소수자가 얼마나 고려되지 않은 집단인지를 나타냄.
 - 성 소수자는 난민보다 더 오래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유입된 난민 문화와 수용도가 유사하게 나타남.
 - 부산은 서울에 비해 성 소수자에 대해 더 보수적이며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 부산에서는 부산대학교에서 성 소수자 동아리 만들어진 자체가 2012~13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늦은 편임.

- 성별·연령·접촉 경험에 따라 소수자에 대한 민감성이 다르게 나타나며, 성 소수자의 성별에 따라서도 나타나는 양상이 다름
 - 10~20대 여성은 성 소수자 접촉 경험이 남성보다 높으므로 여성이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성 소수자와 접촉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 소수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음.
 - 성 소수자 부모나 주변인 모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0~50대 여성이 성 소수자가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임.
 - 대중문화에서의 성 소수자는 90년대 이후 남성 위주로 나타나기 시작함. 여성 성 소수자가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어 성 소수자의 성별에 따라서도 가시화의 정도가 다름.
 -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차별이 남성보다 더 많아 성 소수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린 여성일수록 높다고 유추할 수 있음.

7.3. 부산의 성 소수자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정책 방향

- 성 소수자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청소년 성 소수자 상담실 구축, 인권교육 진행 등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함.
 - 청소년 성 소수자의 경우 자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년 성 소수자 상담실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성 소수자에 관해서는 인권윤리와 한 부분으로 일부 언급하긴 하지만, 성 평등과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이며 이분법적인 성이 아닌 다양한 성이 있음을 알리는 교육부터 시작해야 함.
 -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도는 해당 집단에 대해서 얼마나 교육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로도 볼 수 있음. 이주민에 대한 교육은 몇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어서 다른 집단에 비해 수용도가 높음.
-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성 소수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다양성 조례에도 성 소수자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어야 함.

- 문화다양성이 인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 소수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화다양성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음.

7.4. 부산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개선 방향

- 이주민의 형태에 따라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흥미로우며, 이주민 교육과 함께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함.
 -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젊은 여성과 나이 많은 남성이 결혼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며 이러한 결혼 형태를 사회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움.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족 구성원의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의 산물이라고 생각함.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불법체류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인식이 좋지 않다고 생각함.
 - 이주민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듯이 난민에 대해서도 교육하여 인식 개선이 필요함. 나라를 잃은 난민에 대한 공동체 의식보다 우리나라가 사는 것이 먼저라는 집단이기주의가 선행된 것임.
- 부산시에는 외지인의 유입이 많아 타 지역민에 대한 배척은 없으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라도 지역에 대한 배척은 심해지는 경향이 있음.
 - 부울경은 다양한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타 지역민에 대한 배척은 없음. 하지만 전라도민을 배척하는 사회 분위기는 아직 남아있는 듯함.
- 성별 불평등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은 이유는 가짜 뉴스, 성인지 감수성 부족 등 때문이라고 생각함.
 - 아직 사회에 성별 간 임금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별 간 월급이 동일하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함.
 - 직장을 다니는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차별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음. 유리천장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 학생 시절에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성 평등 교육은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젠더라는 것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으며,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채 평등하다는 것만 교육하다보니 여성에 대한 ‘혜택’으로 인지함.
 - 현재 성 평등 교육은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사이좋게 지내야한다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차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회에 성별에 의한 차별, 계층이라는 것

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함.

- 현재 존재하는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교육을 진행한다면, 이미 평등한 상황인데 여성에게 왜 혜택을 주는가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VI. 결론 및 제언

1.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개요
2.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론
3. 부산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언

VI 결론 및 제언

1.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개요

- 본 연구는 부산시민의 문화다양성 여건 현황과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로, 향후 부산시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됨.
 -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 및 자문회의 2회를 통해 부산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를 수립하였으며, 분류체계에 따른 인구구조 특징을 파악하고 설문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부산시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과 여건을 파악함.
- 부산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산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분야별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함.
 -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조사와 대면면접 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최소 1년 이상 부산에 거주한 15~79세 부산시민 중 성, 연령, 지역에 비례하게 표본을 추출함.
 - 분야별 전문가 인터뷰는 부산문화재단과 협의하여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장애인, 인종, 성소수자, 여성, 청년 등 6개 분야의 활동가/연구자를 선정함.

2.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론

- 부산시민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상황이 긍정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음.
 - 부산시민의 34%만이 ‘우리나라는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1점이었음.
 - 문화체육관광부(2017)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동일 문항에 대해 26%만이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평균점수는 2.9점이었음.
 - 이러한 결과는 부산 내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책이 다른 지역보다 잘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수치를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요 인식지표 중 하나인 소수집단 수용도(가족 및 동네 이웃) 측면에서는 전국 대비 성 소수자,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주민 등에 대한 수용도가 모두 낮음.

- 문화다양성이 인정받고 있는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소수집단 수용도가 낮다는 것은 문화다양성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소수집단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낮아 차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VI-1> 전국과 부산시의 조사 결과 비교 (5점척도 평균)

문항		전국	부산	차이 (전국-부산)
우리나라는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다		2.9	3.1	-0.2
우리나라는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2.4	2.5	-0.1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2.3	2.6	-0.3
우리나라는 다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2.6	3.1	-0.5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2.8	3.0	-0.2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인식	외국인 근로자	3.8	3.2	0.6
	결혼이주민	3.4	3.0	0.4
	성 소수자	4.0	3.5	0.5
	장애인	3.8	3.1	0.7
	북한이탈주민	3.8	3.0	0.8

□ 소수집단 중 가장 수용도가 낮은 집단은 ‘난민’과 ‘성소수자’이며, 외국인이라도 출신이나 경제적 상황 등 특성에 따라 인식이 다르게 나타남.

- 성 소수자에 비해 난민은 비교적 최근에 사회문제로 언급되었던 집단임. 성 소수자에 대한 수용도는 대두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뿌리 깊은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에 대한 수용도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높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낮음. 이를 통해 같은 외국인이라도 출신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사회갈등 현상 중 노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편이나 젊은 층에 대한 편견은 상대적으로 크며,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고, 타 지역에 대한 반감은 적지만 지방차별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음.

- ‘노인은 사회의 짐이다’는 전체 응답자의 10%만 동의하였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사회에 무관심하다’는 31%, ‘젊은 사람들은 윗세대보다 노력이 부족하다’ 25%로 노인 에 대한 혐오보다 청년층에 대한 편견이 2~3배는 크게 나타남.
- 관계자 인터뷰 결과, 부산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와 역할이 한정되어 있어 기득권을 가진 세대가 청년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는 곧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짐. 특히 여성 청년의 경우 세대뿐만 아니라 성별 불평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인해 활

동 범위가 더욱 제한적임.

-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나 동호회 활동을 할 때 동료/구성원의 성별은 상관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전국에서는 82%, 79%였으나, 부산은 73%, 75%에 그침.
 - 타 지역민에 대한 반감은 6~8% 내외로 낮지만, ‘중요한 혜택은 주로 수도권에 해당될 때가 많다’에 대한 동의는 68%, ‘알게 모르게 지방업체들은 차별받고 있다’는 63%로 매우 높음. 또한, 응답자의 82%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20대 여성이 소수집단이 받는 차별에 가장 민감하며, 소수집단 접촉 경험이 있거나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이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도가 높음.
- 다른 집단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 난민, 이주민의 자녀 등 대부분의 소수집단에 대해 20대 여성은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낮은 연령인 여성일수록 사회에서 받는 차별을 많이 겪고 있어서 소수집단이 받는 차별에 민감한 편이라고 해석함.
 - 소수집단과 접촉 경험이 있거나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
- 연령대·성별 집단 중 30대 남성이 다른 집단과는 성별 불평등, 노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편임.
- ‘남성이 여성보다 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일을 더 잘한다’는 문항과 ‘엄마가 직장에 다닌다면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항에 대해 동의한 비율이 여성보다 30대 남성이 최대 3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0대 남성은 다른 연령대·성별 집단보다 여성은 일이 아닌 보육과 육아를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비율이 높음.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부산에서 진행되는 성별 불평등에 대한 워크숍이나 강연에 대부분 여성만이 참석하며, 남성이 참여하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함. 여성은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남성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 성별 간 인식에 대한 격차는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함.
 - 부산에서는 노인혐오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노인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하지만 유일하게 여성보다 노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연령대가 30대 남성임.

3. 부산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언

□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과 이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부산시민은 우리나라가 문화다양성이 인정받는 사회라고 인식하는 비율 등 전반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해 전국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인식이 나 수용도는 전국에 비해서 낮음.
- 조사결과와 관계자 인터뷰를 종합한 결과, 부산시민들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여 소수집단이 차별받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부산시민이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의미를 이해하고, 문화다양성과 소수집단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10대에게는 이주민/다문화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소수집단과 여성 혐오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함.

- 현재 부산에서는 학교에서 이주민/다문화 교육이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학교 안내문을 학부모의 모국어로 작성해 보내는 ‘다봄 번역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련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음. 이러한 꾸준한 노력으로 인하여 10대의 결혼이주민이나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수용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음.
- 하지만 10대의 결혼이주민과 이주민의 자녀 외에 난민, 성소수자, 외국인근로자 등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따라서 다문화 이외에 소수집단에 대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또한, ‘인터넷 등에서 나와 다른 성별에 대한 혐오표현을 보면 솔직히 이해가 간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비율이 남성 중 10대 남성이 가장 높음.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은 현재 성평등 교육이 성차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부재한 채 성평등 교육을 진행했기 때문에 성평등을 위한 대책을 오히려 혜택으로 인식한다는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음. 따라서 성차별에 대한 진단과 이에 따른 성평등 대책을 함께 공유 및 논의할 기회 마련이 필요함.

□ 성인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소수집단 차별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전반적인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이 필요함.

- 10대는 학교 내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인은 학창시절 다문화를 비롯한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으며, 사회에서도 인식 개선 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임.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특징이 나타남. 대표적으로 20대 여성은 소수집단 차별에 민감하며, 20~30대 여성은 소수집단이나 사회갈등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반면, 30대 남성은 성별과 노인에 부정적이고 소수집단이나 사회갈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성, 연령 간 인식의 격차가 점차 커져 또 하나의 사회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 인식 증진을 위해 소수집단에 대한 이해와 접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소수집단 접촉 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소수집단별 차별 정도에 대한 인식이 높고, 소수집단을 가족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비율 역시 높음. 특히, 소수집단을 가족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비율은 접촉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최대 35.5% 차이가 남.
 - 소수집단과의 접촉 경험이 해당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상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이나 축제, 봉사활동 등을 시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소수집단과 시민들이 일상 범위 내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필요함.
 - 소수집단이 구분되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시민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도시재생, 문화도시 등 부산시의 발전 방향에 소수집단을 함께 고려하는 설계가 필요함.
- 이주 배경에 따라 차별의 정도가 달라지며, 거주한 기간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르므로 외국인의 다양한 특징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이 필요함.
- 부산시민은 외국인 중 유학생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높고 난민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낮음.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용도도 낮은 편임. 이주 배경에 따라 부산시민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다름.
 - 하지만 수용도가 가장 높은 유학생도 외국인 근로자가 될 수 있으며, 결혼이주여성도 일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은 외국인 근로자를 곧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온 근로자만을 인식하고 있음. 정책에서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사람만을 외국인 근로자라고 인식함.

- 또한, 이주민 대상 지원은 입국 초기에만 집중되어 5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지적됨. 더 나아가 이들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활동하는 기회와 공간이 없어 고립되기도 함.
 - 부산시민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 개선을 위한 소수집단과 일반 시민 간 접촉 경험의 확대가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프로그램, 사회 참여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더 나아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함.
- 장애인을 향한 차별 없는 차별, 진정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환경 구축이 필요함.
- 전체 응답자의 38%만이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수용도 역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편임.
 - 관계자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수치가 실제로 차별이 없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장애인이 지원받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함.
 - 장애인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차별받았을 때 장애인이 나서서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조용히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어 두드러지지 않음. 또한,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이 노인 등 교통약자로도 확대 시행되면서 장애인의 이동성은 위축되었으며, 영화관 내 장애인석의 경우 맨 앞이나 맨 뒷자리에 위치하거나 계단으로 되어있어 사실상 접근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많음.
 -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은 수혜자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시설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향유 할 권리와 예술 창작에 대한 지원 등 다차원적인 배리어프리 환경이 구축되어야 함.
- 난민보다 오래된 이슈이지만 난민과 비슷한 수준의 수용도를 보이는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인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관계자 인터뷰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이슈가 난민보다 더 오래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수용도와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조사결과는 그동안 성소수자가 사회에서 고려되지 않은 집단임을 나타낸다는 해석을 제시함.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 난민은 2018년부터 이슈화되기 시작함.)
 - 성소수자 이슈는 뚜렷하게 반대하는 집단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반대 집단으

로 인하여 인권 조례 등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면 위로 올라온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만큼 차별에 노출된 시간 역시 길었으며,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 차별과 괴롭힘으로 인하여 77.4%가 자살을 생각하고, 47.4%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음(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 따라서 성소수자의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인식 개선 활동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정서적인 지원 등이 제공되어야 함.

□ 무의식 속에 퍼져있는 부산의 가부장성을 수면 위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엄마가 직장에 다닌다면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항에 여성과 남성 모두 고령으로 갈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이는 곧 보육과 육아는 여성의 역할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이 고령으로 갈수록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함.
- 가부장성은 세대 간 갈등에도 영향을 미침. 젊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사회에 무관심하며, 윗세대보다 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 역시 고령으로 갈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짐.
- 관계자 인터뷰에서는 부산의 가부장성은 여성만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세대 간 갈등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제기함. 가부장성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함께 청년의 사회진출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세대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임.
- 가부장성은 생활 속에 녹아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가부장성은 세대 간 갈등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각 세대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산시민이 가장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회갈등인 ‘수도권과 지방차별’ 인식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만의 기준을 수립하여 제반 환경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함.

-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생활 인프라임. 인구당 문화기반시설 수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며, 문화예술 활동 건수 역시 차이가 남.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에 따르면, 2017년 부산시의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 활동 건수는 서울의 60% 수준에 그침.

<표 VI-2>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 활동 건수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

지역(인구수) 단위:천명	시각예술	공연예술						계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소계	
전국	28.2	3.1	20.4	12.6	2.6	5.0	43.7	71.9
서울(9,857)	62.9	6.3	36.2	16.9	5.1	6.6	71.2	134.1
부산(3,471)	26.3	2.0	27.7	14.8	3.7	4.6	52.8	79.1

-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수도권과 지방차별 인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예술 활동의 수를 늘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이와 동시에 수도권과의 수치 비교가 아닌 부산만의 기준을 설정해야 함.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 공공시설 수, 노후 연수 등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⁸⁾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제반 환경 구축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함.

8) 한국경제(2018.12.21.). "서울·지방, 생활 인프라 최대 50배 격차... '삶의 질'에 악영향".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122125601>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처: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주 소: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감만동)

홈페이지: www.bscf.or.kr

* 발행처 승인 없이 본 보고서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하며, 내용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